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유형별 위기 진단과 사례연구

최정은 · 김보영 · 김윤영 · 이인수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유형별 위기 진단과 사례 연구

연구책임자: 최 정 은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진: 김 보 영 교수(영남대학교)

김 윤 영 교수(전북대학교)

이 인 수 연구원

• 머 • 리 • 말 •

복지 사각지대와 관련된 비극적인 사망사고가 언론에 알려지고 나서야 정부와 지자체가 사전에 감지하지 못했던 다양한 위험 요인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 사망사건 이후 출생 미신고 자녀의 존재가 알려지기도 하고, 전입신고가 안 된 상황을 사후에 인지하는 사건도 발생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최근 2년간 언론보도를 통해 크게 알려진 복지 사각지대 사망사건만 10여 건에 이르고 있다. 왜 이 같은 비극이 반복되는지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의 연구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들이 다수의 위기 정보를 가지고 있더라도 자격 기준이 맞지 않아 수급권을 부여받지 못하는 제약에 막혀있으며, 최근 1년 동안 발굴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반복적으로 발굴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통해 발굴되는 대상자가 적지 않지만, 시간에 따른 특성을 진단해 본 연구는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복지 사각지대 빅데이터와 연계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스템 안과 밖, 복지 사각지대의 경계를 넘나드는 다양한 대상의 특성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성에서 제안되었다.

이를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발굴되는 대상자를 시계열 패널데이터로 재구성하여 유형별 위기 특성을 진단하고, 그 특성도 파악하였다. 또한, 전 국민 복지패널(2015~2021년)을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의 위기 정보와 유사한 수준에서 물질적인 어려움을 경험한 제도 밖 대상자의 특성도 분석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계속 발생하는 복지 사각지대 사망사건을 이해하기 위해 지난 5년간(2018~2022년) 복지 사각지대 사망사건 기사를 추출하여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유형화해 보았다. 이를

토대로 위기 집단, 발굴모형 정교화, 공적 돌봄지원 확대, 예방 차원에서 주목할 위기 정보, 지자체 활용 등 5가지 영역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최정은 부연구위원이 책임을 담당하고 영남대학교 김보영 교수, 전북대학교 김윤영 교수, 그리고 연구센터의 이인수 연구원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수행하였다. 연구 과정에서 논의에 참여하고 유익한 의견을 제시해 준 자문위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또한, 데이터 추출과 연구과정에서 복지안전사업부의 협조에 치하의 뜻을 표한다.

본 보고서의 내용이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안과 밖, 복지 사각지대 경계를 넘나드는 대상의 특성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본 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힌다.

2023년 12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 직무대행

박 금 렬

• 목 • 차 •

요 약 • vi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5
제3절 연구 구성과 내용	7

제2장 이론적 논의 • 9

제1절 국내외 선행연구	11
제2절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개선과 과제	16
제3절 소결	20

제3장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대상자 위기 진단 • 21

제1절 발굴대상의 시계열 특성	23
제2절 발굴대상의 공적지원 선정 영향요인 분석	35
제3절 중장 발굴과 지자체 발굴 공적지원 현황	61
제4절 소결	76

제4장 복지패널을 활용한 제도 밖 물질적 박탈경험자 위기 진단 · 77

제1절 연구 개요	79
제2절 물질적 박탈경험 대상의 기초분석	83
제3절 박탈경험 집단별 정신건강 영향요인 분석	97
제4절 소결	102

제5장 복지 사각지대 사망사건 언론보도 사례 분석 · 103

제1절 연구 개요	105
제2절 복지 사각지대 사망사건 유형화와 위기 진단	108
제3절 소결	132

제6장 결론 및 정책대응 제언 · 135

제1절 결론	137
제2절 복지 사각지대 위기 대상별 정책대응 제언	140

참고문헌 · 142

● 표 · 목 · 차 ●

〈표 2-1〉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연계정보 현황(2023.4. 기준)	18
〈표 3-1〉 발굴대상자 반복 발굴에 따른 위기 정보의 그룹 간 차이검정	27
〈표 3-2〉 발굴대상자 반복 발굴에 따른 공적지원 현황	30
〈표 3-3〉 모델1: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 수급 대상자 기초분석 결과	35
〈표 3-4〉 모델1: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발굴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39
〈표 3-5〉 모델2: 생계급여 수급 대상자 기초분석 결과	42
〈표 3-6〉 모델2: 생계급여 대상자 발굴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45
〈표 3-7〉 모델3: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 기초분석 결과	48
〈표 3-8〉 모델3: 주거급여 대상자 발굴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51
〈표 3-9〉 모델4: 긴급복지 수급 대상자 기초분석 결과	54
〈표 3-10〉 모델4: 긴급복지 대상자 발굴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57
〈표 3-11〉 공적지원(중앙 발굴/지자체 발굴) 대상자의 위기 정보별 현황	71
〈표 3-12〉 분석 결과에 따른 시사점 도출	74
〈표 4-1〉 변수들의 구성	80
〈표 4-2〉 한국복지패널의 박탈경험 지표	82
〈표 4-3〉 박탈경험 횟수에 따른 기술분석	83
〈표 4-4〉 박탈경험 3가지 카테고리에 따른 기술분석	84
〈표 4-5〉 박탈경험에 따른 생계급여 수혜 여부	86
〈표 4-6〉 박탈경험에 따른 의료급여 수혜 여부	87
〈표 4-7〉 박탈경험에 따른 주거급여 수혜 여부	89
〈표 4-8〉 균등화소득에 따른 가구구분(중위소득 60% 기준)	90
〈표 4-9〉 박탈경험에 따른 만성질환 유무	92
〈표 4-10〉 박탈경험에 따른 근로역량 유무	93
〈표 4-11〉 박탈경험에 따른 만족도 차이(5점 만점 전체 평균)	95
〈표 4-12〉 박탈경험 집단에 따른 정신건강(전체 평균)	96
〈표 4-13〉 박탈경험 집단별 정신건강 영향요인 패널분석 결과	98

〈표 5-1〉 언론보도 복지 사각지대 사건 및 기사 추출	107
〈표 5-2〉 위기유형별 복지 사각지대 사망사건 재구성(요약)	109
〈표 5-3〉 복지 사각지대 사망사건 요소별 구분	127

• 그림 • 목 • 차 •

[그림 1-1] 본 연구의 구성	8
[그림 2-1]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관련 연구 경과	17
[그림 3-1] 발굴대상자의 반복 발굴 현황(수)	24
[그림 3-2] 발굴대상자의 반복 발굴 현황(비중)	24
[그림 3-3] 반복 발굴에 따른 위기 정보 중첩성 현황	25
[그림 3-4] 발굴대상자 반복 발굴에 따른 위기 정보 현황 비교	29
[그림 3-5] 발굴대상자 반복 발굴에 따른 공적지원 현황	31
[그림 3-6] 전체 발굴대상자의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 지원별 현황	32
[그림 3-7] 1회 발굴대상자의 기초맞춤형 지원별 현황	33
[그림 3-8] 2회 이상 발굴대상자의 기초맞춤형 지원별 현황	34
[그림 3-9] 중앙/지자체 발굴 및 공적지원 현황	62
[그림 3-10] 성별에 따른 공적지원 현황	63
[그림 3-11] 중앙/지자체 발굴 연령별 공적지원 현황	64
[그림 3-12] 지역규모별 공적지원 현황	65
[그림 3-13] 광역시도별 공적지원 현황	66
[그림 3-14] 중앙 발굴(전체 공적지원=100) 지역규모별 연령대 현황	67
[그림 3-15] 지자체 발굴(전체 공적지원=100) 지역규모별 연령대 현황	68
[그림 3-16] 중앙 발굴(지역규모별 공적지원=100) 연령대 현황	69
[그림 3-17] 지자체 발굴(지역규모별 공적지원=100) 연령대 현황	69
[그림 3-18] 중앙 발굴 공적지원 대상자의 연계 정보별 현황	72
[그림 3-19] 지자체 발굴 공적지원 대상자의 연계 정보별 현황	73
[그림 3-20] 대상자별 공적지원 세부 현황 추이	74

• 요 약 •

1. 서론

- 복지 사각지대와 관련된 비극적인 사망사고가 언론에 알려지고 나서야 정부와 지자체가 사전에 감지하지 못했던 다양한 위험 요인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
- 2023년 전주 40대 중년여성이 숨진 사망사건이 보도된 후에 출생 미신고 아들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기도 했으며, 2022년 ‘수원시 세 모녀’ 사망사건의 경우 전입신고가 안 된 상황을 사후에 인지하게 되었음.
-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대책이 모색되어 왔으며, 빅데이터 기반의 발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2년간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복지 사각지대 사망사건만 10여 건에 이름.
- 이 같은 비극이 왜 반복되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 최근에 수행한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대상자 실태분석 결과(최정은 외, 2022)를 보면, 다수의 위기 정보를 가지고 있더라도 자격 기준이 맞지 않아 수급권을 부여받지 못하는 제도적 제약이 크며, 최근 1년 동안 발굴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반복적으로 발굴되고 있었음.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통해 발굴되는 대상자가 적지 않지만, 시간에 따른 특성을 진단해 본 연구는 부족함.
- 또한,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 빅데이터와 연계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스템 안과 밖, 복지 사각지대의 경계를 넘나드는 다양한 대상의 특성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접근은 미흡하였음.

-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 방향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상자를 유형화하여 그 위기 특성을 진단하고, 시스템 위기 정보와 유사하게 구성된 전 국민 복지패널의 제도 밖 물질적 박탈 경험 대상자의 특성을 추가로 파악하고자 하였음. 이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 사망사건 사례와 유형화 분석을 종합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2. 이론적 논의

- 복지 사각지대 집단 내 다양성이 커지는 가운데, Townsend(1979)와 Gordon et al.(2000)은 다차원적인 사회적 위험을 인식하고, 이를 미시와 거시적 관점에서 정책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폭넓은 이론을 제시해 주고 있음.
- 이 두 이론은 빈곤의 역동성과 빈곤의 생애주기 개념을 제시해 향후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를 발견하고 대응하는 데 시사하는 바도 큼.
- 기존 연구의 성과가 크지만, 상대적으로 당사자를 중심에 두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인의 요인과 제도의 요인을 복합적으로 접근한 논의는 부족하였음.
- 그럼에도 취약 집단을 유형화하는 양적 및 질적 연구를 확인할 수 있었음. 대표적으로 복지 사각지대 생계형 사건·사고 사례 유형화, 사회적 배제를 기준으로 중장년 1인 가구 유형화 등 새로운 접근이 이뤄져, 집단 내 다양성과 이질성을 확인하는 틀로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최근 발생한 복지 사각지대 사건 등을 통해 취약성을 확인할 수 있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위기 정보로 반복 발굴되는 사례도 있었으며, 그동안

정책적 관심이 부족했던 독거 중장년층 등의 실태와 지원에 주목하는 흐름도 확인할 수 있었음.

- 전국 단위에서 복지 사각지대와 같은 위기 집단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 어떤 특성을 보이고, 개인과 가구의 특성을 반영하는 유형화 연구는 부족하였으므로, 이 방향에서 연구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큰 상황임. 본 연구의 자료는 전국 규모의 빅데이터로 유형화 방법론을 적용하기 쉽지 않은 측면도 존재함. 따라서 각 자료 범주 안에서 대상자의 특성을 토대로 유형을 찾아보는 접근을 해보려고 함. 각기 다른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관통하는 주요 기준 중 하나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특성을 분석하는 데 있으며, 다른 하나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라는 차원에서 제도 안과 밖의 경계선상에 있는 대상자 특성을 분석하여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데 의의가 높다고 할 수 있음.

3.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대상자 위기 진단

-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통해 발굴되는 대상자를 시계열 패널데이터로 재구성하여 유형화별 위기 특성을 진단하고자 하였음.
- 먼저, 2020~2022년간 18회차(연간 6회차) 데이터를 패널로 재가공하여 발굴대상자의 반복 발굴유형을 발견할 수 있었음. 그 규모와 위기 정보의 중첩성도 확인할 수 있었음. 본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발굴대상자의 절반 정도는 1회 발굴되었지만, 나머지 절반은 2회에서 최대 14회까지 반복적으로 발굴되고 있었음. 또한, 1회 발굴대상보다 2회 이상 발굴대상일수록 위기 요인의 중첩성이 높았음. 공적지원 중에서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를 중심으로 개별 급여별 차이를 확인해보면, 반복 발굴 위기 대상인 경우 1회 발굴 집단과 비교해 교육을 제외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에 대한 필요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주거급여에서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난 사실도 알 수 있었음.

- 추가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 대상 선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발굴 정보, 가구 및 세대 구성, 발굴모형, 반복 발굴 여부, 인구요인(성별, 연령대, 지역규모) 등의 유의미성을 확인해 본 결과, 양(+)의 유의미한 15개 요인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한부모세대와 장애인세대의 취약성, 지자체 발굴의 효과 등을 알 수 있었음.

■ 2022년에 발굴대상데이터를 통해 중앙 발굴과 지자체 발굴 간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음. 특히, 지자체 발굴을 통한 공적지원 비중이 더 높음을 확인하였으며, 성별, 연령대별, 지역규모별, 지역규모별 연령대, 위기 정보별 공적지원율, 세부지원사업현황 등에서 차이를 알 수 있었음. 2022년에 처음으로 시행된 지자체 발굴 성과를 토대로 향후 지역 내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중요해 보임.

4. 복지패널을 활용한 제도 밖 물질적 박탈경험자 위기 진단

■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의 위기 정보와 연계하여 전 국민 수준에서 이와 유사한 어려움에 놓일 수 있는 대상자의 시계열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함.

■ 복지패널은 매년 전기, 난방, 음식, 주거 등 10개 영역에 걸쳐 겪을 수 있는 물질적인 어려움을 조사해 왔으며, 이는 물질적인 ‘박탈경험’으로 칭할 수 있음.

- 박탈경험이란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자원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의미하고 있음(Townsend, 1987). 특히, 이들 중 물질적인 박탈을 경험하더라도 제도 밖에 있는 대상이라면 복지 사각지대의 잠재적인 위기 대상이라 할 수 있음.

■ 사회 내에서 다양한 박탈경험은 개인의 생활 만족도, 정신건강, 그리고 사회적 지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박탈경험의 빈도와 그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음.

○ 이를 위해 2015년부터 2021년까지의 복지패널데이터를 활용. 분석 결과, 박탈경험의 빈도에 따라 의료급여와 주거급여 수혜 비율, 균등화 소득에 따른 가구 구분, 그리고 만성질환의 비율, 자살생각의 비율, 우울점수 등의 사회적 지표와 정신건강 지표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특히 박탈경험의 빈도가 증가할수록 의료급여 수혜는 줄었으나, 주거급여 수혜 비율은 증가하였으며, 저소득층의 비율도 상승하는 경향을 보임. 또한, 박탈경험의 빈도가 높을수록 만성질환의 비율과 자살생각의 비율, 우울점수가 상승하는 경향이 확인됨.

■ 이러한 연구 결과는 박탈경험의 빈도가 사회적 지표와 정신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며, 박탈경험의 빈도와 종류, 그리고 정신건강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함. 본 연구를 통해 박탈경험이 빈번한 사람들에게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의 필요성을 확인하였으며,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박탈경험자들이 복지 제도의 주요 대상이 되어야 하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었음.

5. 복지 사각지대 사망사건 언론보도 사례 분석

■ 계속 발생하는 복지 사각지대 사망사건을 이해하기 위하여 전국 주요 일간지와 방송사, 지역 일간지 등을 대상으로 지난 5년간(2018~2022년) 복지 사각지대 사망사건 기사를 추출하여 총 35개 사건을 선정하여 분석함.

○ 사망사건에 이르게 된 핵심적인 위기를 중심으로 독박돌봄, 한부모가구, 가계몰락, 과다채무, 만성빈곤, 독거가구, 보호종료(중단)청년 등 7가지 유형

으로 구분해 볼 수 있었음. 발생 연도, 발견(신고)자, 사망원인, 발굴가능성, 급여접근성, 발굴이 가능한 기관, 정신건강 문제 여부, 고독사 여부 등의 요소에 따라 구분해 보았음.

■ 이러한 분석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복지 사각지대 대책의 한계임. 발굴 가능성으로 구분했을 때 소득·자산 기준 등으로 발굴이 되었어도 기초생활 보장을 받기 어려운 경우, 이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 등 발굴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절반이 넘었음. 정부의 발굴강화 대책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사건은 미등록자나 발굴대상과 미접촉한 경우인 5건에 불과했음.

■ 복지 사각지대의 상당수는 복지급여를 ‘몰라서 못 받는’, ‘무지’의 사각지대는 아니었음. 직접 주민센터 등을 찾아 복지급여를 신청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12건이었음. 이는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스스로 복지급여를 알아보고 신청할 수 있었지만, 어떠한 이유로 그러지 않았거나 신청했지만 탈락한 경우들이었음.

■ 이렇게 대규모 발굴 이전에 공공·복지기관에서 포착된 대상부터라도 더욱 능동적으로 대응했다면 위기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았음.

○ 가장 대표적인 기관은 주민센터였는데, 이는 발굴대책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줌. 물론 이 경우에도 미등록자나 발굴대상 미접촉과 같이 발굴을 더욱 능동적으로 했다면 대응이 가능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주민센터에 급여신청이나 상담을 위해 방문했거나 이미 수급자였던 경우들이었음.

■ 또 하나 이번 분석 결과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은 복지 사각지대 대응에 있어서 돌봄의 중요성임.

- 위기 유형별로 구분했던 것과 같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독박돌봄 유형이었음. 이러한 점은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책이나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과 같이 돌봄 문제에 대한 대응이 복지 사각지대의 상당 부분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줌.

■ 다음은 금융채무에 대한 대응임. 현재 금융연체 정보도 위기 정보로 수집되고 있지만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연체가 있는 경우 빈곤한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기준에서 제외하고 있음. 하지만 특히 가계물락과 같이 급작스러운 위기상황의 경우 기존의 생활수준이나 사업실패 등으로 인해서 대규모 부채가 발생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나타남.

- 실제 위기상황에서 개인이나 가족 수준에서는 공적급여보다는 카드나 금융기관 대출이 우선적인 찾을 수 있는 대응인 것이 사실임. 오히려 단전, 단수, 단가스 등 요금체납은 이미 위기가 심화된 이후에 최종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지표로 이러한 요금체납 이전에 이미 사망하는 경우들도 볼 수 있음. 그래서 발굴체계가 예방에 목적을 두었다면, 위기의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금융부채에 더욱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음.

6. 결론 및 정책대응 제언

■ 본 연구는 복지 사각지대 시스템 대상 분석, 전국 복지패널을 통한 제도 밖 물질적 박탈경험 대상 분석, 복지 사각지대 사망사건 사례 분석 등 전국 단위의 양적 및 질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 5가지 영역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이는 크게 1) 위기 집단, 2) 발굴모형 정교화, 3) 공적 돌봄지원 확대, 4) 예방 차원에서 주목할 위기 정보, 5) 지자체 활용 등으로 구분하여 다음을 제안하고자 함.

■ 첫째,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복지 사각지대 위기 대상은 반복 발굴 대상, 주거급여를 받지만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대상, 중소대도시 중장년 남성 1인 가구 등으로,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 복지사각지대 시스템을 통해 반복적으로 발굴되는 집단이 전체 발굴대상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이들의 위기 정보 중첩성의 정도가 심하며, 공적 지원 등에 대한 필요도가 높음을 확인하였음. 다음으로 복지패널의 박탈경험 대상 분석을 통해 박탈경험 대상 중 생계급여 미수급자는 주거급여를 받더라도 우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둘째, 복지사각지대 시스템 중앙 발굴모형 중 시계열 모형이 있었지만, 반복 발굴대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도 확인됨. 지난 3년간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분석한 결과 맞춤형 기초생활보장급여 선정 효과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시계열 모형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셋째, 복지 사각지대 대응에서 돌봄의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는 만큼, 지역 사회 통합돌봄 등 돌봄문제 해결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음. 복지 사각지대 사망사건 언론보도 사례 중 독박돌봄 유형이 두드러지지만, 정작 공적 돌봄을 이용한 경우가 단 1건에 불과함. 현재 우리나라의 돌봄 체계가 얼마나 돌봄위기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접근성이 부족한지를 말해줌.

■ 넷째, 시스템 발굴대상 분석을 통해 양(+)의 유의미한 영향을 보여주고 승산비가 높았던 위기 정보(월세금액기준이하가구여부, 고용보험개별연장급여대상여부, 자살예방관리대상자여부, 기초생활긴급지원수급탈락여부 등)와 금융부채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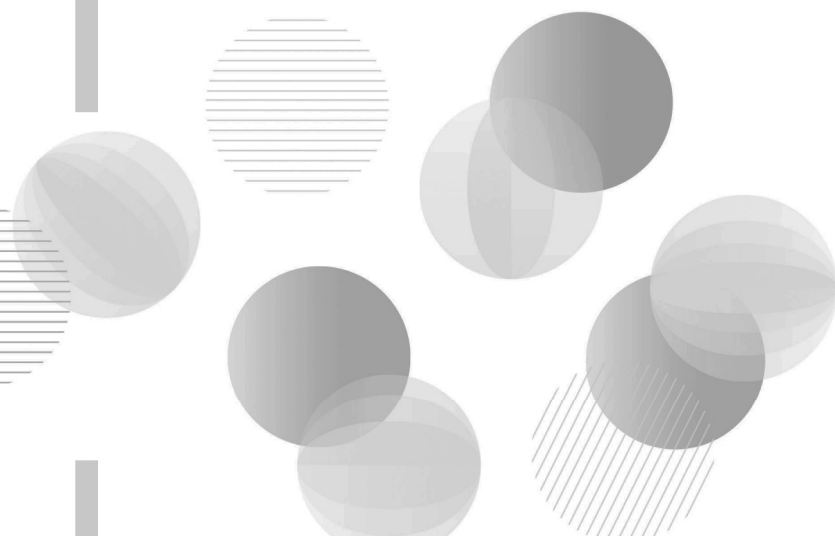
■ 마지막으로, 복지 사각지대 예방 차원에서 공공보건소나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의 역할 강화, 박탈지수를 초기상담에 활용하는 등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제3절 연구 구성과 내용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복지 사각지대와 관련된 비극적인 사망사고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 정부와 지자체가 사전에 감지하지 못했던 다양한 위험에 취약계층이 노출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최근 전주에서 40대 여성이 출생 미신고 아들을 남겨두고 숨진 사망사건(2023.9.)은 복지사각지대 시스템을 통해 위기 대상으로 반복 발굴되어 상담받은 이력은 있었지만, 투병이나 자녀의 존재 여부는 사망한 이후 밝혀지기도 했다. 또 다른 안타까운 비극이었던 ‘수원시 세 모녀’ 사망사건(2022.8.)은 건강보험료 체납 등 위기 요인으로 시스템을 통해 발견되었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연락이 안 된 상황에서 투병과 생활고로 힘들어했음을 사후에 알게 되었다.

이처럼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는 이른바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공론화되면서 정부는 그동안 다양한 대책을 모색해 왔다. 특히 더 이상 복지 사각지대를 방치하지 않도록 빅데이터 기반 발굴시스템을 2015년부터 구축하고, 위기징후 정보(이하 위기 정보)를 입수·분석하여 조사대상자를 선별하고 지자체에 통보하여 직접 조사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시스템만으로 사각지대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최근 2년간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건만 해도 ‘창신동 모자사건(2022.4.)’에서 최근 ‘전주 모자사건(2023.9.)’에 이르기까지 10여 건이 넘는다.

이 같은 비극이 왜 반복되는 것인지 종합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 가운데 최근에 수행한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이하 복지사각지대 시스템) 대상자 실태분석과 업무담당자 인터뷰(최정은 외, 2022)를 통해 확인한 사실은 업무상 2~3개월 내 발굴대상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완료하는 작업이 반복되고 있으며, 다수의 위기 정보를 가지고 있더라도 자격 기준이 맞지 않아 수급권을 부여

하지 못하는 제도적 제약이 크다는 점이다. 2021년 복지사각지대 시스템의 발굴 대상자를 살펴보더라도, 1년 전체 147만 명 중 절반은 첫 발굴대상이지만, 나머지 대상은 여러 개의 위기 정보를 통해 반복적으로 발굴되고 있었다.

이처럼 복지사각지대 시스템 위기 정보로 발굴되는 대상자가 적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이들을 모니터링하고 시간에 따른 특성을 진단해 본 연구는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계열 분석을 통해 위기의 변화와 특성에 주안을 두고 복지사각지대 시스템 개선과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며, 당사자의 경험이 담긴 사례 연구를 통해 예방적인 대응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향후 본 연구의 결과는 복지사각지대의 경계 선상을 오가며 제도 안과 밖에 머무는 대상의 특성을 파악한 후 종합적인 대응안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의 경계를 넘나드는 다양한 대상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대상자의 주요 위기 진단, 복지패널을 활용하여 제도 밖 물질적 박탈경험 대상자의 특성 파악, 복지 사각지대 사망사건 사례 분석을 통한 유형화 등을 고찰한 후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 범위는 크게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대상자 분석, 복지패널 박탈경험 대상 분석, 복지 사각지대 사망사건 언론보도 사례 분석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대상자 분석은 시계열 자료로 재구성한 발굴대상의 특성 분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상자 원자료는 2020년에서 2022년까지 패널데이터(연도별 6회, 3년 총 18회차)로 재구성하여 발굴대상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2022년 데이터를 통해 중앙 발굴과 지자체 발굴대상자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같은 분석을 통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복지 사각지대 제도 밖에 있는 국민 중 위기 집단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복지패널 자료(2015~2021년)를 활용하여 물질적 박탈과 관련한 10개 문항을 통해 대상자의 특성을 분석하고, 패널분석을 통해 집단별 영향요인을 추가로 밝혔다.

마지막으로 복지 사각지대 사망사고 언론보도 기사를 빅카인즈 검색과 별도의 기사 검색을 통해 35건과 해당 기사 450건을 토대로 유형화하였다. 언론보도는 전국 5개 주요일간지와 방송사, 28개 지역일간지를 통해 다차원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내용분석도 수행한다.

본 연구는 먼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부가 가장 주력하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통해 발굴대상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발굴시스템 대응만으로 부족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큰 상황에서 제도권 밖에 존재하는 잠재적인 위기가구를 파악하기 위해 복지패널의 박탈지수를 활용하여 그

유형과 특성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망 사건이 증가하는 가운데 극단적 선택 이전에 당사자들이 처한 어려움과 과정 등을 토대로 예방적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3절 연구 구성과 내용

본 연구는 크게 이론적 논의,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사례 연구를 통해 개선안을 도출하는 순서로 구성되었다.

먼저, 이론적 논의에서는 생애주기 과정에서 빈곤과 상황 변화에 주목하여 위기기구를 추정하는 논의와 실증 연구 등을 종합하여 복지 사각지대 대상 유형화와 사례 분석에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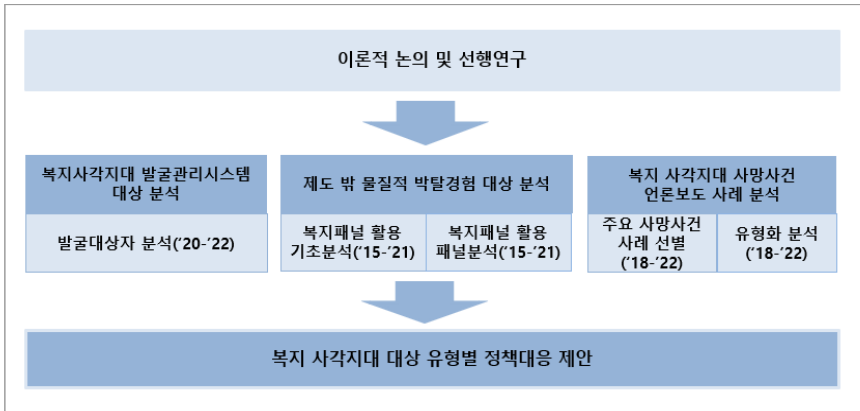
이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통해 빈번하게 드나드는 대상자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2020년에서 2022년까지 18회차 발굴대상을 패널데이터로 재구성하여 발굴의 횟수, 위기 정보의 중첩성, 공적지원,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대상 선정에 미치는 영향요인 등을 다차원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2022년 발굴대상자 자료를 분석하여 중앙 발굴과 새롭게 시작한 지자체 발굴의 성과와 특성을 성별, 연령, 지역규모, 위기 요인 등으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제도 밖에 존재하는 복지 사각지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복지패널 2015~2021년 자료를 활용하여 박탈경험 대상자의 특성과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복지 사각지대 사망사고 언론보도 35건의 사례를 통해 극단적인 선택 이전에 당사자의 상황, 발굴 여부, 공적지원 경험과 접근 등 요인을 고려하여 유형화와 내용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렇게 수행한 연구를 통해 기존에 아우르지 못한 복지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그림 1-11 참고).

[그림 1-1] 본 연구의 구성



※ 자료 : 저자 정리

제2장

이론적 논의

제1절 국내외 선행연구

제2절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개선과 과제

제3절 소결



제2장 이론적 논의

제1절 국내외 선행연구

최근에 보도된 큰 사건들 이외에도 알려지지 않은 취약계층의 위기 유형은 더 다양할 수 있다. 실제로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를 경험하는 취약계층이 여러 경로를 통해 보내는 사회적 위험신호를 정부와 지자체가 앞으로 얼마나 민감하게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인가는 중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

복지 사각지대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광범위해지는 가운데 Townsend(1979)와 Gordon et al.(2000)은 다차원적인 사회적 위험을 인식하고, 이를 미시와 거시적 관점에서 정책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폭넓은 이론을 제시해 주고 있다. Townsend(1979)는 오래전부터 절대적 빈곤 개념을 넘어서 빈곤의 역동성을 반영할 수 있는 ‘상대적 박탈(relative deprivation)’을 빈곤의 새 개념으로 발전시켜 왔다. 기존의 절대 빈곤은 최소한의 욕구 기준에 맞춰 그 이하를 빈곤으로 보았으나, Townsend(1979)의 빈곤은 지역이나 개인이 처한 환경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한 상황 등에서 다양한 상대적 박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개념에 기초하여 후학들은 상대적 빈곤선을 측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유용한 ‘박탈지수(deprivation index)’도 도출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영역은 국가의 빈곤수준이나 임금, 직업계층 등 경제적 여건이 될 수도 있고, 의식주 수준, 건강상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다.

이에 한발 더 나아가 Gordon et al.(2000)은 경제적 빈곤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두 가지 지표와 함께 시간을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하여 ‘빈곤의 생애주기(life cycle of poverty)’를 제시하였다. 이는 취약계층이 만성적으로 빈곤한 상태에 머물 수도 있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빈곤의 경계선상을 넘나들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취약한 상태에서 계속 만성적인 빈곤에 머무는 사람도 있지만,

비빈곤 상황에서 개인이나 가구 구성원이 실직하여 소득이 감소하면 시차를 두고 생활수준에 영향을 줘 빈곤선 아래로 진입하기도 하고, 또 시간이 흐르면서 재취업하는 경우 생활수준이 개선되어 빈곤을 탈출하는 주기를 반복하는 ‘빈곤의 역동성’에 주목하고 있다.

위의 이론적 논의에 따르면, 복지 사각지대 대상을 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관점으로 의미가 크다. 이에 기초하여 복지 사각지대 대상이 누구이고 또 어느 정도이며, 원인이 무엇이고,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에 대해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기존의 연구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 성과를 쌓아왔다. 복지 사각지대 이슈를 다룬 국내 연구는 저소득층과 사회보장 비수급에 주안을 두어 개념화하고, 그 규모를 파악해 왔다(구인회·백학영, 2008; 김태완·박지혜, 2009; 김태완 외, 2020). 최근에는 저출산, 불안정 고용, 코로나19 감염병, 돌봄 공백 등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대다수 국민은 복합적인 위험에 노출되는 헛수나 계기가 많아지면서 현재 혹은 최근래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기준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가구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복지 사각지대는 경제적 여건, 주거환경, 사회적 자본, 고립 등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까지 포괄하는 확장적 개념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김은하·한경훈, 2018)는 주장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 연구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대상의 특성을 개인이나 가구, 제도 차원에서 논의해 왔다. 기존 연구마다 영향 요인이 다른 하지만, 인구사회 및 경제적 조건에 의하면 낮은 소득, 불완전 경제활동, 낮은 학력, 여성, 고령층, 장애인가구 등이 취약하며(강동욱, 2010), 최근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1인 가구 등의 취약성(구인회·백학영, 2008; 김태완·박지혜, 2009; 고숙자 외, 2020)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동안 공공부조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자격에 부적합하거나, 사회보장 혜택을 받더라도 그 수준이 불충분하여 여전히 어려운 사례 등도 파악되었다(윤상용·김태완, 2009; 이동영, 2019).

이처럼 기존의 연구는 확인해 본 결과는 복지 사각지대 대상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규모도 수준도 달라져 하나의 집단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관련한 사망사건의 언론보도를 통해 보더라도 복지 사각지대 집단 내 이질성이

크다는 점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를 중심에 두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인이나 가구, 사회환경, 제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접근한 논의는 부족하였다. 그럼에도 최근 유의미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정기·김윤영(2016)은 기초생활보장제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당사자 12명을 직접 면접조사하여, 비수급 빈곤층의 생존 과정을 통해 개인 상황, 수급권을 가로막는 장벽, 빈약한 사회적 자본, 심리적 위축, 경제력 악화, 생존권 배제, 불공평한 세상 등 14개 범주를 도출하여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데 의의가 있다. 즉, 개인 등에 초점을 둔 미시적 관점과 제도 차원의 거시적 관점의 상호성 이론의 접근으로 의미가 크다. 나아가 새롭게 적용한 근거이론은 위기 상황에 놓인 당사자의 경험을 토대로 인과적 조건-중심현상-맥락과 중재적 조건을 토대로 전략과 결과 등을 도출하여 향후 복지 사각지대 대상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박탈 수준을 파악해 볼 수 있는 관점으로도 의미가 있다.

새로운 관점에서 한발 더 나아가 복지 사각지대 집단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며 유형화를 시도한 연구도 주목하게 된다. 이 가운데 이현주 외(2013)는 2011년에서 13년까지 3년간 언론보도 생계형 사건·사고 167건을 분석하여 당사자별로 특성을 파악하였다. 근로능력자인 경우는 실업이나 사업실패, 생계비 문제가 주요 원인으로 파악이 되었으며, 노인은 의료비와 돌봄 및 간병, 장애인은 생계비와 돌봄 및 간병 등이 핵심적인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심층사례 분석을 통해서도 생활고와 근로여건 취약, 지원의 불충분성이 전반적인 사유로 확인되었으며, 노인/장애인/질환자 가족의 경우는 돌봄 부담이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고, 관계 악화와 고립으로 인해 위기감이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보다 폭넓은 인구 집단과 지역 등의 차원에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등을 통해 잠재적인 위기가구를 유형화한 연구도 이뤄졌다. 패널자료와 실태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다차원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배제와 박탈경험에 기초하여 유형화하고 영향요인을 파악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장은정(2022)은 복지패널(2019년 14차) 자료를 통해 40~64세 중년층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고용, 주거, 건강, 사회적 관계, 심리정서 등 6개 영역 10개 지표를 구성하

여 집단 내 이질성과 다양성에 따라 유형화하고 사회적 배제의 영향요인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중년층 1인 가구를 사회적 배제를 특성으로 하여 비배제형(29.6%), 건강제한형(14.3%), 교류제한 및 중위험다중배제형(12.0%), 소득 및 건강배제형(14.1%), 고위험다중배제형(30%) 등 5가지로 유형화하였으며, 2개 이상의 배제를 경험하는 다중배제 상태임을 밝혀내었다. 다음은 소득 이외의 다차원적 박탈경험을 활용하여 서울시의 빈곤선을 제시한 연구도 있다(이봉조 외, 2022). 이외에도 부채와 같은 특정 이슈에 집중하여 당사자의 경험과 사회적 배제를 복합적으로 파악한 연구도 있다. 이는 과중채무와 채무조정을 이용한 당사자 9명은 인터뷰하여 채무 발생 과정에서 신청, 변제 나아가 완제에 이르기까지의 경험을 통해 생애과정에서 가족과 관계 등에서 멀어지는 경험을 구조화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에 이뤄지고 있는 연구는 제한적이지만 복지 사각지대의 원인을 미시적 차원뿐 아니라 거시 등을 연계한 다차원적 관점에서 수행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소득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거나 불이익, 실패 등을 통해 배제되는 수준을 지표화하여 개인과 가구의 위기 상황을 유형화하는 연구도 새로운 방향으로 의미가 높다.

현실에서 마주하는 주요 복지 사각지대 사망사건을 보면 대상이나 위기 요인이 다양하며, 시간이 지나면서 위기가 해소되기보다는 더 깊어질 가능성도 크다. 최근 전주시 사건(2023.9.)의 경우 사후에 확인된 보도에 따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위기 정보 중 생활고로 추정해 볼 수 있는 보험료 체납이나 단가스 등의 이력이 있었으며, 이러한 위기는 단기간에 해소되지 못하고 반복 발굴되는 위기 징후로 확인되기도 했다(경향신문, 2023.9.14.).

또한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의 주요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가족돌봄청년이나 중장년 등에 새롭게 주목하며 지원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와 경기 침체기를 겪으면서 중장년의 취약성이 보고되고 있으며, 가족 해체 후 독거 중장년은 빈곤, 건강 악화, 실직, 사회적 관계 단절 등으로 고독사의 고위험 조건을 안고 있다(이한나, 2020; 박승곤, 2021).

이처럼 복지 사각지대 고위험 대상과 위기 요인이 시간에 따라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지 분석할 필요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전국 수준에서 수집된 복지 사각지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명쾌하게 유형화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럼에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구축된 발굴시스템의 안과 밖, 제도권 안팎의 경계선상에 놓인 복지 사각지대 대상의 특성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특성이 있는지 파악해 본다는 데 의미가 있다. 더욱이 복지 사각지대와 관련된 극단적 비극이 되풀이되는 상황에서 최근 연구의 경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금까지 대상자로부터 수집되는 데이터와 실질적인 경험을 토대로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위험신호를 놓치고 있지 않은지 재점검이 시급하다.

따라서 전국 단위에서 복지 사각지대와 같은 위기 집단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 어떤 특성을 보이고, 개인과 가구의 특성을 반영하는 유형화 연구는 부족하므로, 이 방향에서 연구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크다고 볼 수 있다.

제2절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개선과 과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는 이른바 2014년 이른바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공론화되면서 정부는 그동안 다양한 대책을 모색해 왔다. 2014년 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을 개정하면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을 제정하면서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소위 ‘송파 세 모녀’ 3법이 추진되었다. 특히 더 이상 복지 사각지대를 방치하지 않도록 빅데이터 기반 발굴관리시스템을 2015년부터 구축하고, 위기징후 정보(이하 위기 정보)를 입수·분석하여 조사대상자를 선별하고 지자체에 통보하여 직접 조사토록 하고 있다.

2022년 9월까지의 2개월을 주기로 34종의 위기 정보를 기반으로 약 450만 명을 선별하여 그중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하는 상위 2~3%에 해당하는 고위험군 18~20만 명을 추출하여 지자체에 통보해 왔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예측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발맞춰 그동안 관련 연구도 모형 개선 중심에서 대상자 실태분석으로 주제와 범위도 넓혀왔다. 또한, 시스템도 2022년부터 중앙 발굴과 구분하여 발굴대상자로 내려가지 않는 입수 전체 대상 중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 정보로 조건 검색하여 추가 발굴할 수 있는 새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이는 중앙 주도로 일관된 모형을 운영하여 발굴하는 시스템 체계와는 다른 접근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지자체 발굴을 통해 위기가 구 지원성과가 나타나는지, 지역 특성에 맞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과제로 남아있다(최정은, 2023).

그러나, 읍면동 복지행정 업무를 통해 이뤄지는 발굴 업무 부담이 크며, 지원 제도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향후 복지 사각지대 경계선상을 오가는 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해야 할 과제도 있다(최정은 외, 2022; 함영진 외, 2023).

〈표 2-1〉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연계정보 현황(2023.4. 기준)

근거:법률(제12조제1항각호 및 제2항)		근거:시행령(제8조제2항 별표 2 각호)	
정보내용	보유기관	정보내용	보유기관
단전	한국전력공사	국민연금보험료 체납	건강보험공단
단수	상수도사업본부	의료 위기1)	
단가스	도시가스사	범죄 피해	경찰청
초중고 교육비 지원 중 학교장 추천	교육부	화재 피해	소방청
		재난 피해	행정안전부
건보료 체납	건강보험공단	주거 위기2)	국토교통부
건보료 부과내역			한국토지주택공사
기초수급 탈락·중지			각 지방개발공사
복지시설 퇴소	보건복지부		아파트 관리사무소
금융연체	신용정보원	고용위기3)	고용노동부
통신비 체납	한국정보통신 진흥협회		근로복지공단
방문건강사업 대상			
1) ① 의료비 부담 과다 ② 장기 요양 ③ 중증질환 산정특례* ④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⑤ 장기요양 등급*		기저귀 분유지원	보건복지부
		신생아 난청지원	
2) ① 전세 기준금액 이하 ② 월세 기준금액 이하 ③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자 ④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자		영양플러스 미지원	
		맞춤형급여 신청*	
3) ① 개별연장급여 대상자 ② 실업급여 수급자(임금체불, 폐업)		전기료 체납	한국전력공사
		자살고위험군	자살예방센터
		내원사유 자해·자살	응급의료센터

근거:법률(제12조제1항각호 및 제2항)		근거:시행령(제8조제2항 별표 2 각호)	
정보내용	보유기관	정보내용	보유기관
③ 비자발적 사유로 고용보험 상실 후 재취득이 없는 자 중 실업급여 미수급자		휴·폐업자	국세청
④ 일용근로자 중 실업급여 미수급자		세대주가 사망한 가구	행정안전부
⑤ 산재요양종결 후 근로단절자		주민등록세대원*	

※ 자료 : 보건복지부(2023).

제3절 소결

복지 사각지대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후 정부나 지자체가 놓치고 있는 사회적 위험신호를 발견하게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집단 내 다양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Townsend(1979)와 Gordon et al.(2000)은 다차원적인 사회적 위험을 인식하고, 이를 미시와 거시적 관점에서 정책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폭넓은 이론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 두 이론은 빈곤의 역동성과 빈곤의 생애주기 개념을 제시해 향후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를 발견하고 또 대응하는 데 시사하는 바도 크다. 기존 연구의 성과도 크지만, 상대적으로 당사자를 중심에 두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인의 요인과 제도 요인을 복합적으로 접근하는 논의는 부족하였다. 그럼에도 취약 집단을 유형화하는 양적 및 질적 연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복지 사각지대 생계형 사건·사고 사례 유형화, 사회적 배제를 기준으로 중장년 1인 가구 유형화 등 새로운 접근이 이뤄져, 집단 내 다양성과 이질성을 확인하는 틀로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관점에서 전국 단위 분석으로 확장된다면 사회적으로 놓치고 있는 사회적 위험신호를 감지하고 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관점으로 기대가 크다.

현재 복지 사각지대 사망사건에 대응해 예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중앙모형과 함께 지자체 발굴을 새롭게 시작하였다. 또한, 2023년 4월 기준으로 총 44종의 위기 정보를 통한 발굴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읍면동 단위에서 맡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업무 부담이 과중되는 현실에서 복지 사각지대 경계선상을 오가는 대상자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여 예방적인 차원에서 적합한 방법을 찾는 과제가 시급할 수 있다.

제3장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대상자 위기 진단

제1절 발굴대상자의 시계열 특성

제2절 발굴대상의 공적지원 선정
영향요인 분석

제3절 중앙 발굴과 지자체 발굴
공적지원 현황

제4절 소결



제3 장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대상자 위기 진단

제1절 발굴대상의 시계열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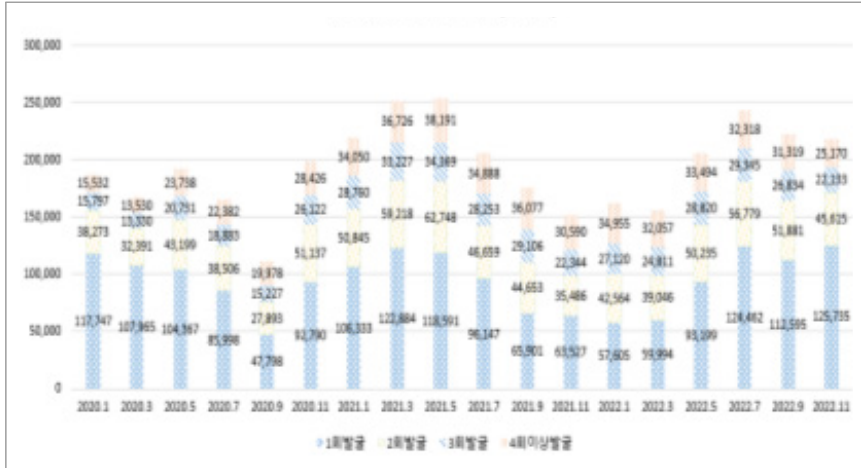
1. 시스템을 통한 반복 발굴 수준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대상이 시간에 따라 진입과 탈출을 얼마나 반복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제한적이지만, 최근 발굴대상자 데이터를 패널로 재구성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활용한 데이터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에서 격월 단위(1년 6회)로 지자체에 분배하는 발굴대상자 원자료로, 2020년 1차부터 2022년 18차까지 발굴대상자 중 회차별 중복을 제거한 패널데이터로 구성하였다.

본 자료를 분석해보면, 평균적으로 1회 발굴은 9만 4,647명, 2회 발굴은 4만 5,396명, 3회 발굴은 2만 4,734명, 4회 이상 발굴은 2만 9,079명 등으로, 회차별 평균 19만 3,856명을 발굴하고 있다. 2020년 1차 발굴을 시작점이라고 해서 2022년 18차까지 평균 1회 발굴은 49%, 2회 발굴은 23%, 3회 발굴은 13%, 4회 이상 발굴은 15%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회차별로 1회 발굴은 전체 발굴 대상의 절반 정도이며, 나머지 절반은 다른 위기 요인 등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발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3-1], [그림 3-2] 참고).

[그림 3-1] 발굴대상자의 반복 발굴 현황(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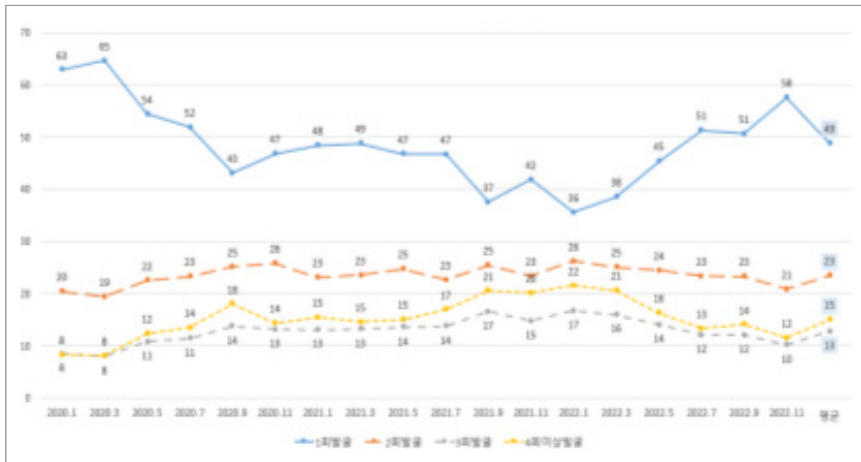
(단위: 명)



※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발굴대상자 원자료 분석(2020~2022, 2023.3 기준).

[그림 3-2] 발굴대상자의 반복 발굴 현황(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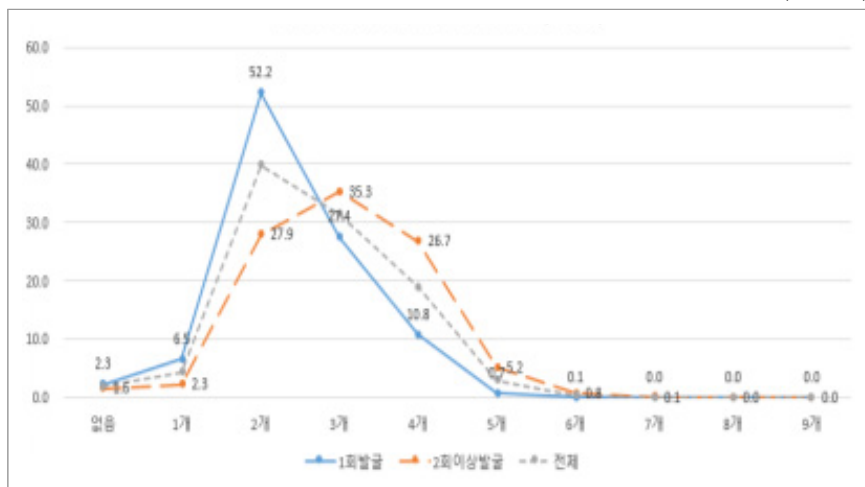
※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발굴대상자 원자료 분석(2020~2022, 2023.3 기준).

2. 위기 정보의 중첩성

복지사각지대 시스템을 통해 반복 발굴되는 대상자는 위기 정보의 수도 많이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1회 발굴된 경우 위기 정보 2개를 보유한 대상이 52.2%로 가장 많았으며, 2개 이하 위기 정보 보유 대상은 61%, 3개 이하 보유 대상은 88.4%였다. 이에 반해 2회 이상 반복적으로 발굴된 대상의 경우, 위기 정보 3개 이상이 35.3%로 가장 많았으며, 4개 26.7% 등으로, 위기 정보 2개 이하 보유 대상은 31.8%였으나, 3개 이하 보유 대상은 67.1%, 4개 이하 보유 대상은 93.9% 등이었다. 이처럼, 2회 이상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경우 위기 정보의 중첩성이 두터워짐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3-3) 참고).

[그림 3-3] 반복 발굴에 따른 위기 정보 중첩성 현황

(단위: %)



※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발굴대상자 원자료 분석(2020-2022, 2023.3 기준).

3. 발굴 요인의 차이

반복 발굴에 따라 위험정보도 달라지는지를 확인하였다. 2020년 1차에서 2022년 18차까지 위험정보별(=100%)로 어느 정도 발굴되는지 비중을 살펴보면, 건강보험료체납여부(45%) > 월세금액기준이하가구여부(22%) > 통신비체납대상자여부(2021년 2차 연계)(21.1%) > 기초생활긴급지원수급탈락여부(19.1%) > 일용근로대상자여부(16.6%) > 고용보험비대상여부(11.2%) > 금융연체대상여부(10.8%) > 전세금액기준이하가구여부(8.7%) > 국민연금체납여부(8.2%) > 공동주택관리비체납대상자여부(7.4%)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1회 발굴, 2회 이상 발굴 등으로 구분하여 위기 정보를 전체 평균과 비교해보면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1차에서 2022년 18차까지 시계열 데이터 중 1회 발굴된 대상은 고용 문제(고용보험실직사유대상여부, 고용보험비대상여부, 일용근로대상자여부, 휴폐업가구), 건강 문제(의료비용과다지출가구여부, 영양플러스미지원가구여부), 가구 변동(세대주사망세대원여부) 등에서 더 큰 위험을 보여주고 있다.

2회 이상 발굴대상자의 위험요인을 전체 평균과 비교해보면, 전체 평균 대비 정부지원 탈락(기초생활긴급지원수급탈락여부), 금융연체(금융연체대상자여부), 사회보험료 등 체납(건강보험료체납여부, 통신비체납대상자여부, 국민연금체납, 전기료체납여부, 단가스여부, 단전여부), 주거 문제(월세금액기준이하가구여부, 공공임대주택체납자여부, 전세금액기준이하가구) 등에서 더 높은 위험을 보여주고 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발굴대상자의 위기 정보에 따른 반복 발굴 여부에 따른 그룹 간 차이검정도 수행해 보았다. 아래 <표 3-1>과 같이 지난 3년간 위기 정보별로 1회 발굴대상과 2회 이상 발굴대상 간 차이도 확인할 수 있었다(<표 3-1>, [그림 3-4] 참고).

〈표 3-1〉 발굴대상자 반복 발굴에 따른 위기 정보의 그룹 간 차이검정

구분	그룹 간 발굴요인 비중 비교			그룹 간 차이검정		
	전체 (비중)	1회 발굴 (비중)	2회 이상 발굴 (비중)	1회 발굴 (평균)	2회 이상 (평균)	t-value
단전여부	0.5	-0.3	0.2	0.003	0.008	64.05***
단수도여부	0.1	-0.0	0.0	0.000	0.001	15.60***
단가스여부	1.7	-0.5	0.5	0.011	0.021	73.37***
전기료체납여부	4.7	-0.8	0.8	0.039	0.055	68.84***
국민연금체납여부	8.2	-3.0	2.9	0.052	0.111	201.48***
건강보험료체납여부	45.0	-10.1	9.6	0.350	0.546	373.13***
화재피해여부	0.0	0.0	-0.0	0.000	0.000	-3.94***
피부양 의무자장기요양 여부	4.7	-0.1	0.1	0.046	0.048	8.72***
전세금액기준이하가구 여부	8.7	-0.6	0.6	0.081	0.092	39.28***
월세금액기준이하가구 여부	22.0	-4.5	4.3	0.174	0.263	198.27***
고용보험개별연장급여 대상여부	0.0	0.0	0.0	-	-	-
고용보험실직사유대상 여부	5.7	2.0	-1.9	0.077	0.037	-160.00***
고용보험비대상여부	11.2	2.4	-2.3	0.136	0.089	-140.00***
방문건강집중관리군여부	0.4	-0.0	0.0	0.004	0.004	0.49***
기저귀조제분유지원대 상자여부	3.9	1.1	-1.1	0.050	0.028	-100.00***
신생아난청확진자여부	0.0	0.0	-0.0	-	-	-
자살예방관리대상자여부	0.2	-0.0	0.0	0.001	0.002	17.43***
자살시도대상자여부	0.2	0.0	-0.0	0.002	0.002	-4.17***
위기학생여부	0.4	0.0	-0.0	0.004	0.004	-6.04***
범죄피해여부	0.0	-0.0	0.0	0.000	0.000	0.98
시설입소여부	0.8	0.1	-0.1	0.008	0.007	-12.80***
기초생활긴급지원수급 탈락여부	19.1	-5.3	5.0	0.138	0.242	246.23***

구분	그룹 간 발굴요인 비중 비교			그룹 간 차이검정		
	전체 (비중)	1회 발굴 (비중)	2회 이상 발굴 (비중)	1회 발굴 (평균)	2회 이상 (평균)	t-value
공공임대주택채납자여부	3.4	-1.8	1.7	0.016	0.050	176.74***
산재요양종결후근로 단절자여부	0.5	0.1	-0.1	0.006	0.004	-30.45***
재난피해자여부	0.1	0.1	-0.1	0.001	0.000	-35.53***
금융연체대상자여부	10.8	-4.4	4.2	0.064	0.150	258.70***
의료비용과다지출가구 여부	2.5	0.3	-0.3	0.028	0.021	-39.85***
일용근로대상자여부	16.6	2.7	-2.6	0.193	0.140	-130.00***
영양플러스미지원가구 여부	0.2	0.1	-0.1	0.003	0.000	-62.69***
휴폐업가구여부	2.7	1.0	-0.9	0.037	0.017	-110.00***
공동주택관리비채납 대상자여부	7.4	-1.4	1.4	0.060	0.088	98.94***
세대주사망세대원여부	0.6	0.2	-0.2	0.008	0.003	-58.99***
통신비채납대상자여부	21.1	-7.4	6.7	0.137	0.278	294.54***
산정특례대상자여부	1.9	-1.9	-0.7	0.026	0.012	-52.65***
의료기관장기미이용 장애인여부	0.3	-0.3	-0.2	0.004	0.001	-35.75***
장기요양등급외여부	0.2	-0.2	-0.2	0.004	0.000	-38.77***
장기요양등급보유여부	2.7	-2.7	-1.4	0.041	0.013	-89.57***

※ 주: p<.1, **p<.05, ***p<.01

[그림 3-4] 발굴대상자 반복 발굴에 따른 위기 정보 현황 비교

(좌축 단위: 전체, %, 우축 단위: 1회 발굴과 2회 이상 발굴, %)



※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발굴대상자 원자료 분석(2020~2022, 2023.3 기준).

4. 공적지원 수준

발굴대상자의 공적지원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전체 비중과 반복 발굴에 따른 공적지원 증감 수준을 확인해 보았다(〈표 3-2〉, [그림 3-5] 참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8회차 동안 공적지원 수준은 회차별 최저 8.6%에서 최고 22.5%로 차이가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공적지원 평균(회차별 중복제거)은 발굴대상자 대비 12.7% 정도였다. 이처럼 회차별 공적지원을 1회 발굴대상과 2회 이상 발굴대상으로 구분하여 반복 발굴에 따른 공적지원의 차이를 확인해보면 증감에서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다. 2020년 1월(1회차)에서 2021년 3월(8회차)까지는 전체 공적지원 평균 대비 2회 이상 발굴대상자의 공적지원 수급 비중이 높았으나, 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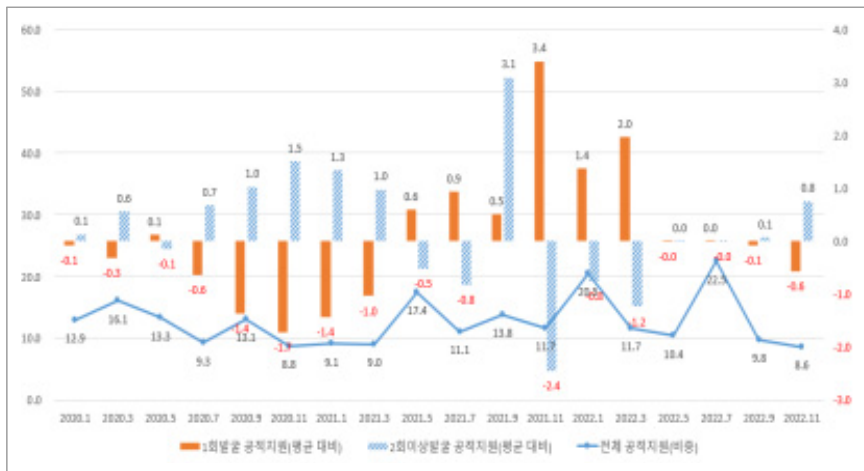
5월(9회차)부터는 1회 발굴대상자의 공적지원이 전체 평균 대비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2〉 발굴대상자 반복 발굴에 따른 공적지원 현황

구분	공적지원(비율)			전체 대비 증감(비율)	
	전체	1회 발굴	2회 이상 발굴	1회 발굴	2회 이상 발굴
2020.01.	12.9	12.9	13.1	-0.1	0.1
2020.03.	16.1	15.8	16.6	-0.3	0.6
2020.05.	13.3	13.4	13.2	0.1	-0.1
2020.07.	9.3	8.6	9.9	-0.6	0.7
2020.09.	13.1	11.7	14.1	-1.4	1.0
2020.11.	8.8	7.1	10.3	-1.7	1.5
2021.01.	9.1	7.7	10.5	-1.4	1.3
2021.03.	9.0	8.0	10.0	-1.0	1.0
2021.05.	17.4	18.0	16.9	0.6	-0.5
2021.07.	11.1	12.0	10.3	0.9	-0.8
2021.09.	13.8	14.3	16.9	0.5	3.1
2021.11.	11.7	15.1	9.2	3.4	-2.4
2022.01.	20.5	21.9	19.8	1.4	-0.8
2022.03.	11.7	13.6	10.4	2.0	-1.2
2022.05.	10.4	10.4	10.4	-0.0	0.0
2022.07.	22.5	22.5	22.4	0.0	-0.0
2022.09.	9.8	9.7	9.8	-0.1	0.1
2022.11.	8.6	8.1	9.4	-0.6	0.8
평균	12.7	12.8	13.0	0.1	0.2

[그림 3-5] 발굴대상자 반복 발굴에 따른 공적지원 현황

(좌축 단위: 전체(%), 우축 단위: 1회 발굴과 2회 이상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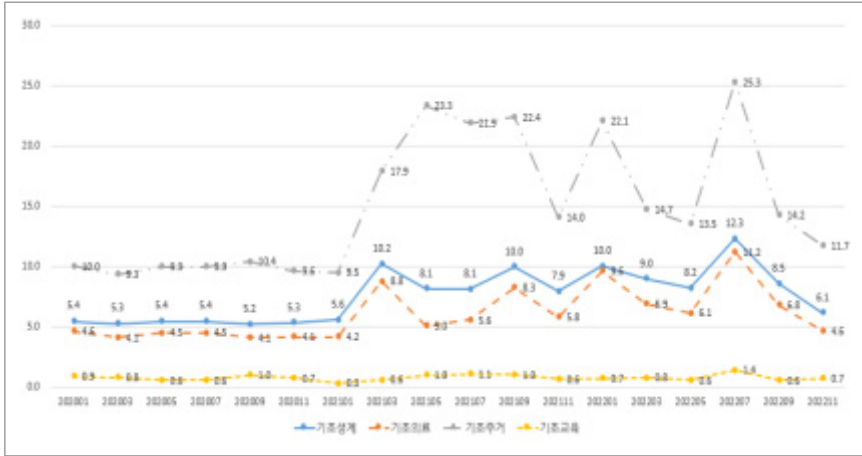
※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발굴대상자 원자료 분석(2020~2022, 2023.3 기준).

발굴대상자의 발굴 횟수에 따라 공적지원의 세부 내용을 추가로 확인해 보았다. 이를 위해 행복이음의 공적지원 자료를 연계하여 발굴대상자의 주요 공적지원 현황을 살펴볼 수 있었다. 공적지원 중 가장 안정적인 지원인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시계열 데이터 기초분석을 해보았다.

그 결과, 2020년 1회차부터 2022년 18회차까지 복지사각지대 시스템 발굴대상자 중 생계급여 수급은 평균적으로 7.6%, 의료급여 수급은 6.0%, 기초주거급여 수급은 15%, 교육급여 수급은 0.8%로 나타났다. 동기간 생계급여는 최저 5.2%에서 최대 12.3%, 의료급여는 최저 4.1%에서 최대 11.2%, 주거급여는 최저 9.3%에서 최대 22.4%, 교육급여는 최저 0.3%에서 최대 1.4% 등으로 나타났다. 교육급여를 제외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비중은 2021년 1월(7회차)부터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 가운데 주거급여의 수급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3-6) 참고).

[그림 3-6] 전체 발굴대상자의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 지원별 현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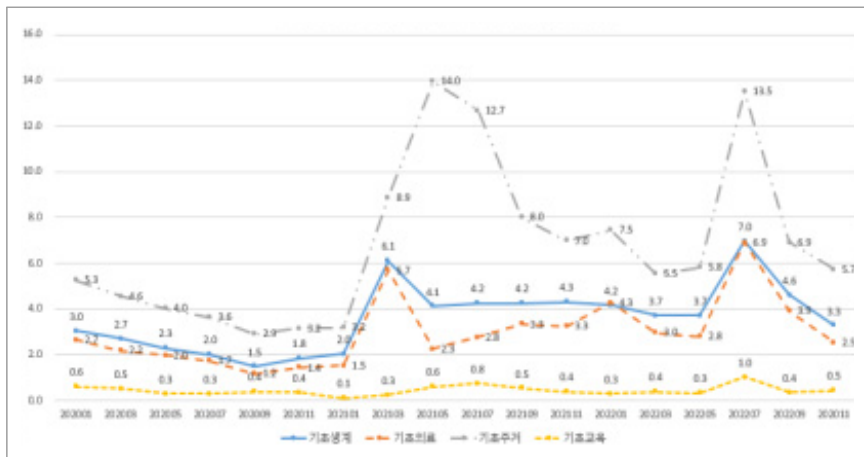


※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발굴대상자 원자료 분석(2020~2022, 2023.3 기준).

다음으로 1회 발굴대상의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의 지원별 변화를 살펴보았다. 동기간 1회 발굴대상자 중 생계급여 수급은 평균적으로 3.6%, 의료급여 수급은 3.0%, 주거급여 수급은 6.8%, 교육급여 수급은 0.4%로 나타났다. 동기간 생계급여는 최저 1.5%에서 최대 7.0%, 의료급여는 최저 1.2%에서 최대 6.9%, 주거급여는 최저 2.9%에서 최대 13.5%, 교육급여는 최저 0.1%에서 최대 0.8% 등으로 나타났다(그림 3-7) 참고).

[그림 3-7] 1회 발굴대상자의 기초맞춤형 지원별 현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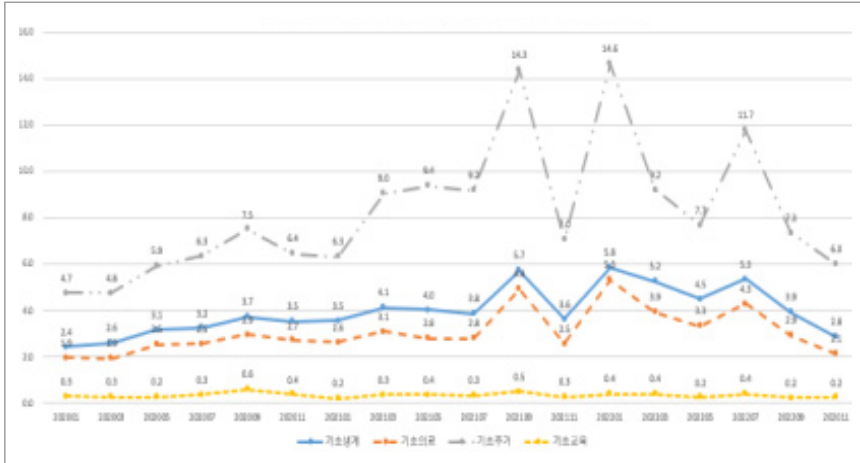


※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발굴대상자 원자료 분석(2020~2022, 2023.3 기준).

마지막으로, 2회 발굴대상자의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의 지원별 변화를 살펴보았다. 동기간 2회 이상 발굴대상자 중 생계급여 수급은 평균적으로 3.9%, 의료급여 수급은 3.1%, 주거급여 수급은 8.2%, 교육급여 수급은 0.3%로 나타났다. 동기간 생계급여는 최저 2.4%에서 최대 5.8%, 의료급여는 최저 1.9%에서 최대 5.3%, 주거급여는 최저 4.7%에서 최대 14.6%, 교육급여는 최저 0.2%에서 최대 0.6% 등으로 나타났다(그림 3-8) 참고).

[그림 3-8] 2회 이상 발굴대상자의 기초맞춤형 지원별 현황

(단위: %)



※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발굴대상자 원자료 분석(2020-2022, 2023.3 기준).

제2절 발굴대상의 공적지원 선정 영향요인 분석

1. 모델1: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 대상 선정 영향요인

다음은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통해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 풀드(Pooled)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데이터는 1회 발굴이 절반이며, 나머지 절반 중 2~3회 반복 발굴이 주요한 불균형 패널데이터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회차별 시점을 고정한 풀드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법을 통해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발굴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을 분석할 수 있었다. 주요 독립변수로 발굴위기 정보, 가구 및 세대 구성, 회차별 발굴 횟수, 발굴모형, 인구학적 요인 등의 영향을 살펴 보았다. 다음 <표 3-3>은 기초분석 결과이다.

<표 3-3> 모델1: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 수급 대상자 기초분석 결과

구분		기초 맞춤형 수급 대상자(4종)			
		수(A)	총(B)	기초맞춤형 (비중)(A/B *100)	총발굴대비 비중(A/총발굴 수*100)
위기 요인	단전여부	2,455	531,395	0.5	0.07
	단수도여부	272	531,395	0.1	0.01
	단가스여부	9,560	531,395	1.8	0.27
	전기료체납여부	25,845	531,395	4.9	0.74
	국민연금체납여부	21,966	531,395	4.1	0.63
	건강보험료체납여부	210,608	531,395	39.6	6.04
	화재피해여부	22	531,395	0.0	0.00
	피부양 의무자장기요양 여부	25,780	531,395	4.9	0.74
	전세금액기준이하가구 여부	48,338	531,395	9.1	1.39

구분	기초 맞춤형 수급 대상자(4종)			
	수(A)	총(B)	기초맞춤형 (비중)(A/B *100)	총발굴대비 비중(A/총발굴 수*100)
월세금액기준이하가구 여부	233,709	531,395	44.0	6.70
고용보험개별연장급여 대상여부	196	531,395	0.0	0.01
고용보험실직사유대상 여부	13,822	531,395	2.6	0.40
고용보험비대상여부	29,304	531,395	5.5	0.84
방문 건강집중관리군 여부	1,075	531,395	0.2	0.03
기저귀조제분유지원 대상자여부	10,992	531,395	2.1	0.32
신생아난청확진자여부	1	531,395	0.0	0.00
자살예방관리대상자 여부	1,588	531,395	0.3	0.05
자살시도대상자여부	716	531,395	0.1	0.02
위기학생여부	2,385	531,395	0.4	0.07
범죄피해여부	0	531,395	0.0	0.00
시설입퇴소여부	5,532	531,395	1.0	0.16
기초생활긴급지원수급 탈락여부	151,033	531,395	28.4	4.33
공공임대주택체납자 여부	22,095	531,395	4.2	0.63
산재요양종결후근로 단절자여부	1,320	531,395	0.2	0.04
재난피해자여부	86	531,395	0.0	0.00
금융연체대상자여부	42,901	531,395	8.1	1.23
의료비용과다지출가구 여부	10,567	531,395	2.0	0.30
일용근로대상자여부	38,154	531,395	7.2	1.09
영양플러스미지원가구 여부	141	531,395	0.0	0.00

구분		기초 맞춤형 수급 대상자(4종)			
		수(A)	총(B)	기초맞춤형 (비중)(A/B *100)	총발굴대비 비중(A/총발굴 수*100)
	휴폐업가구여부	5,763	531,395	1.1	0.17
	공동 주택관리비체납 대상자여부	28,439	531,395	5.4	0.82
	세대주사망세대원여부	1,952	531,395	0.4	0.06
	통신비체납대상자여부	86,573	465,143	18.6	2.48
	산정특례대상자여부	2,407	178,938	1.3	0.07
	의료 기관장기미이용 장애인여부	192	178,938	0.1	0.01
	장기요양등급외여부	195	178,938	0.1	0.01
	장기요양등급보유여부	3,186	178,938	1.8	0.09
가구 /세대 구성	1인 가구	268,709	510,541	52.6	7.70
	노인세대	133,472	562,759	23.7	3.83
	장애인세대	41,187	562,759	7.3	1.18
	한부모세대	95,402	562,759	17.0	2.73
	일반세대	175,903	562,759	31.3	5.04
발굴 모형	중앙모형	110,775	562,759	19.7	3.17
	중앙시계열	8,259	562,759	1.5	0.24
	중앙기획	137,709	562,759	24.5	3.95
	지자체자체	306,016	562,759	54.4	8.77
반복 발굴	1회 발굴	263,428	562,759	46.8	7.55
	2회 이상 발굴	299,331	562,759	53.2	8.58
성별	남성	283,465	562,759	50.4	8.12
	여성	279,294	562,759	49.6	8.0
연령대	19세 미만	33,639	562,759	6.0	0.96
	만 20~29세	29,253	562,759	5.2	0.84
	만 30~44세	68,841	562,759	12.2	1.97
	만 45~64세	225,150	562,759	40.0	6.45
	만 65~74세	106,140	562,759	18.9	3.04
	만 75세 이상	99,736	562,759	17.7	2.86

구분		기초 맞춤형 수급 대상자(4종)			
		수(A)	총(B)	기초맞춤형 (비중)(A/B *100)	총발굴대비 비중(A/총발굴 수*100)
지역 규모	농어촌	308,622	562,758	54.8	8.84
	중소도시	57,319	562,758	10.2	1.64
	대도시	196,817	562,758	35.0	5.64

다음 <표 3-4>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통해 맞춤형 기초생활보장(4종) 수급자 발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먼저, 발굴위기 정보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대다수 위기 정보에 대한 유의미한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위기 정보에 따라서 양(+)의 관계를 보이는 것과 음(-)의 영향을 보이는 요인들로 구분할 수 있었다. 먼저, 양(+)의 관계에 있는 요인들은 체납정보(단가스, 전기료체납, 공공임대주택체납자, 금융연체대상자, 통신비체납대상자), 주거정보(전세 및 월세금액기준이하가구), 고용정보(고용보험개별연장급여대상), 건강정보(자살예방관리대상자, 자살시도대상자), 변동(세대주사망세대원, 위기학생) 등으로 확인되었다. 나머지 발굴위기 정보들은 음(-)의 관계에 있는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고용보험실질사유대상여부와 신생아난청확진자여부 등은 유의미한 영향을 확인할 수 없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 대상 발굴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의 승산비(Odds Ratio)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위기 정보 중에서는 월세금액기준이하가구여부 요인을 가진 대상이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 수급대상이 될 가능성이 4.6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 고용보험개별연장급여대상여부 요인이 2.9배, 자살예방관리대상자여부 요인이 2.3배, 기초생활긴급지원수급탈락여부 요인이 1.9배, 자살시도대상자여부 요인이 1.6배, 통신비체납대상자여부 요인이 1.4배, 세대주사망세대원여부 요인이 1.3배 등으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 수급대상이 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었다.

다음으로 가구 및 세대 구성 요인을 보면, 1인 가구는 물론 세대 구성 중 노인, 장애인, 한부모, 일반세대 모두 양(+)의 유의미한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구 및 세대 구성의 승산비를 보면, 1인 가구 요인이 이외 가구구성원 보다 1.3배로 높았으며, 장애인세대 요인이 6.5배, 한부모세대 요인이 5.1배, 일반세대 요인이 3.1배 등으로 맞춤형 기초생활보호 수급대상자 가능성을 높이고 있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모형을 세분화해 살펴보면, 지자체 자체발굴 모형에 전취 중앙 모형(시계열 모형 제외), 중앙 시계열 모형, 중앙 기획발굴 등은 음(-)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었다. 또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8회차 발굴대상자 중 1회 발굴이 유의미한 양(+)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이외 인구학적 요인 중 양(+)의 관계는 여성, 75세 이상, 대도시 지역으로 확인되었다.

〈표 3-4〉 모델1: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발굴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영향요인		기초맞춤형(4종)		
		회귀계수	P>z	승산비
위기 정보	단전여부	-0.110***	-0.180	0.896
	단수도여부	-0.539***	-0.745	0.583
	단가스여부	0.183***	0.141	1.200
	전기료체납여부	0.107***	0.084	1.113
	국민연금체납여부	-0.332***	-0.364	0.717
	건강보험료체납여부	-0.060ㄸ	-0.076	0.942
	화재피해여부	-0.025	-0.848	0.975
	피부양 의무자장기요양여부	-0.046***	-0.075	0.955
	전세금액기준이하가구여부	0.175***	0.142	1.191
	월세금액기준이하가구여부	1.540***	1.525	4.664
	고용보험개별연장급여대상여부	1.077***	0.530	2.935
	고용보험실직사유대상여부	0.028	-0.012	1.028
	고용보험비대상여부	-0.224***	-0.254	0.800
	방문건강집중관리군여부	0.193***	0.047	1.213

영향요인		기초맞춤형(4종)		
		회귀계수	P>z	승산비
	기저귀조제분유지원대상자 여부	-0.025	-0.079	0.976
	신생아난청확인자여부	0.000***		1.000
	자살예방관리대상자여부	0.876***	0.779	2.400
	자살시도대상자여부	0.420***	0.221	1.521
	위기학생여부	0.263***	0.174	1.301
	범죄피해여부	0.000***		1.000
	시설입퇴소여부	0.124***	0.077	1.133
	기초생활간급지원수급탈락 여부	0.657***	0.641	1.929
	공공임대주택체납자여부	0.266***	0.236	1.305
	산재요양종결후근로단절자 여부	-0.194**	-0.345	0.824
	재난피해자여부	-1.001***	-1.230	0.367
	금융연체대상자여부	0.062***	0.035	1.064
	의료비용과다지출가구여부	-0.209***	-0.247	0.812
	일용근로대상자여부	-0.198**	-0.228	0.821
	영양플러스미지원가구여부	-1.403***	-2.559	0.246
	휴폐업가구여부	-0.712***	-0.786	0.491
	공동주택관리비체납대상자 여부	-0.089***	-0.115	0.915
	세대주사망세대원여부	0.264***	0.172	1.302
	통신비체납대상자여부	0.353***	0.336	1.424
	산정특례대상자여부	-0.240***	-0.293	0.786
	의료기관장기미이용장애인 여부	-0.158***	-0.323	0.854
	장기요양등급외여부	-0.165**	-0.337	0.848
	장기요양등급보유여부	-0.148*	-0.197	0.862
가구/ 세대	1인 가구	0.258***	0.244	1.295
	노인세대	1.016***	0.994	2.761
	장애인세대	1.843***	1.816	6.318
	한부모세대	1.603***	1.582	4.969

영향요인			기초맞춤형(4종)		
			회귀계수	P>z	승산비
발굴 모형	일반세대		1.128***	1.110	3.088
	중앙모형	(기준: 지자체 발굴)	-2.134***	-2.154	0.118
	중앙시계열		-2.285***	-2.322	0.102
	중앙기획		-1.706***	-1.724	0.182
반복 발굴	1회 발굴 (기준: 2회 이상 발굴)		0.018***	0.004	1.018
인구 요인	성별		-0.132***	-0.145	0.876
	19세 미만	(기준: 75세 이상)	-0.125***	-0.167	0.883
	20~29세		-1.501***	-1.532	0.223
	30~44세		-0.932***	-0.958	0.394
	45~64세		-0.525***	-0.548	0.591
	65~74세		-0.179***	-0.201	0.836
	농어촌	(기준: 대도시)	-0.438***	-0.457	0.645
	중소도시	-0.287***	-0.301	0.750	
상수			0.907***	0.861	2.476
대상자수(명)			1,045,839		
LRX2			301472.8		
PseudoR2			0.315		
Log likelihood			-327859		

주: * p<0.1, ** p<0.05, *** p<0.01

2. 모델2: 생계급여 대상 선정 영향요인

다음은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을 분석할 수 있었으며, 다음 <표 3-5>는 기초분석 결과이다.

〈표 3-5〉 모델2: 생계급여 수급 대상자 기초분석 결과

구분		기초생계			
		수(C)	합계(D)	기초생계 비중(C/D*100)	총발급 대비 비중(C/총발급 수*100)
위기 요인	단전여부	1,594	255,658	0.6	0.05
	단수도여부	177	255,658	0.1	0.01
	단가스여부	5,910	255,658	2.3	0.17
	전기료체납여부	15,167	255,658	5.9	0.43
	국민연금체납여부	7,768	255,658	3.0	0.22
	건강보험료체납여부	95,107	255,658	37.2	2.73
	화재피해여부	14	255,658	0.0	0.00
	피부양 의무자장기요양 여부	14,288	255,658	5.6	0.41
	전세금액기준이하가구 여부	19,751	255,658	7.7	0.57
	월세금액기준이하가구 여부	114,487	255,658	44.8	3.28
	고용보험개별연장급여 대상여부	79	255,658	0.0	0.00
	고용보험실직사유대상 여부	7,051	255,658	2.8	0.20
	고용보험비대상여부	13,042	255,658	5.1	0.37
	방문건강집중관리군 여부	596	255,658	0.2	0.02
	기저귀조제분유지원 대상자여부	3,941	255,658	1.5	0.11
	신생아난청확진자여부	0	255,658	0.0	0.00
	자살예방관리대상자 여부	1,161	255,658	0.5	0.03
	자살시도대상자여부	460	255,658	0.2	0.01
	위기학생여부	837	255,658	0.3	0.02
	범죄피해여부	0	255,658	0.0	0.00
	시설입퇴소여부	4,033	255,658	1.6	0.12

구분		기초생계			
		수(C)	합계(D)	기초생계 비중(C/D*100)	총발굴 대비 비중(C/총발굴 수*100)
	기초생활긴급지원수급 탈락여부	73,140	255,658	28.6	2.10
	공공임대주택체납자 여부	11,636	255,658	4.6	0.33
	산재요양종결후근로 단절자여부	774	255,658	0.3	0.02
	재난피해자여부	46	255,658	0.0	0.00
	금융연체대상자여부	22,035	255,658	8.6	0.63
	의료비용과다지출가 구여부	6,403	255,658	2.5	0.18
	일용근로대상자여부	19,101	255,658	7.5	0.55
	영양플러스미지원가 구여부	23	255,658	0.0	0.00
	휴폐업가구여부	2,659	255,658	1.0	0.08
	공동주택관리비체납 대상자여부	11,579	255,658	4.5	0.33
	세대주사망세대원여부	1,188	255,658	0.5	0.03
	통신비체납대상자여부	47,526	255,658	18.6	1.36
	산정특례대상자여부	1.15	255,658	0.0	0.00
	의료기관장기미이용 장애인여부	112	255,658	0.0	0.00
	장기요양등급외여부	132	255,658	0.1	0.00
	장기요양등급보유여부	1,747	255,658	0.7	0.05
가구/ 세대	1인 가구	150,027	243,123	61.7	4.30
	노인세대	68,821	268,826	25.6	1.97
	장애인세대	25,770	268,826	9.6	0.74
	한부모세대	33,955	268,826	12.6	0.97
	일반세대	85,662	268,826	31.9	2.45
발굴 모형	중앙모형	57,847	268,826	21.5	1.66
	중앙시계열	3,877	268,826	1.4	0.11

구분		기초생계			
		수(C)	합계(D)	기초생계 비중(C/D*100)	총발굴 대비 비중(C/총발굴 수*100)
	중앙기획	61,483	268,826	22.9	1.76
	지자체자체	145,619	268,826	54.2	4.17
반복 발굴	1회 발굴	131,139	268,826	48.8	3.76
	2회 이상 발굴	137,687	268,826	51.2	3.95
성별	남성	143,461	268,826	53.37	4.11
	여성	125,365	268,826	46.63	3.59
연령대	19세 미만	10,565	268,826	3.9	0.30
	만 20~29세	11,023	268,826	4.1	0.32
	만 30~44세	24,584	268,826	9.1	0.70
	만 45~64세	112,935	268,826	42.0	3.24
	만 65~74세	60,596	268,826	22.5	1.74
	만 75세 이상	49,123	268,826	18.3	1.41
지역 규모	농어촌	144,751	268,826	53.8	4.15
	중소도시	32,314	268,826	12.0	0.93
	대도시	91,761	268,826	34.1	2.63

다음 <표 3-6>은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통해 생계급여 수급자 발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먼저, 발굴위기 정보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위기 정보에 따라서 양(+)의 관계를 보이는 것과 음(-)의 영향을 보이는 요인들로 구분할 수 있었다. 먼저, 양(+)의 관계에 있는 요인들은 체납정보(단전, 단가스, 전기료체납, 공공임대주택 체납자, 금융연체대상자, 통신비체납대상자), 주거정보(전세 및 월세금액기준이하 가구), 고용정보(고용보험개별연장급여대상), 건강정보(자살예방관리대상자, 자살 시도대상자), 변동(세대주사망세대원, 기초생활긴급지원수급탈락여부, 위기학생) 등으로 확인되었다. 나머지 발굴위기 정보들은 음(-)의 관계에 있는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화재피해여부, 고용보험실질사유대상여부 등은 유의미한 영향을 확인할 수 없었다.

생계급여 대상 발굴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의 승산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위기 정보 중에서는 월세금액기준이하가구여부 요인을 가진 대상이 맞춤형 기초생계급여 자살예방관리대상자여부 요인이 3.2배, 자살시도대상자여부 요인이 2.1배, 통신비체납대상자여부 요인이 1.8배, 기초생활긴급지원수급탈락여부 요인이 1.5배, 세대주사망세대원여부 요인이 1.5배, 고용보험개별연장급여대상 여부 요인이 1.5배 등으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 수급대상이 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었다.

다음으로 가구 및 세대 구성 요인을 보면, 1인 가구는 물론 세대 구성 중 노인, 장애인, 한부모, 일반세대 모두 양(+)의 유의미한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구 및 세대 구성의 승산비를 보면, 1인 가구 요인이 이외 가구구성원 보다 1.8배로 높았으며, 장애인세대 요인이 5.8배, 한부모세대 요인이 3.7배, 일반세대 요인이 2.8배 등으로 맞춤형 기초생활보호 수급대상자 가능성을 높이고 있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모형을 세분화해 살펴보면, 지자체 자체발굴 모형에 견줘 중앙 모형(시계열 모형 제외), 중앙 시계열 모형, 중앙 기획발굴 등은 음(-)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었다. 또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8회차 발굴대상자 중 1회 발굴이 유의미한 양(+)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이외 인구학적 요인 중 양(+)의 관계는 여성, 65~75세 이상, 대도시 지역으로 확인되었다.

〈표 3-6〉 모델2: 생계급여 대상자 발굴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영향요인		기초생계		
		회귀계수	P>z	승산비
위기 정보	단전여부	0.1618***	0.0824	1.1756
	단수도여부	-0.1513	-0.3903	0.8596
	단가스여부	0.3096***	0.2623	1.3629
	전기료체납여부	0.2744***	0.2480	1.3157
	국민연금체납여부	-0.8532***	-0.9074	0.4260
	건강보험료체납여부	-0.4930***	-0.5131	0.6108
	화재피해여부	-0.6170	-1.8319	0.5396

영향요인	기초생계		
	회귀계수	P>z	승산비
피부양 의무자 장기요양 여부	-0.0791***	-0.1137	0.9239
전세금액 기준 이하 가구 여부	0.2840***	0.2405	1.3284
월세금액 기준 이하 가구 여부	1.1821***	1.1640	3.2614
고용보험 개별연장급여 대상 여부	0.4265	-0.3598	1.5319
고용보험 실직사유 대상 여부	0.0348	-0.0176	1.0354
고용보험 비대상 여부	-0.484***	-0.5258	0.6163
방문건강집중관리군 여부	0.0324	-0.1372	1.0330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자 여부	-0.2267***	-0.3098	0.7972
신생아 난청 확진자 여부	-		-
자살예방 관리 대상자 여부	1.1498***	1.0485	3.1575
자살 시도 대상자 여부	0.7373***	0.5087	2.0902
위기학생 여부	0.4811***	0.3697	1.6178
범죄피해 여부	-		-
시설입퇴소 여부	0.6259***	0.5754	1.8700
기초생활긴급지원수급탈락 여부	0.4193***	0.4006	1.5209
공공임대주택체납자 여부	0.4486***	0.4150	1.5660
산재요양종결후 근로단절자 여부	-0.1643*	-0.3560	0.8485
재난피해자 여부	-1.2974***	-1.5984	0.2732
금융연체 대상자 여부	0.1210***	0.0879	1.1286
의료비용과다지출 가구 여부	-0.1552***	-0.2012	0.8562
일용근로 대상자 여부	-0.2200***	-0.2612	0.8026
영양플러스 미지원 가구 여부	-		-
휴폐업 가구 여부	-0.7665***	-0.8697	0.4646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 대상자 여부	-0.0312*	-0.0651	0.9693
세대주 사망 세대원 여부	0.3888***	0.2845	1.4753
통신비체납 대상자 여부	0.5971***	0.5764	1.8168
산정특례 대상자 여부	-0.5868***	-0.6554	0.5561
의료기관 장기미이용 장애인 여부	-0.2754***	-0.4791	0.7592
장기요양 등급 외 여부	-0.2233**	-0.4204	0.7999
장기요양 등급 보유 여부	-0.4242***	-0.4813	0.6543

영향요인			기초생계		
			회귀계수	P>z	승산비
가구/ 세대 구성	1인 가구		0.5604***	0.5425	1.7513
	노인세대		0.9154***	0.8882	2.4977
	장애인세대		1.7709***	1.7393	5.8761
	한부모세대		1.2967***	1.2685	3.6574
	일반세대		1.0320***	1.0098	2.8065
발굴 모형	중앙모형	(기준: 지자체 발굴)	-1.7023***	-1.7272	0.1823
	중앙시계열		-2.0859***	-2.1367	0.1242
	중앙기획		-1.8787***	-1.9044	0.1528
반복 발굴	1회 발굴 (기준: 2회 이상 발굴)		0.2149***	0.1984	1.2398
인구 요인	성별		-0.0227***	-0.0389	0.9776
	19세 미만	(기준: 75세 이상)	-0.2896***	-0.3473	0.7485
	만 20~29세		-1.3287***	-1.3697	0.2648
	만 30~44세		-0.9478***	-0.9825	0.3876
	만 45~64세		-0.3612***	-0.3895	0.6968
	만 65~74세		0.0353***	0.0088	1.0359
	농어촌	(기준: 대도시)	-0.1989***	-0.2222	0.8196
	중소도시		-0.2563***	-0.2737	0.7739
상수			-1.2305***	-1.2817	0.2921
대상자수(명)			1,045,839		
LRX2			284933.46		
PseudoR2			0.3076		
Log likelihood			-320751.11		

3. 모델3: 주거급여 대상 선정 영향요인

다음은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을 분석할 수 있었으며, 다음 <표 3-7>은 기초분석 결과이다.

<표 3-7> 모델3: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 기초분석 결과

구분		기초주거			
		수(E)	총(F)	기초주거 (E/F*100)	총발굴 중 비중(E/총발굴 수*100)
위기 요인	단전여부	2,308	507,211	0.5	0.07
	단수도여부	258	507,211	0.1	0.01
	단가스여부	9,359	507,211	1.8	0.27
	전기료체납여부	24,992	507,211	4.9	0.72
	국민연금체납여부	21,461	507,211	4.2	0.62
	건강보험료체납여부	201,542	507,211	39.7	5.78
	화재피해여부	19	507,211	0.0	0.00
	피부양 의무자장기요양 여부	21,933	507,211	4.3	0.63
	전세금액기준이하가구 여부	47,363	507,211	9.3	1.36
	월세금액기준이하가구 여부	230,921	507,211	45.5	6.62
	고용보험개별연장급여 대상여부	192	507,211	0.0	0.01
	고용보험실직사유대상 여부	13,523	507,211	2.7	0.39
	고용보험비대상여부	28,343	507,211	5.6	0.81
	방문건강집중관리군 여부	971	507,211	0.2	0.03
	기저귀조제분유지원 대상자여부	10,449	507,211	2.1	0.30
	신생아난청확진자여부	1	507,211	0.0	0.00

구분		기초주거			
		수(E)	총(F)	기초주거 (E/F*100)	총발굴 중 비중(E/총발굴 수*100)
가구 유형	자살예방관리대상자 여부	1,512	507,211	0.3	0.04
	자살시도대상자여부	668	507,211	0.1	0.02
	위기학생여부	1,960	507,211	0.4	0.06
	범죄피해여부	0	507,211	0.0	0.00
	시설입퇴소여부	4,134	507,211	0.8	0.12
	기초생활긴급지원수 급탈락여부	142,885	507,211	28.2	4.09
	공공임대주택체납자 여부	21,916	507,211	4.3	0.63
	산재요양종결후근로 단절자여부	1,271	507,211	0.3	0.04
	재난피해자여부	80	507,211	0.0	0.00
	금융연체대상자여부	41,555	507,211	8.2	1.19
	의료비용과다지출가 구여부	9,406	507,211	1.9	0.27
	일용근로대상자여부	36,719	507,211	7.2	1.05
	영양플러스미지원가 구여부	128	507,211	0.0	0.00
	휴폐업가구여부	5,481	507,211	1.1	0.16
	공동주택관리비체납 대상자여부	27,288	507,211	5.4	0.78
	세대주사망세대원여부	1,763	507,211	0.3	0.05
	통신비체납대상자여부	82,581	444,480	18.6	2.37
	산정특례대상자여부	2,269	169,390	1.3	0.07
	의료기관장기미이용 장애인여부	174	169,390	0.1	0.00
	장기요양등급외여부	188	169,390	0.1	0.01
	장기요양등급보유여부	2,796	169,390	1.7	0.08
	1인 가구	257,004	487,812	52.7	7.37
	노인세대	124,870	536,503	23.3	3.58

	구분	기초주거			
		수(E)	총(F)	기초주거 (E/F*100)	총발굴 중 비중(E/총발굴 수*100)
발굴 모형	장애인세대	38,876	536,503	7.2	1.11
	한부모세대	91,918	536,503	17.1	2.63
	일반세대	169,403	536,503	31.6	4.85
	중앙모형	104,936	536,503	19.6	3.01
	중앙시계열	7,650	536,503	1.4	0.22
	중앙기획	129,241	536,503	24.1	3.70
	지자체자체	294,676	536,503	54.9	8.44
반복 발굴	1회 발굴	249,917	536,503	46.6	7.16
	2회 이상 발굴	286,586	536,503	53.4	8.21
성별	남성	270,161	536,503	50.36	7.74
	여성	266,342	536,503	49.64	7.63
연령대	19세 미만	29,083	536,503	5.4	0.83
	만 20~29세	28,548	536,503	5.3	0.82
	만 30~44세	67,561	536,503	12.6	1.94
	만 45~64세	218,414	536,503	40.7	6.26
	만 65~74세	101,910	536,503	19.0	2.92
	만 75세 이상	90,987	536,503	17.0	2.61
지역 규모	농어촌	302,972	536,502	56.5	8.68
	중소도시	47,322	536,502	8.8	1.36
	대도시	186,208	536,502	34.7	5.34

다음 <표 3-8>은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통해 주거급여 수급자 발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먼저, 발굴위기 정보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위기 정보에 따라서 양(+)의 관계를 보이는 것과 음(-)의 영향을 보이는 요인들로 구분할 수 있었다. 먼저, 양(+)의 관계에 있는 요인들은 체납정보(단가스, 전기료체납, 공공임대주택체납자, 금융연체대상자, 통신비체납대상자), 주거정보(전세 및 월세금액기준이하가구), 고용정보(고용보험개별연장급여대상), 건강정보(자살예방관리대상자, 자살시도

대상자), 변동(세대주사망세대원, 기초생활긴급지원수급탈락여부) 등으로 확인되었다. 나머지 발굴위기 정보들은 음(-)의 관계에 있는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고용보험실질사유대상여부, 위기학생여부 등은 유의미한 영향을 확인할 수 없었다.

맞춤형 주거급여 대상 발굴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의 승산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위기 정보 중에서는 월세금액기준이하가구여부 요인을 가진 대상이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 수급대상이 될 가능성이 5.2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 고용보험개별연장급여대상여부 요인이 2.7배, 자살예방관리대상자여부 요인이 2.3배, 기초생활긴급지원수급탈락여부 요인이 1.7배, 자살시도대상자여부 요인이 1.5배, 통신비체납대상자여부 요인이 1.3배, 세대주사망세대원여부 요인이 1.3배 등으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 수급대상이 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었다.

다음으로 가구 및 세대 구성 요인을 보면, 1인 가구는 물론 세대 구성 중 노인, 장애인, 한부모, 일반세대 모두 양(+)의 유의미한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구 및 세대 구성의 승산비를 보면, 1인 가구 요인이 이외 가구구성원 보다 1.3배로 높았으며, 장애인세대 요인이 6.2배, 한부모세대 요인이 5.0배, 일반세대 요인이 3.1배 등으로 맞춤형 기초주거급여 수급대상자 가능성을 높이고 있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모형을 세분화해 살펴보면, 지자체 자체발굴 모형에 견줘 중앙 모형(시계열 모형 제외), 중앙 시계열 모형, 중앙 기획발굴 등은 음(-)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었다. 또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8회차 발굴대상자 중 1회 발굴이 유의미한 양(+)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이외 인구학적 요인 중 양(+)의 관계는 여성, 75세 이상, 대도시 지역으로 확인되었다.

〈표 3-8〉 모델3: 주거급여 대상자 발굴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영향요인		기초주거		
		회귀계수	P>z	승산비 (Odds Ratio)
위기 정보	단전여부	-0.177***	-0.248	0.838
	단수도여부	-0.515***	-0.725	0.597
	단가스여부	0.087***	0.045	1.091

영향요인	기초주거		
	회귀계수	P>z	승산비 (Odds Ratio)
전기료체납여부	0.102***	0.079	1.107
국민연금체납여부	-0.338***	-0.370	0.713
건강보험료체납여부	-0.119***	-0.135	0.888
화재피해여부	-0.230	-1.100	0.795
피부양 의무자 장기요양여부	-0.173***	-0.203	0.842
전세금액기준이하가구여부	0.313***	0.279	1.367
월세금액기준이하가구여부	1.642***	1.627	5.165
고용보험개별연장급여대상여부	0.994***	0.442	2.702
고용보험실직사유대상여부	0.009	-0.032	1.009
고용보험비대상여부	-0.278***	-0.309	0.757
방문건강집중관리군여부	0.241***	0.091	1.272
기저귀조제분유지원대상자여부	-0.096***	-0.152	0.908
신생아난청확진자여부	0.000		1.000
자살예방관리대상자여부	0.826***	0.729	2.283
자살 시도대상자여부	0.428***	0.227	1.534
위기학생여부	0.057	-0.037	1.059
범죄피해여부	0.000		1.000
시설입퇴소여부	-0.218***	-0.269	0.804
기초생활긴급지원수급탈락여부	0.547***	0.531	1.728
공공임대주택체납자여부	0.257***	0.227	1.293
산재요양종결후근로단절자여부	-0.245***	-0.399	0.783
재난피해자여부	-1.100***	-1.336	0.333
금융연체대상자여부	0.047***	0.020	1.048
의료비용과다지출가구여부	-0.303***	-0.342	0.739
일용근로대상자여부	-0.244***	-0.275	0.784
영양플러스미지원가구여부	-1.407**	-2.562	0.245
휴폐업가구여부	-0.793***	-0.868	0.453
공동주택관리비체납대상자여부	-0.072***	-0.098	0.931
세대주사망세대원여부	0.236***	0.141	1.266
통신비체납대상자여부	0.296***	0.279	1.345

영향요인			기초주거		
			회귀계수	P>z	승산비 (Odds Ratio)
가구/ 세대 구성	산정특례대상자여부		-0.392***	-0.444	0.676
	의료기관장기미이용장애인여부		-0.471***	-0.642	0.624
	장기요양등급외여부		-0.375***	-0.549	0.687
	장기요양등급보유여부		-0.367***	-0.416	0.693
	1인 가구		0.228***	0.214	1.256
	노인세대		1.055***	1.033	2.871
	장애인세대		1.823***	1.795	6.191
	한부모세대		1.606***	1.584	4.982
일반세대		1.144***	1.127	3.141	
발굴 모형	중앙모형	(기준: 지자체 발굴)	-2.120***	-2.140	0.120
	중앙시계열		-2.316***	-2.354	0.099
	중앙기획		-1.592***	-1.610	0.203
반복 발굴	1회 발굴 (기준: 2회 이상 발굴)		0.009	-0.005	1.009
인구 요인	성별		-0.144***	-0.157	0.866
	19세 미만	(기준: 75세 이상)	-0.299***	-0.343	0.741
	만 20~29세		-1.456***	-1.487	0.233
	만 30~44세		-0.881***	-0.908	0.414
	만 45~64세		-0.484***	-0.508	0.616
	만 65~74세		-0.125***	-0.148	0.883
	농어촌	(기준: 대도시)	-0.665***	-0.685	0.514
	중소도시		-0.339***	-0.353	0.713
상수			0.847***	0.804	2.332
대상자수(명)			1,045,839		
LRX2			284933.46		
PseudoR2			0.3076		
Log likelihood			-320751.11		

4. 모델4: 긴급복지 대상 선정 영향요인

다음은 긴급복지 대상자 선정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을 분석할 수 있었으며, 다음 <표 3-9>는 기초분석 결과이다.

<표 3-9> 모델4: 긴급복지 수급 대상자 기초분석 결과

구분		긴급복지			
		수(G)	총(H)	긴급지원 비중 (G/H*100)	총발급 대비 비중(G/총발급 수*100)
위기 요인	단전여부	1,499	157,689	1.0	0.04
	단수도여부	92	157,689	0.1	0.00
	단가스여부	4,915	157,689	3.1	0.14
	전기료체납여부	10,021	157,689	6.4	0.29
	국민연금체납여부	14,353	157,689	9.1	0.41
	건강보험료체납여부	93,073	157,689	59.0	2.67
	화재피해여부	13	157,689	0.0	0.00
	피부양 의무자 장기요양여부	4,017	157,689	2.5	0.12
	전세금액기준이하가구여부	9,609	157,689	6.1	0.28
	월세금액기준이하가구여부	49,541	157,689	31.4	1.42
	고용보험개별연장급여대상 여부	94	157,689	0.1	0.00
	고용보험실직사유대상여부	4,773	157,689	3.0	0.14
	고용보험비대상여부	9,424	157,689	6.0	0.27
	방문건강집중관리군여부	141	157,689	0.1	0.00
	기저귀조제분유지원대상자 여부	2,140	157,689	1.4	0.06
	신생아난청확진자여부	0	157,689	0.0	0.00
	자살예방관리대상자여부	538	157,689	0.3	0.02
	자살시도대상자여부	288	157,689	0.2	0.01
	위기학생여부	34	157,689	0.0	0.00
	범죄피해여부	0	157,689	0.0	0.00
	시설입퇴소여부	761	157,689	0.5	0.02

구분		긴급복지				
		수(G)	총(H)	긴급지원 비중 (G/H*100)	총발굴 대비 비중(G/총발굴 수*100)	
	기초생활긴급지원수급탈락 여부	43,948	157,689	27.9	1.26	
	공공임대주택체납자여부	11,524	157,689	7.3	0.33	
	산재요양종결후근로단절자 여부	566	157,689	0.4	0.02	
	재난피해자여부	27	157,689	0.0	0.00	
	금융연체대상자여부	24,828	157,689	15.7	0.71	
	의료비용과다지출가구여부	1,998	157,689	1.3	0.06	
	일용근로대상자여부	19,605	157,689	12.4	0.56	
	영양플러스미지원가구여부	23	157,689	0.0	0.00	
	휴폐업가구여부	2,989	157,689	1.9	0.09	
	공동주택관리비체납대상자 여부	13,700	157,689	8.7	0.39	
	세대주사망세대원여부	377	157,689	0.2	0.01	
	통신비체납대상자여부	41,114	133,393	30.8	1.18	
	산정특례대상자여부	685	55,783	1.2	0.02	
	의료기관장기미이용장애인 여부	21	55,783	0.0	0.00	
	장기요양등급외여부	42	55,783	0.1	0.00	
	장기요양등급보유여부	593	55,783	1.1	0.02	
	가구/ 세대	1인 가구	90,488	150,327	60.2	2.59
		노인세대	18,138	162,765	11.1	0.52
장애인세대		6,820	162,765	4.2	0.20	
한부모세대		19,116	162,765	11.7	0.55	
일반세대		47,813	162,765	29.4	1.37	
발굴 모형	중앙모형	29,090	162,765	17.9	0.83	
	중앙시계열	2,318	162,765	1.4	0.07	
	중앙기획	52,664	162,765	32.4	1.51	
	지자체자체	78,693	162,765	48.3	2.26	

구분		긴급복지			
		수(G)	총(H)	긴급지원 비중 (G/H*100)	총발급 대비 비중(G/총발급 수*100)
반복 발급	1회 발급	59,852	162,765	36.8	1.72
	2회 이상 발급	102,913	162,765	63.2	2.95
성별	남성	102,562	63.01	162,765	2.94
	여성	60,203	36.99	162,765	1.73
연령대	19세 미만	446	162,765	0.3	0.01
	만 20~29세	8,136	162,765	5.0	0.23
	만 30~44세	34,511	162,765	21.2	0.99
	만 45~64세	88,479	162,765	54.4	2.54
	만 65~74세	19,401	162,765	11.9	0.56
	만 75세 이상	11,792	162,765	7.2	0.34
지역 규모	농어촌	77,363	162,764	47.5	2.22
	중소도시	15,883	162,764	9.8	0.46
	대도시	69,518	162,764	42.7	1.99

다음 <표 3-10>은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통해 긴급복지제도 수급자 발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먼저, 발굴위기 정보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위기 정보에 따라서 양(+)의 관계를 보이는 것과 음(-)의 영향을 보이는 요인들로 구분할 수 있었다. 먼저, 양(+)의 관계에 있는 요인들은 체납정보(단전, 단가스, 전기료체납, 국민연금체납, 건강보험료체납, 공공임대주택체납자, 금융연체대상자, 통신비체납대상자), 주거정보(전세 및 월세금액기준이하가구), 고용정보(고용보험개별연장급여대상, 고용보험비대상여부, 일용근로대상자여부), 건강정보(피부양의무장기요양, 방문건강집중관리군, 자살예방관리대상자, 자살시도대상자, 산재요양종결후근로탈절자, 의료비용과다지출가구, 장기요양등급외여부, 장기요양등급보유여부), 변동(화재피해) 등으로 확인되었다. 나머지 발굴위기 정보들은 음(-)의 관계에 있는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영양플러스미지원가구여부, 휴폐업가구여부, 세대주사망세대원여부, 산정특례대상자여부 등은 유의미한 영향을 확인할 수 없었다.

긴급복지 대상 발굴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의 승산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위기 정보 중에서는 기초생활긴급지원수급탈락여부 요인을 가진 대상이 긴급복지 수급대상이 가능성이 3.5배 높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고용보험개별연장급여대상여부 요인이 3.3배, 화재피해여부 요인이 3배, 자살시도대상자여부 요인이 2.5배, 공공임대주택채납자여부 요인이 2.1배, 자살예방관리대상자여부가 2.1배, 통신비채납대상자여부 요인이 1.7배, 공동주택관리비채납대상자여부 요인이 1.6배 등으로 긴급복지 수급대상이 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었다.

다음으로 가구 및 세대 구성 요인을 보면, 1인 가구는 물론 세대 구성 중 노인, 장애인, 한부모, 일반세대 모두 양(+)의 유의미한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구 및 세대 구성의 승산비를 보면, 1인 가구 요인이 이외 가구구성원 보다 1.4배로 높았으며, 장애인세대 요인이 1.2배, 한부모세대 요인이 1.3배, 일반세대 요인이 1.2배 등으로 긴급복지 수급대상자 가능성을 높이고 있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모형을 세분화해 살펴보면, 지자체 자체발굴 모형에 견줘 중앙 모형(시계열 모형 제외), 중앙 시계열 모형, 중앙 기획발굴 등은 음(-)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었다. 또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8회차 발굴대상자 중 1회 발굴이 유의미한 양(+)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이외 인구학적 요인 중 양(+)의 관계는 남성, 만 30~74세 미만, 대도시 지역으로 확인되었다.

〈표 3-10〉 모델4: 긴급복지 대상자 발굴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영향요인		긴급복지		
		회귀계수	P>z	승산비
위기 정보	단전여부	0.495***	0.415	1.640
	단수도여부	0.023	-0.284	1.023
	단가스여부	0.464***	0.415	1.591
	전기료채납여부	0.332***	0.301	1.394
	국민연금채납여부	0.137***	0.103	1.147
	건강보험료채납여부	0.742***	0.721	2.101
	화재피해여부	1.099**	0.242	3.003

영향요인	긴급복지		
	회귀계수	P>z	승산비
피부양 의무자 장기요양 여부	0.181***	0.123	1.198
전세금 액기 준 이하 가구 여부	-0.100***	-0.163	0.905
월세금 액기 준 이하 가구 여부	0.456***	0.433	1.577
고용 보험 개 별 연 장 급 여 대 상 여 부	1.206***	0.458	3.340
고용 보험 실 직 사 유 대 상 여 부	0.140***	0.079	1.150
고용 보험 비 대 상 여 부	0.003	-0.042	1.003
방 문 건 강 집 중 관 리 군 여 부	0.597***	0.312	1.817
기 저 귀 조 제 분 유 지 원 대 상 자 여 부	0.005	-0.099	1.005
신 생 아 난 청 화 진 자 여 부	0.000		1.000
자 살 예 방 관 리 대 상 자 여 부	0.762***	0.639	2.142
자 살 시 도 대 상 자 여 부	0.809***	0.554	2.245
위 기 학 생 여 부	-1.144***	-1.845	0.318
범 죄 피 해 여 부	0.000		1.000
시 설 입 퇴 소 여 부	-0.142***	-0.249	0.868
기 초 생 활 긴 급 지 원 수 급 탈 락 여 부	1.257***	1.234	3.513
공 공 임 대 주 택 체 납 자 여 부	0.720***	0.684	2.054
산 재 요 양 종 결 후 근 로 단 절 자 여 부	0.423***	0.251	1.527
재 난 피 해 자 여 부	-0.728***	-1.114	0.483
금 융 연 체 대 상 자 여 부	0.405***	0.375	1.499
의 료 비 용 과 다 지 출 가 구 여 부	0.068*	-0.002	1.071
일 용 근 로 대 상 자 여 부	0.164***	0.126	1.178
영 양 플 러 스 미 지 원 가 구 여 부	-0.816	-2.783	0.442
휴 폐 업 가 구 여 부	0.075	-0.015	1.077
공 동 주 택 관 리 비 체 납 대 상 자 여 부	0.437***	0.403	1.549
세 대 주 사 망 세 대 원 여 부	-0.086	-0.277	0.917
통 신 비 체 납 대 상 자 여 부	0.526***	0.504	1.692
산 정 특 례 대 상 자 여 부	-0.020	-0.102	0.980
의 료 기 관 장 기 미 이 용 장 애 인 여 부	-0.907***	-1.345	0.404
장 기 요 양 등 급 외 여 부	0.349**	0.030	1.418
장 기 요 양 등 급 보 유 여 부	0.226***	0.133	1.254

영향요인			긴급복지		
			회귀계수	P>z	승산비
가구/ 세대 구성	1인 가구		0.306***	0.286	1.358
	노인세대		0.195***	0.158	1.215
	장애인세대		0.152***	0.107	1.165
	한부모세대		0.245***	0.213	1.278
	일반세대		0.186***	0.163	1.205
발굴 모형	중앙모형	(기준: 지자체 발굴)	-1.630***	-1.662	0.196
	중앙시계열		-1.614***	-1.675	0.199
	중앙기획		-1.416***	-1.443	0.243
반복 발굴	1회 발굴 (기준: 2회 이상 발굴)		-0.024**	-0.044	0.977
인구 요인	성별(남성=1, 여성=0)		0.133***	0.114	1.142
	19세 미만	(기준: 75세 이상)	-2.088***	-2.294	0.124
	만 20~29세		-0.721***	-0.777	0.486
	만 30~44세		0.291***	0.247	1.337
	만 45~64세		0.505***	0.464	1.657
	만 65~74세		0.343***	0.302	1.409
	농어촌	(기준: 대도시)	-0.294***	-0.324	0.746
	중소도시		-0.010	-0.030	0.990
상수			-2.761***	-2.845	0.063
대상자수(명)			1,045,839		
LRX2			0.1523		
PseudoR2			0.1523		
Log likelihood			-184611.95		

주: * p<0.1, ** p<0.05, *** p<0.01

5. 소결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은 다양한 연계 정보를 통해 위기가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로 의미가 크다. 이를 통해 지자체에 일정 규모의 위기 대상자를 분배하여 비수급 사각지대 대상을 찾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여러

공적지원 중에서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대상을 찾을 수 있으면 가장 큰 성과일 수 있으며, 긴급 상황에서는 긴급복지 지원의 역할이 큰 만큼 유의미한 요인을 확인해 볼 필요가 높다. 이에 발굴대상자 중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대상 선정에 영향을 주는 인과요인들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모형 운영이나 지자체 복지 사각지대 업무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의미가 높다.

본 분석을 통해 확인한 내용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 선정에 영향을 주는 위기 정보 중 급여에 따라서 유의미한 정보는 달랐으며, 양의 영향을 주는 정보는 평균 15개 이내로 확인되었다. 그중에서도 주거(전세 및 월세기준이하), 고용보험, 자살예방관리대상자 여부, 체납정보, 기초생활수급탈락 등으로 나타났다. 가구 및 세대 구성을 보면 장애인 세대나 한부모세대 여부 등의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특히, 한부모세대와 관련하여 예측 모형이 없는 상황이므로, 향후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또 하나의 모형으로 제안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지자체 분배 대상자를 통한 지원은 75세 이상 여성 어르신 지원과 대도시 거주 대상자 지원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긴급복지 대상자 선정 요인은 조금 차이가 있었다. 본 지원에 유의미한 위기 정보는 20개 이상으로 복합적인 위기 요인을 가진 대상자가 많았으며, 건강 관련(장기요양등급) 요인이 눈에 띄었다. 또한, 어떤 다른 가구나 세대보다 1인 가구 지원이 높았고, 어르신보다는 30대 이상 74세 이하 중장년층 남성 대상과 인과성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공통된 발견은 발굴모형을 중앙모형(모형-시계열과 기획 모형 제외, 중앙시계열, 중앙기획)과 지자체 발굴로 나눠 보면, 지자체 발굴을 통한 급여 지원이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기초 맞춤형 지원에서는 1회 발굴과 2회 이상 발굴에 따른 수급자 영향을 보면, 승산비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긴급복지 지원에서는 다수의 위기 요인을 보유한 반복 발굴의 의미가 높게 나타나, 향후 이들을 관리하고 모니터링할 체계가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지자체에 이뤄지는 자체 발굴 노력과 고령자 이외 위기 대상자 지원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추가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3절 중앙 발굴과 지자체 발굴 공적지원 현황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시스템에서 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자체에 분배하는 중앙 발굴과 2022년부터 지자체 담당자가 자체적으로 대상자 발굴(시스템 내 조건 검색 활용)을 통해 공적 및 민간 자원을 지원하는 지자체 발굴로 구분된다.

1. 전체 현황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시스템에서 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자체에 분배하는 중앙 발굴과 2022년부터 지자체 담당자가 자체적으로 대상자 발굴(시스템 내 조건 검색 활용)을 통해 공적 및 민간 자원을 지원하는 지자체 발굴로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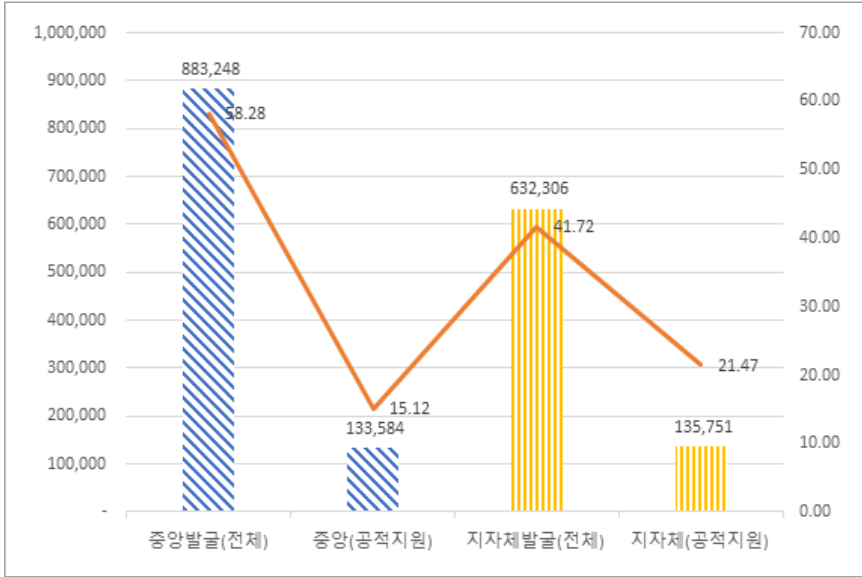
중앙 발굴과 지자체 발굴대상자는 중앙 및 지자체 복지사업과 복지서비스에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공적지원으로 연계가 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2022년 중앙 발굴을 통하여 공적지원(중복)으로 연계되는 대상자는 전체 발굴대상자 88만 3,248명 중 15.21%(13만 3,584명)이며, 지자체 발굴을 통하여 공적지원(중복)으로 연계되는 대상자는 전체 발굴대상자 63만 2,306명 중 21.47%(13만 5,751명)이다([그림 3-9] 참고).

종합적으로 중앙 발굴과 지자체 발굴을 비교해보면, 총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대비 공적지원 연계 대상자수는 각각 약 13만 명으로 비슷하나, 공적지원율은 지자체 발굴이 중앙 발굴에 비하여 6.35% 높게 분석되었다.

[그림 3-9] 중앙/지자체 발굴 및 공적지원 현황

(좌축 단위: 수, 우축 단위: %)



※ 자료 :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발굴대상자 원자료 분석(2022)

2. 세부 공적지원 현황

1) 성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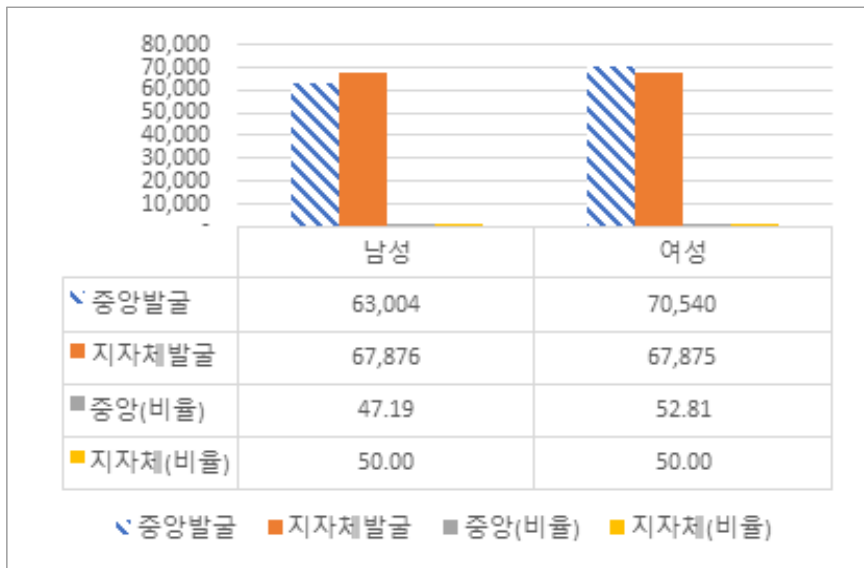
공적지원으로 연계된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성별로 분석하였다. 전체 분석 결과 여성의 비중이 남성보다 높음을 확인하였다(그림 3-10) 참고).

중앙 발굴 공적지원을 받은 대상자(대상 중복) 중 여성(52.81%)이 남성(47.19%)보다 5.62%p 많다. 지자체 발굴 공적지원을 받은 대상자(중복)는 남성(50%)이 여성(50%)로 같다.

중앙 발굴과 지자체 발굴을 비교해보면, 남성의 공적지원 규모는 지자체 발굴이 중앙 발굴보다 높고, 여성에 대한 공적지원의 비중은 중앙 발굴이 지자체 발굴보다 높다.

[그림 3-10] 성별에 따른 공적지원 현황

(좌축 단위: 수)



※ 자료 :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발굴대상자 원자료 분석(2022)

2) 연령대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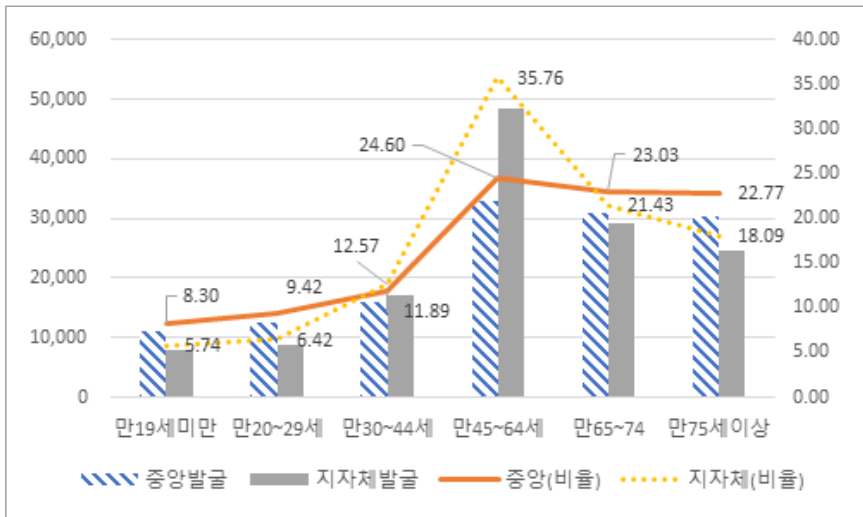
공적지원으로 연계된 중양/지자체 발굴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연령대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전체 분석 결과, 중양 발굴과 지자체 발굴 모두 중장년층(만 45~64세)의 공적지원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고령층(만 65~74/만 75세 이상)의 공적지원도 높게 나타났다([그림 3-11] 참고).

중양 발굴의 경우 공적지원을 받은 대상자(중복=100) 중 중장년층(만 45~64세) 비중이 24.6%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만 65~74세(23.03%) > 만 75세 이상(22.77%) > 만 30~44세(11.89%) > 만 20~29세(9.42%) > 만 19세 미만(8.03%) 순이다. 지자체 발굴의 경우 공적지원을 받은 대상자(중복=100)는 중장년층(만 45~64세) 비중이 35.76%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만 65~74세(21.43%) > 만 75세 이상(18.09%) > 만 30~44세(12.57%) > 만 20~29세(6.42%) > 만 19세 미만(5.74%) 순이다.

중양 발굴과 지자체 발굴을 비교해보면, 중양 발굴은 만 29세 이하와 만 65세 이상에서 지자체 발굴보다 높게 공적지원으로 연계가 되었고, 지자체 발굴은 만 30세 이상부터 만 64세 이하에서 중양 발굴에 비하여 공적지원으로 많이 연계되었다. 그중에서도 만 45~64세의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주로 젊은층과 고령층에서는 중양 발굴이, 중장년층에서는 지자체 발굴이 공적지원으로 높게 연계되었다.

[그림 3-11] 중양/지자체 발굴 연령별 공적지원 현황

(좌축 단위: 수, 우축 단위: %)



※ 자료 :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발굴대상자 원자료 분석(2022)

3) 지역규모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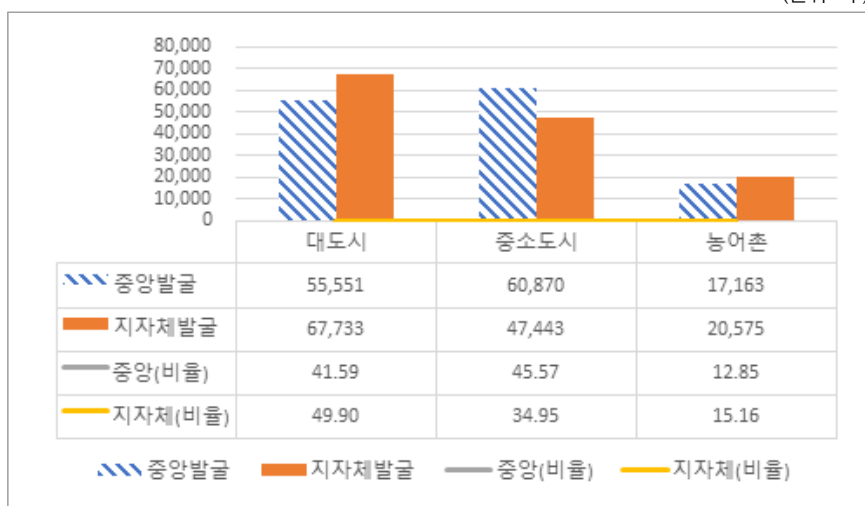
지역규모별로 공적지원을 받은 중양 발굴과 지자체 발굴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구분하여 분석해보았다. 전체 분석 결과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순으로 분석되었다.

중양 발굴 공적지원(=100)을 지역규모별로 보면, 중소도시(45.57%) > 대도시(41.59%) > 농어촌(12.85%) 순으로 나타났고, 지자체 발굴 공적지원(=100)을

지역규모별로 보면, 대도시(49.9%) > 중소도시(34.95%) > 농어촌(15.16%) 순이다. 중앙 발굴과 지자체 발굴 차이를 비교해보면, 중소도시는 중앙 발굴이 지자체 발굴보다 10.62% 높고, 대도시의 경우 지자체 발굴이 중앙 발굴보다 8.31% 높다(그림 3-12] 참고).

[그림 3-12] 지역규모별 공적지원 현황

(단위: 수)



※ 자료 :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발굴대상자 원자료 분석(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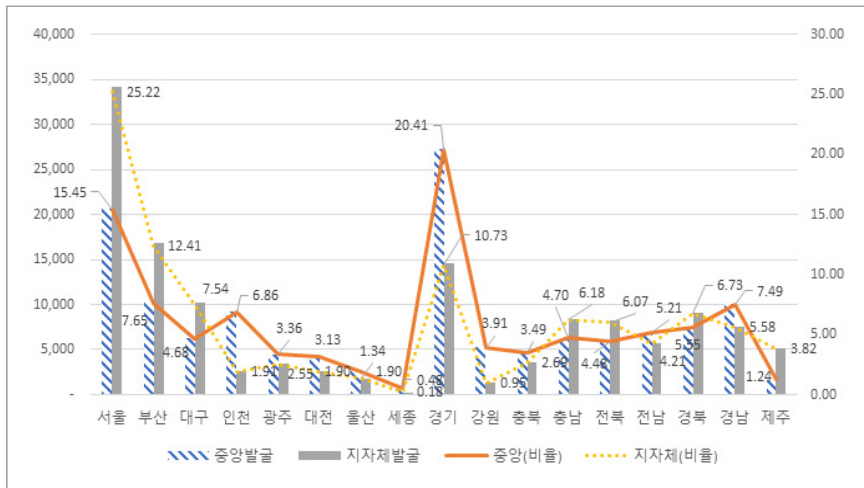
각 광역시도별 공적지원으로 연계된 중앙/지자체 발굴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현황을 비교해 보았다. 전체 분석 결과 각 광역시도별 공적지원율 상위지역은 중앙 발굴은 경기였으며, 지자체 발굴은 서울로 분석되었다.

중앙 발굴 공적지원율은 각 광역시도별 발굴대상(=100, 중복)으로 한 경우 경기(20.41%) > 서울(15.45%) > 부산(7.65%) > 경남(7.49%) > 인천(6.86%) > 경북(5.55%) > 전남(5.21%) 등의 순이다. 지자체 발굴 공적지원율을 각 광역시도별 발굴대상(=100, 중복)으로 한 경우 서울(25.22%) > 부산(12.41%) > 경기(10.73%) > 대구(7.54%) > 경북(6.73%) > 충남(6.18%) 등의 순이다. 중앙 발굴

과 지자체 발굴 차이를 비교해보면, 중앙 발굴은 경기, 인천, 강원에서 지자체 발굴보다 공적지원율이 높게 나타났고, 지자체 발굴은 서울, 부산, 대구에서 중앙 발굴보다 공적지원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장 큰 격차를 보이는 지역은 서울과 경기에서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주로 중앙 발굴은 시·도에서, 지자체 발굴은 광역 시에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그림 3-13] 참고).

[그림 3-13] 광역시도별 공적지원 현황

(좌축 단위: 수, 우축 단위: %)



※ 자료 :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발굴대상자 원자료 분석(2022)

4) 지역규모별 연령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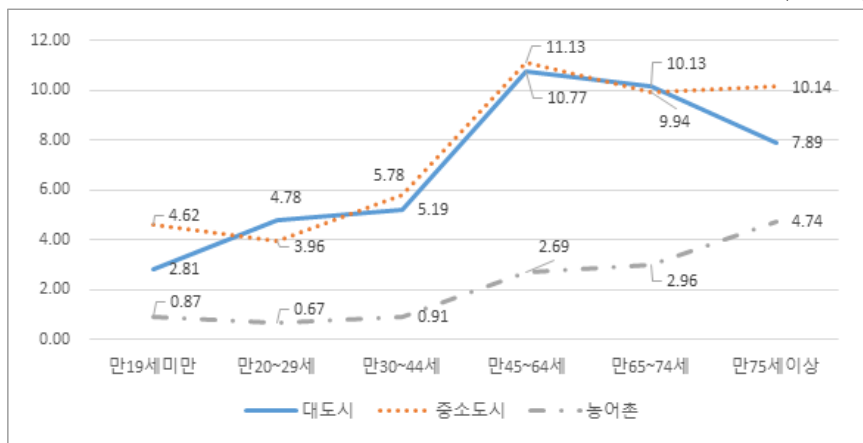
공적지원으로 연계된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지역규모별 연령대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았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지역규모로 보면,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 공적지원이 높고 연령대로 보면, 중장년층부터 고령층까지 높은 수치를 보여준다.

중앙 발굴대상자를 공적지원(=100)으로 지역규모와 연령대별로 보면, 중소도시의 중장년층 만 45~64세 이하(11.13%) > 대도시의 만 45~64세 이하(10.77%) > 중소도시의 고령층 만 75세 이상(10.14%) > 대도시의 고령층 만

65~74세 이하(10.13%) 등의 순이다(그림 3-14) 참고). 지자체 발굴대상자를 공적지원(=100)으로 지역규모와 연령별로 보면, 대도시의 만 45~64세 이하(19.23%) > 중소도시의 만 45~64세 이하(12.23%) > 대도시의 만 65~74세 이하(10.72%) > 중소도시의 만 65~74세 이하(7.44%) > 대도시의 만 75세 이상(7.18%) 순이다(그림 3-15) 참고). 중앙 발굴과 지자체 발굴 차이를 비교해보면, 중앙 발굴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 만 75세 이상 연령대에서 지자체 발굴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자체 발굴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 만 45~64세 이하 연령대에서 중앙 발굴보다 높은 수치를 보여준다.

[그림 3-14] 중앙 발굴(전체 공적지원=100) 지역규모별 연령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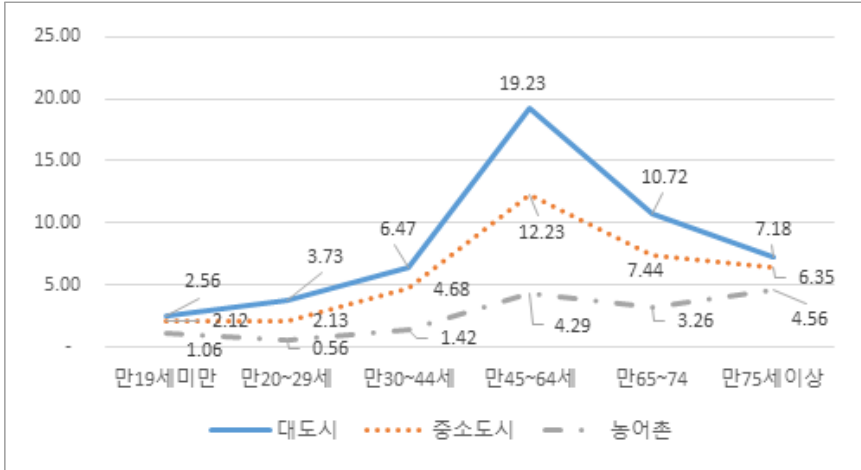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발굴대상자 원자료 분석(2022)

[그림 3-15] 지자체 발굴(전체 공적지원=100) 지역규모별 연령대 현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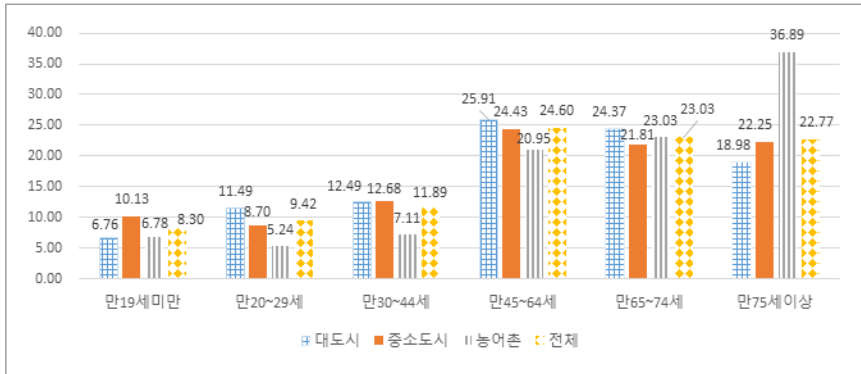
※ 자료 :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발굴대상자 원자료 분석(2022년)

중앙 발굴대상자를 지역규모별(=100)으로 연령대별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만 45~64세 이하(24.6%) > 만 65~74세 이하(23.03%) > 만 75세 이상(22.72%) 순으로 분석되었고, 특히 농어촌 만 75세 이상(36.89%)에서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그림 3-16] 참고).

지자체 발굴대상자를 지역규모별(=100)로 연령대별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만 45~64세 이하(35.76%) > 만 65~74세 이하(21.43%) > 만 75세 이상(18.09%) 순으로 분석되었고, 특히 대도시 만 45~64세 이하 중장년층(38.55%)이 높게 분석되었다([그림 3-17] 참고).

[그림 3-16] 중앙 발굴(지역규모별 공적지원=100) 연령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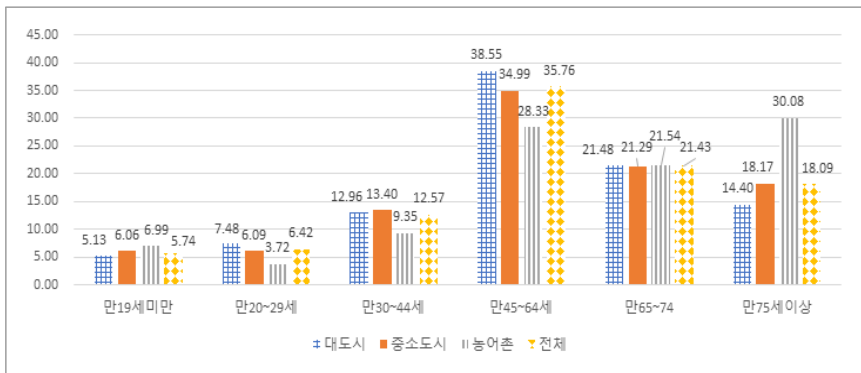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발굴대상자 원자료 분석(2022)

[그림 3-17] 지자체 발굴(지역규모별 공적지원=100) 연령대 현황

(단위: %)



※ 자료 :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발굴대상자 원자료 분석(2022)

5) 위기 정보별 현황

위기 정보별로 공적지원(증복)을 받은 대상자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중앙 발굴 공적지원율은 15.12%(13만 3,584명)이며, 지자체 발굴 21.47%(13만 5,751명)이다. 이 중에서 결측치를 제외한 대상자 중앙 발굴(11만 8,220명)과 지자체 발굴(11만 8,484명)을 위기 정보별로 공적지원 현황을 보았다(〈표 3-1〉, [그림 3-18], [그림 3-19] 참고).

먼저, 중앙 발굴 공적지원의 규모(수)(B)로 보면 월세금액기준이하가구여부(4만 3,743명) > 기초생활긴급지원수급탈락여부(3만 6,100명) > 건강보험료체납정보(3만 761명) > 통신비체납정보(1만 6,695명) 등의 순으로 발굴된다. 한편, 위기 정보별 발굴대상자 대비 공적지원의 비율($B/A \times 100$)을 보면, 위기 정보별로 상대적 비교가 가능하다. 고용보험개별연장급여대상여부(22.27%)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대상자(13.75%) > 방문건강집중관리군(13.18%) > 월세금액기준이하가구여부(12.15%) > 고용보험실직사유대상(11.44%) > 전세금액기준이하가구(11.26%) > 기초생활수급지원수급탈락(11.09%) > 세대주사망세대원여부(10.55%) > 의료비용과다지출가구(10.48%) > 자살시도대상자여부(10.45%) > 장기요양등급의(10.26%)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지자체 발굴 공적지원의 규모(수)(C)로 보면 월세금액기준이하가구여부(4만 6,536명) > 건강보험료체납여부(3만 8,663명) > 기초생활긴급지원수급탈락여부(3만 8,516명) > 통신비체납대상자여부(2만 2,559명) 등의 순으로 발굴된다. 그러나 위기 정보별 발굴대상자 대비 공적지원의 비율($C/A \times 100$)을 보면, 위기 정보별로 상대적 비교가 가능하다. 시설입소(13.6%) > 월세금액기준이하가구(12.93%), 공공임대주택체납자(12.93%) > 기초생활긴급지원수급탈락여부(11.83%) > 세대주사망세대원여부(11.67%) > 전의료체납정보(11.12%) > 위기학생(10.67%) > 단가스(10.39%) > 자살예방관리대상자(10.15%) > 단수도(9.06%) > 단전(8.73%)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11〉 공적지원(중앙 발굴/지자체 발굴) 대상자의 위기 정보별 현황(중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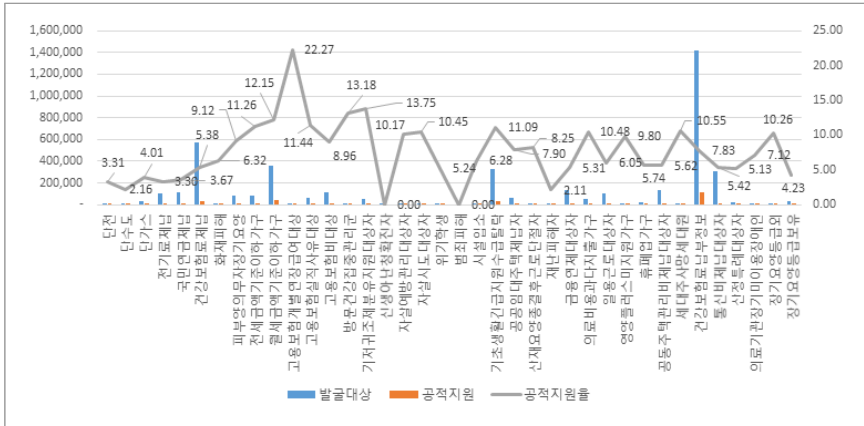
구분	전체 발굴 (A)	중앙 공적지원 (B)	중앙 지원율 (B/A*100)	지자체 공적지원 (C)	지자체 지원율 (C/A*100)
단전여부	11,325	375	3.31	989	8.73
단수도여부	1,203	26	2.16	109	9.06
단가스여부	27,714	1,110	4.01	2,880	10.39
전기료체납여부	107,769	3,553	3.30	11,979	11.12
국민연금체납여부	109,942	4,035	3.67	4,316	3.93
건강보험료체납여부	571,700	30,761	5.38	38,663	6.76
화재피해여부	95	6	6.32	4	4.21
피부양 의무자 장기요양여부	82,165	7,490	9.12	7,059	8.59
전세금액기준이하가구여부	79,317	8,935	11.26	2,758	3.48
월세금액기준이하가구여부	360,018	43,743	12.15	46,536	12.93
고용보험개별연장급여 대상여부	256	57	22.27	12	4.69
고용보험실직사유대상여부	67,025	7,666	11.44	2,279	3.40
고용보험비대상여부	109,706	9,830	8.96	5,314	4.84
방문건강집중관리군여부	3,013	397	13.18	162	5.38
기저귀조제분유지원 대상자여부	57,523	7,907	13.75	223	0.39
신생아난청확진자여부	1	0	0.00	0	0.00
자살예방관리대상자여부	5,840	594	10.17	593	10.15
자살시도대상자여부	1,569	164	10.45	94	5.99
위기학생여부	3,972	208	5.24	424	10.67
범죄피해여부	0	0	0.00	0	0.00
시설입소여부	15,129	950	6.28	2,058	13.60
기초생활급지원수급 탈락여부	325,450	36,100	11.09	38,516	11.83
공공임대주택체납자여부	64,525	5,095	7.90	8,340	12.93
산재요양종결후근로 단절자여부	3,999	330	8.25	170	4.25
재난피해자여부	2,705	57	2.11	41	1.52
금융연체대상자여부	139,054	7,389	5.31	7,417	5.33

구분	전체 발굴 (A)	중앙 공적지원 (B)	중앙 지원율 (B/A*100)	지자체 공적지원 (C)	지자체 지원율 (C/A*100)
의료비용과다지출가구여부	50,570	5,299	10.48	3,801	7.52
일용근로대상자여부	106,573	6,446	6.05	3,941	3.70
영양플러스미지원가구여부	306	30	9.80	7	2.29
휴폐업가구여부	21,766	1,249	5.74	1,051	4.83
공동주택관리비체납 대상자여부	137,363	7,714	5.62	10,202	7.43
세대주사망세대원여부	6,968	735	10.55	813	11.67
통산비체납대상자여부	307,842	16,695	5.42	22,559	7.33
산정특례대상자	23,078	1,185	5.13	1,705	7.39
의료기관장기미이용장애인	3,047	217	7.12	108	3.54
장기요양등급외	2,670	274	10.26	92	3.45
장기요양등급보유	31,834	1,345	4.23	1,419	4.46

※ 자료 :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발굴대상자 원자료 분석(2022)

[그림 3-18] 중앙 발굴 공적지원 대상자의 연계 정보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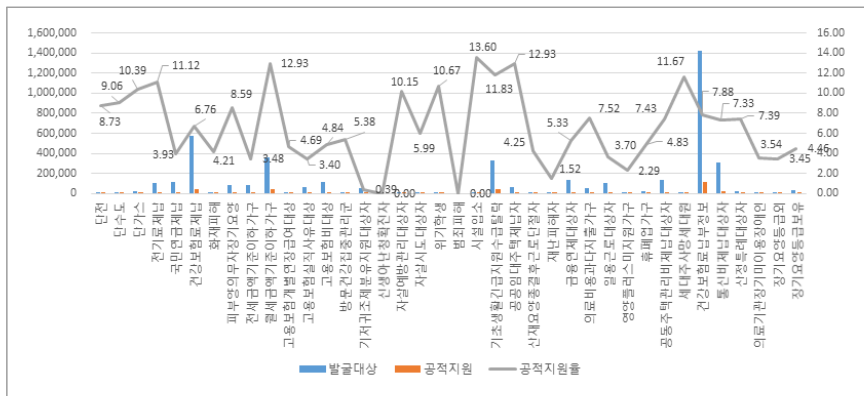
(좌축 단위: 수, 우축 단위: %)



※ 자료 :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발굴대상자 원자료 분석(2022)

[그림 3-19] 지자체 발굴 공적지원 대상자의 연계 정보별 현황

(좌축 단위: 수, 우축 단위: %)



※ 자료 :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발굴대상자 원자료 분석(2022)

6) 세부 지원 사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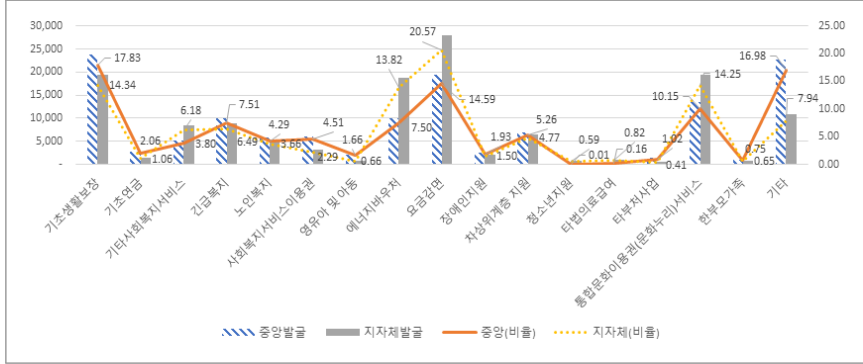
복지 사각지대 발굴대상자는 소득·재산 등 조사를 통하여 공적지원별로 제시된 일정한 자격 기준에 부합하면 공적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적지원의 세부 내역 중 기타공공(요금감면)서비스, 기초생활보장, 에너지바우처, 통합문화이용권, 긴급복지 등의 순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그림 3-20) 참고).

중앙 발굴대상자의 공적지원(=100)을 보면, 기초생활보장 17.83%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공공(요금감면)서비스 14.59%,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서비스 10.15%, 긴급복지가 7.51%, 에너지바우처 7.5% 등의 순이다. 지자체 발굴대상자의 공적지원(=100)을 보면, 기타공공(요금감면)서비스 20.57%로 가장 많았으며, 기초생활보장 14.34%,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서비스 14.25%, 에너지바우처 13.82%, 긴급복지 6.49% 등의 순이다.

위 상위 5개 지원 사업에 대하여 중앙 발굴과 지자체 발굴 차이를 비교해보면,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는 중앙 발굴이 높게 나타났고, 요금감면 등 기타공공(요금감면)서비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서비스, 에너지바우처는 지자체 발굴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3-20] 대상자별 공적지원 세부 현황 추이

(좌축 단위: 수, 우축 단위: %)



※ 자료 :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발굴대상자 원자료 분석(2022)

7) 소결

2022년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서 중앙 발굴과 지자체 발굴대상자의 공적 지원 현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표 3-12〉 분석 결과에 따른 시사점 도출

분석영역		분석 내용 요약	시사점
분석 결과	전체 현황	- 중앙 발굴: 13.3만여 명(15.12%) 지원 - 지자체 발굴: 13.5만여 명(21.47%) 지원	- 지자체 특성을 반영하는 신규 정보 발굴 필요 - 지자체별 자체 복지사업/복지서비스 수급자 특성 분석을 통한 지역 내 활용 가능한 위기 정보 도출 방안 모색 - 현재 해당 지역과 적중률이 높은 위기 정보를 파악하여 비슷한
	성별	- 중앙 발굴: 여성(52.81%), 남성(47.19%) - 지자체 발굴: 남성(50%), 여성(50%)	
	연령대별	- 중앙 발굴: 만 45~64세(24.6%) > 만 65~74세(23.03%) > 만 75세 이상(22.77%) - 지자체 발굴: 만 45~64세(35.76%) > 만 65~74세(21.43%) > 만 75세 이상(18.09%)	
	지역 규모별	- 중앙 발굴: 중소도시(45.57%) > 대도시(41.59%) > 농어촌(12.85%) - 지자체 발굴: 대도시(49.9%), 중소도시(34.95%), 농어촌(15.16%)	

분석영역	분석 내용 요약	시사점
지역 규모별 연령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 발굴: 중소도시 만 45~64세(11.13%) > 대도시 만 45~64세(10.77%) > 중소도시 만 75세 이상(10.14%) > 대도시의 만 65~74세(10.13%) - 지자체 발굴: 대도시 만 45~64세(19.23%) > 중소도시 만 45~64세(12.23%) > 대도시 만 65~74세(10.72%) > 중소도시 만 65~74세 (7.44%) > 대도시 만 75세 이상(7.18%) 	<p>지역특성을 갖는 지역 간 위기 정보 공유 및 대상자 발굴에 활용</p>
위기 정보별 공적 지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 발굴: 고용보험개별연장급여대상여부(22.27%) > 기저귀조제분유지원대상자(13.75%) > 방문건강집중관리군(13.18%) - 지자체 발굴: 시설입소(13.6%) > 월세금액기준이하가구(12.93%), 공공임대주택체납자(12.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년층 및 노인층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 이들의 욕구 분석도 필요
세부 지원 사업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 발굴: 기초생활보장(17.83%) > 기타공공(요금감면)서비스(14.59%),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서비스(10.15%) - 지자체 발굴: 기타공공(요금감면)서비스(20.57%) > 기초생활보장(14.34%)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서비스(14.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첫 시행으로 단년도 데이터 분석만 이루어져, 향후 시계 열 분석 필요

제4절 소결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의 발굴대상자를 분석하여 중요한 특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2020~2022년 18회차 데이터를 패널로 재가공하여 발굴대상자의 반복 발굴 규모와 위기 정보 중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분석 시기가 지난 3년으로 제한된 한계가 있었지만, 패널데이터로 구성해 분석한 점은 의미가 높다. 본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발굴대상자의 절반 정도는 1회 발굴되었지만, 나머지 절반은 2회에서 최대 14회까지 반복적으로 발굴되고 있었다. 그리고 1회 발굴대상보다 2회 이상 발굴대상일수록 위기 요인의 중첩성이 높았다. 즉, 반복적으로 발굴된 대상은 더 많은 위기 정보를 안고 있음을 데이터를 통해 재확인할 수 있었다. 반복 발굴 횟수가 많을수록 공적지원 수준도 높았다. 공적지원 중에서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를 중심으로 개별 급여별 차이를 확인해보면, 반복 발굴 위기 대상인 경우 1회 발굴 집단과 비교해 교육을 제외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에 대한 필요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주거급여에서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난 사실도 알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 대상 선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발굴 정보, 가구 및 세대 구성, 발굴모형, 반복 발굴 여부, 인구요인(성별, 연령대, 지역 규모) 등의 유의미성을 확인해 본 결과, 양(+)의 유의미한 15개 요인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한부모세대와 장애인세대의 취약성, 지자체 발굴의 효과 등을 알 수 있었다.

2022년에 발굴대상데이터를 통해 중앙 발굴과 지자체 발굴 간 특성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지자체 발굴을 통한 공적지원 비중이 더 높음을 확인하였으며, 성별, 연령대별, 지역규모별, 지역규모별 연령대, 위기 정보별 공적지원을, 세부지원사업현황 등에서 차이를 알 수 있었다. 2022년에 처음으로 시행된 지자체 발굴 성과를 토대로 향후 지역 내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중요해 보인다.

제4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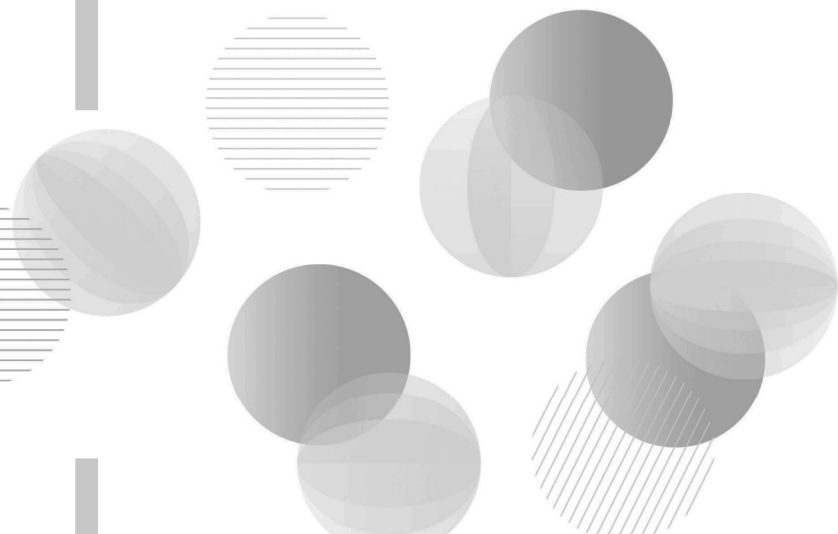
복지패널을 활용한 제도 밖 물질적 박탈경험자 위기 진단

제1절 연구 개요

제2절 물질적 박탈경험 대상의
기초분석

제3절 박탈경험 집단별 정신건강
영향요인 분석

제4절 소결



제 4 장 복지패널을 활용한 제도 밖 물질적 박탈경험자 위기 진단

제1절 연구 개요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의 위기 정보와 연계하여 전 국민 수준에서 이와 유사한 어려움에 놓일 수 있는 대상자의 시계열 특성을 파악해 보기 위해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였다.

복지패널은 매년 전기, 난방, 음식, 주거 등 10개 영역에 걸쳐 겪을 수 있는 물질적인 어려움을 조사해왔으며, 이는 물질적인 ‘박탈경험’으로 칭할 수 있다. 박탈경험이란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자원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의미하고 있다(Townsend, 1987). 특히, 이들 중 물질적인 박탈을 경험하더라도 제도 밖에 있는 대상이라면 복지 사각지대의 잠재적인 위기 대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박탈경험자들 중에서도 특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집단의 특성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의 물질적인 박탈경험의 정도는 물론, 이들의 소득, 정신건강, 공적 지원, 음주, 근로 활동 등도 시간적 변화도 분석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복지 사각지대 사망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물질적 박탈경험 대상자의 우울 등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중요하게 파악해 보고자 한다(〈표 4-1〉, 〈표 4-2〉 참고).

본 장에서 활용한 한국복지패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별급여로 바뀌는 2015년 데이터부터 2021년의 16차까지의 자료이다. 패널데이터의 장점은 단순한 스냅샷을 넘어, 변수들의 시간에 따른 변동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민인식·최필선, 2012). 또한, 패널데이터를 통해 관찰되지 않는 변수의 영향도 고려하였다. 횡단면 분석에 비해 패널데이터는 더 큰 표본 크기를 가지며, 이로 인해 독립 변수들 간 다중공선성 문제가 완화되고 추정치의 정확도가 향상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7년 동안 수집된 데이터는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얻어진 것이

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횡단면 데이터에 비하여 표본의 크기와 다양성이 더 크므로 더 정확한 추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표 4-1〉 변수들의 구성

변수명	측정
성별	남자=1, 여자=2
교육수준	미취학(만 7세 미만)=1, 무학(만 7세 이상)=2 초등학교=3, 중학교=4 고등학교=5, 전문대학=6 대학교=7, 대학원(석사)=8
균등화 소득에 따른 가구 구분	일반가구 =1, 저소득층= 2
주거유형	자가=1, 전세=2, 보증부 월세=3, 월세(사글세)=4, 기타=5
가처분소득	가처분소득
부채	주거관련 부채 + 기타부채의 합
물질적 박탈 총합	
집세박탈 공과금박탈 전기수도박탈 공교육비박탈 난방박탈 의료박탈 신용박탈 건보박탈 음식박탈 영양박탈	자주 그렇다=1, 가끔 그렇다=2, 전혀 그렇지 않다=3, 모름/거부=4 있다=1 없다=2 피해당=3 있다=1 없다=2 피해당=3 있다=1 없다=2 피해당=3 있다=1 없다=2 피해당=3
건강만족도 가족의수입만족도 주거환경만족도 가족만족도 직업만족도 사회적 친분 만족도 여가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매우 불만족=1, 대체로 만족=2, 그저 그렇다=3, 대체로 만족=4, 매우 만족=5

1) 우울수준은 다음 11개의 문항을 통해 측정함: (1)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2) 비교적 잘

변수명	측정
우울수준 ¹⁾ (CESD_11)	전혀 그렇지 않다=0 가끔 그렇다=1 종종 그렇다=2 자주 그렇다(주 5~7일)=3
자살생각	지금까지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는지 여부 예=1, 아니오=2, 모름/무응답=9
생계급여 수급여부	해당없음=0, 일반 수급가구=1, 조건부 수급가구=2, 특례가구=3
의료급여 수급형태	해당없음=0, 의료급여 1종=1, 의료급여 2종=2, 국가유공자무료=3
주거급여 수급형태	해당없음=0, 임차급여=1, 수선유지급여=2
건강보험 가입형태	직장가입자=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2, 지역가입자=3, 지역가입자의 세대원=4, 의료급여 1종=5, 의료급여 2종=6, 국가유공자 무료진료=7, 미가입=8
바우처 이용경험	있음=1, 없음=2
음주	월 1회 이하=1, 월 2~4회=2, 주 2~3회=3, 주 4회 이상=4, 전혀 마시지 않는다=5
흡연	피움=1, 피우지 않음=2
근로시간 형태	시간제=1, 전일제=2
근로유형	임금근로자=1, 자영업/고용주=2, 무급가족봉사자=3, 미취업자(근로능력 있음)=4, 미취업자(근로능력 없음)=5
근로능력	없음=0, 있음=1

지냈다, (3) 상당히 우울했다, (4)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5) 잠을 설쳤다(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6)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7)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8)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9) 마음이 슬펐다, (10)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11)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이렇게 합산한 우울 최대 점수는 33점이며 여기에 선행연구(여유진, 2020: 전진아, 2015)에 따라 20/11을 곱하여 최종적으로 60점을 최대 점수로 하는 우울척도 점수를 산출하였음을 밝힌다.

〈표 4-2〉 한국복지패널의 박탈경험 지표

내용	응답구성
2달 이상 집세가 밀리거나 낼 수 없어 집을 옮긴 경험	1. 있다 2. 없다 3. 비해당
공과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험	1. 있다 2. 없다
세금을 내지 못해 전기, 전화, 수도가 끊긴 경험	1. 있다 2. 없다
자녀의 공교육비를 한 달 이상 못 준 경험	1. 있다 2. 없다 3. 비해당
돈이 없어 겨울에 난방을 못한 경험	1. 있다 2. 없다
돈이 없어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못간 경험	1. 있다 2. 없다
가구원 중 신용불량자가 된 경험자 여부	1. 있다 2. 없다
건강보험 미납으로 인하여 보험 급여자격을 정지당한 경험 여부	1. 있다 2. 없다 3. 비해당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도 더 살 돈이 없었던 경험	1. 자주 그렇다 2. 가끔 그렇다 3. 전혀 그렇지 않다 4. 모름/거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어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가 없었던 경험	1. 자주 그렇다 2. 가끔 그렇다 3. 전혀 그렇지 않다 4. 모름/거부

제2절 물질적 박탈경험 대상의 기초분석

1. 전체 현황

박탈지수는 특정 인구 집단이 사회적으로 박탈된 경험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었다. <표 4-3>에서 연도별 박탈경험 수치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2015년에는 박탈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14,527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박탈경험이 1번 있었던 사람들이 766명, 2번 있었던 사람들이 417명 순으로 나타났다. 박탈경험이 8번 있었던 사람들은 7명으로 가장 적게 관측되었다.

〈표 4-3〉 박탈경험 횟수에 따른 기술분석

연도	0	1	2	3	4	5	6	7	8
2015	14,527	766	417	152	62	20	27	11	7
2016	14,238	750	272	76	47	26	6	7	0
2017	13,953	636	203	65	39	11	11	5	0
2018	13,569	552	170	59	31	25	6	3	3
2019	12,734	479	138	59	38	2	8	2	0
2020	12,544	433	103	28	22	10	3	0	1
2021	15,719	623	163	55	19	1	5	6	0
합계	97,284	4,239	1,466	494	258	95	66	34	11

2016년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며, 박탈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14,238명으로 가장 많았다. 박탈경험이 8번 있었던 사람들은 그해에는 관측되지 않았다. 이러한 분포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21년에는 박탈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15,71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박탈경험이 8번 있었던 사람들은 관측되지 않았다.

종합적으로, 2015년부터 2021년까지의 기간 동안 박탈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박탈경험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그 수치는 줄어들었다. 박탈경험이 8번 있었던 사람들의 전체 합계는 11명으로 매우 적게 나타났다. 전체 기간 동안 관측된 사람들의 수는 103,947명이었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박탈경험이 없는 집단, 박탈경험이 1번 있는 집단, 박탈경험이 2번 이상 있는 집단 등 세 가지 집단으로 분류하여 주요한 변수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세 집단으로 분류하면 아래와 같은 표본이 만들어진다.

〈표 4-4〉 박탈경험 3가지 카테고리에 따른 기술분석

연도	박탈경험 없는 집단		박탈경험 1회 집단		박탈경험 2회 이상 집단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2015	14,527	90.9	766	4.8	696	4.4	15,989	100
2016	14,238	92.3	750	4.9	434	2.8	15,422	100
2017	13,953	93.5	636	4.3	334	2.2	14,923	100
2018	13,569	94.1	552	3.8	297	2.1	14,418	100
2019	12,734	94.6	479	3.6	247	1.8	13,460	100
2020	12,544	95.4	433	3.3	167	1.3	13,144	100
2021	15,719	94.7	623	3.8	249	1.5	16,591	100
합계	97,284	93.6	4,239	4.1	2,424	2.3	103,947	100

〈표 4-4〉의 박탈지수 경험에 따른 세 가지 집단의 연도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박탈지수는 특정 인구 집단이 사회적으로 박탈된 경험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었다.

박탈지수 경험이 없는 집단에서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의 연도별 인원은 각각 14,527명, 14,238명, 13,953명, 13,569명, 12,734명, 12,544명, 그리고 15,719명이었다. 연도별(=100%) 비중으로 보면, 물질적 박탈경험이 없는 집단은 매년 평균 93.7%(13,898명) 규모이다.

반면, 박탈지수 경험이 한 번 있는 집단의 경우, 연도별 인원은 2015년부터 순서대로 766명, 750명, 636명, 552명, 479명, 433명, 그리고 623명이었다. 연

도별(=100%) 비중으로 보면, 물질적 박탈경험이 1회 있는 집단은 전체의 4.1%(606명) 정도이다.

박탈지수 경험이 두 번 이상 있는 집단에서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연도별로 696명, 434명, 334명, 297명, 247명, 167명, 그리고 249명의 인원이 관측되었다. 연도별(=100%) 비중으로 보면, 물질적 박탈경험이 2회 이상인 집단은 전체의 2.3%(346명) 규모이다.

2015년부터 2021년 전체 기간 동안 박탈지수 경험이 없는 집단이 전체의 90%~95.4%를 차지하고 있으며, 박탈지수 경험이 1회인 집단은 3.3%~4.9%, 2회 이상 집단은 1.3%~4.4%로, 박탈지수 경험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 집단의 규모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박탈지수 경험이 한번 이상 있는 집단이 전체의 5%~9% 규모로 유지되고 있는 만큼 이들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2. 공적지원 특성

〈표 4-5〉에 따르면, 생계급여 수급 현황 분석을 통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박탈지수 경험에 따른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났다.

박탈지수 경험이 없는 집단에서는 전체적으로 생계급여를 받지 않는 비율이 약 94%로 매우 높았다. 특히 2019년에는 이 비율이 95.06%로 가장 높았으며, 이후 2021년에는 94.69%로 소폭 감소하였다. 반면 생계급여를 받는 비율은 전체적으로 5% 내외로 비교적 낮았다. 박탈지수 경험이 한 번 있는 집단에서는 생계급여를 받지 않는 비율이 70% 내외로 박탈지수 경험이 없는 집단보다는 낮았다. 특히 2016년에는 71.20%로 가장 낮았으며, 이후 2021년에는 73.68%로 소폭 상승하였다. 생계급여를 받는 비율은 25% 내외로 2021년에는 26.32%로 가장 높았다. 박탈지수 경험이 한 번 이상 있는 집단에서는 생계급여를 받지 않는 비율이 대체적으로 60%~70% 범위에서 변동하였다. 2019년에는 63.97%로 가장 낮았으며, 이후 2021년에는 69.08%로 상승하였다. 생계급여를 받는 비율은

30% 내외로 2020년에는 37.72%로 가장 높았다.

종합적으로 보면, 박탈지수 경험이 증가할수록 생계급여를 받는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박탈지수 경험이 한 번 이상 있는 집단에서는 생계급여를 받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사회적 박탈경험이 생계급여 수급 현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5〉 박탈경험에 따른 생계급여 수혜 여부

연도	박탈경험 무		박탈경험		박탈경험	
			한번 있는 집단		2번 이상	
	생계급여	생계급여	생계급여	생계급여	생계급여	생계급여
	경험 무	경험 유	경험 무	경험 유	경험 무	경험 유
2015	13720 (94.44%)	807 (5.56%)	571 (74.54%)	195 (25.46%)	485 (69.68%)	211 (30.32%)
2016	13468 (94.59%)	770 (5.41%)	534 (71.20%)	216 (28.80%)	286 (65.90%)	148 (34.10%)
2017	13181 (94.47%)	772 (5.53%)	475 (74.69%)	161 (25.31%)	217 (64.97%)	117 (35.03%)
2018	12814 (94.44%)	755 (5.56%)	406 (73.55%)	146 (26.45%)	202 (68.01%)	95 (31.99%)
2019	12105 (95.06%)	629 (4.94%)	343 (71.61%)	136 (28.39%)	158 (63.97%)	89 (36.03%)
2020	11880 (94.71%)	664 (5.29%)	315 (72.75%)	118 (27.25%)	104 (62.28%)	63 (37.72%)
2021	14885 (94.69%)	834 (5.31%)	459 (73.68%)	164 (26.32%)	172 (69.08%)	77 (30.92%)
합계	92053 (94.62%)	5231 (5.38%)	3103 (73.20%)	1136 (26.80%)	1,624 (67.00%)	800 (33.00%)

〈표 4-6〉은 박탈경험의 빈도에 따라 분류된 세 가지 집단의 의료급여 수혜 여부를 나타낸다.

박탈경험 없는 집단에서 2015년부터 2021년까지의 데이터를 보면, 대부분의 인원이 의료급여를 받지 않았다. 2015년에는 총 13,625명 중 93.79%가 의료급여

여를 받지 않았으며, 이 비율은 2021년에도 94.38%로 거의 변하지 않았다. 전체 기간 동안 이 집단의 의료급여 비수혜자는 약 93.96%를 차지했다.

박탈경험을 한 번 경험한 집단에서도 대부분의 인원이 의료급여를 받지 않았으나, 박탈경험이 없는 집단에 비해 의료급여 수혜자의 비율이 더 높았다. 2015년에는 73.37%가 의료급여를 받지 않았으며, 2021년에는 73.19%가 의료급여를 받지 않았다. 전체 기간 동안 이 집단의 의료급여 비수혜자는 약 71.22%를 차지했다.

박탈경험을 두 번 이상 경험한 집단에서는 의료급여 수혜자의 비율이 더 높았다. 2015년에는 68.39%만이 의료급여를 받지 않았고, 2021년에는 65.86%만이 의료급여를 받지 않았다. 전체 기간 동안 이 집단의 의료급여 비수혜자는 약 63.28%를 차지했다.

종합적으로, 박탈경험의 빈도가 증가할수록 의료급여 수혜자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이는 박탈경험이 빈번할수록 개인의 의료급여 필요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박탈경험이 빈번한 집단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6〉 박탈경험에 따른 의료급여 수혜 여부

연도	박탈경험 무		박탈경험 한번 있는 집단		박탈경험 2번 이상	
	의료급여 미수혜	의료급여 수혜	의료급여 미수혜	의료급여 수혜	의료급여 미수혜	의료급여 수혜
2015	13,625 (93.79%)	902 (6.21%)	562 (73.37%)	204 (26.63%)	476 (68.39%)	220 (31.61%)
2016	13,363 (93.85%)	875 (6.15%)	525 (70.00%)	225 (30.00%)	274 (63.13%)	160 (36.87%)
2017	13,066 (93.64%)	887 (6.36%)	470 (73.90%)	166 (26.10%)	199 (59.58%)	135 (40.42%)
2018	12,726 (93.79%)	843 (6.21%)	384 (69.57%)	168 (30.43%)	185 (62.29%)	112 (37.71%)
2019	12,014 (94.35%)	720 (5.65%)	320 (66.81%)	159 (33.19%)	146 (59.11%)	101 (40.89%)

연도	박탈경험 무		박탈경험 한번 있는 집단		박탈경험 2번 이상	
	의료급여 미수혜	의료급여 수혜	의료급여 미수혜	의료급여 수혜	의료급여 미수혜	의료급여 수혜
2020	11,776 (93.88%)	768 (6.12%)	302 (69.75%)	131 (30.25%)	90 (53.89%)	77 (46.11%)
2021	14,836 (94.38%)	883 (5.62%)	456 (73.19%)	167 (26.81%)	164 (65.86%)	85 (34.14%)
합계	91,406 (93.96%)	5,878 (6.04%)	3,019 (71.22%)	1,220 (28.78%)	1,534 (63.28%)	890 (36.72%)

〈표 4-7〉은 주거급여에 따른 박탈경험 집단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박탈경험이 없는 집단에서는 전체 기간 동안 약 94.08%의 사람들이 주거급여를 받지 않았으며, 오직 5.92%만이 주거급여를 받았다. 이는 박탈경험이 없는 사람들 대부분이 주거급여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반면, 박탈경험이 한 번 있는 집단에서는 주거급여를 받지 않는 사람들의 비율이 69.46%로, 박탈경험이 없는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비율은 30.54%로, 박탈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더욱 주목해야 할 점은 박탈경험이 두 번 이상 있는 집단이다. 이 집단에서 주거급여를 받지 않는 사람들의 비율은 61.92%로, 앞서 언급한 두 집단에 비해 가장 낮았다. 반면,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비율은 38.08%로, 가장 높았다.

또한, 주거급여에 따른 박탈경험 집단 분포를 살펴볼 때, 연도별로도 특징적인 변화가 관찰된다. 박탈경험이 없는 집단의 경우, 2015년에 주거급여를 받지 않는 사람들의 비율이 94.33%로 가장 높았으나, 2020년에는 93.64%로 약간 감소하였다. 반면,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5년의 5.67%에서 2020년의 6.36%로 소폭 증가하였다.

박탈경험이 한 번 있는 집단에서는, 2015년에 73.69%가 주거급여를 받지 않았으나, 2020년에는 이 비율이 64.67%로 감소하였다. 이에 반해,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5년의 26.31%에서 2020년의 35.33%로 상승하였다.

박탈경험이 두 번 이상 있는 집단의 경우, 2015년에 주거급여를 받지 않는 사

람들의 비율이 68.25%로 시작하여 2020년에는 53.29%로 크게 감소하였다. 반대로,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5년의 31.75%에서 2020년의 46.71%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연도별 변화를 통해, 시간이 지날수록 박탈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주거급여의 필요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박탈경험이 없는 집단과 비교했을 때, 박탈경험이 한 번 또는 그 이상 있는 집단에서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비율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박탈경험이 있을수록 주거급여의 필요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7〉 박탈경험에 따른 주거급여 수혜 여부

연도	박탈경험 없는 집단		박탈경험 1번 있는 집단		박탈경험 2번이상 있는 집단	
	주거급여 미수혜	주거급여 수혜	주거급여 미수혜	주거급여 수혜	주거급여 미수혜	주거급여 수혜
2015	13,693 (94.33 %)	823 (5.67 %)	563 (73.69%)	201 (26.31%)	475 (68.25%)	221 (31.75%)
2016	13,448 (94.45%)	790 (5.55%)	530 (70.67%)	220 (29.33%)	275 (63.36%)	159 (36.64%)
2017	13,142 (94.19%)	811 (5.81%)	471 (74.06%)	165 (25.94%)	194 (58.08%)	140 (41.92%)
2018	12,750 (93.96%)	819 (6.04%)	382 (69.20%)	170 (30.80%)	186 (62.63%)	111 (37.37%)
2019	12,000 (94.24%)	734 (5.76%)	316 (65.97%)	163 (34.03%)	140 (56.68%)	107 (43.32%)
2020	11,746 (93.64%)	798 (6.36%)	280 (64.67%)	153 (35.33%)	89 (53.29%)	78 (46.71%)
2021	14,737 (93.75%)	982 (6.25%)	401 (64.37%)	222 (35.63%)	142 (57.03%)	107 (42.97%)
합계	91,516 (94.08%)	5,757 (5.92%)	2,943 (69.46%)	1,294 (30.54%)	1,501 (61.92%)	923 (38.08%)

〈표 4-8〉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박탈경험에 따른 균등화 소득에 따른 가구 구분에 대한 통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여기서 중위소득 60%를 기준으로 이 소득보다 낮으면 저소득층 가구, 높으면 일반가구로 분류하였다.

박탈지수 경험이 없는 집단에서 대체로 일반 가구의 비율이 72%~75% 범위로 저소득층 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연도별로 봤을 때, 2015년에는 일반 가구의 비율이 74.48%로, 이는 2021년의 72.62%보다 약간 높았다.

박탈지수 경험이 한 번 있는 집단에서는 일반 가구와 저소득층 가구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특히, 2019년에는 저소득층 가구의 비율이 55.95%로 일반 가구보다 높게 나타났다.

박탈지수 경험이 두 번 이상 있는 집단에서는 저소득층 가구의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특히, 2016년에는 저소득층 가구의 비율이 81.34%로 매우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박탈경험이 두 번 이상 있는 집단에서 일반 가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박탈지수의 횟수에 따라 균등화 소득에 따른 가구 구분의 비율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박탈지수 경험이 없는 집단에서는 일반 가구의 비율이 높았으며, 박탈지수 경험이 두 번 이상 있는 집단에서는 저소득층 가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박탈지수의 횟수와 가구의 소득 수준 사이에 연관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표 4-8〉 균등화소득에 따른 가구구분(중위소득 60% 기준)

연도	박탈경험 무		박탈경험 한번 있는 집단		박탈경험 2번 이상	
	일반가구	저소득층 가구	일반가구	저소득층 가구	일반가구	저소득층 가구
2015	10,820 (74.48%)	3,707 (25.52%)	366 (47.78%)	400 (52.22%)	184 (26.44%)	512 (73.56%)
2016	10,531 (73.96%)	3,707 (26.04%)	355 (47.33%)	395 (52.67 %)	81 (18.66%)	353 (81.34%)

연도	박탈경험 무		박탈경험 한번 있는 집단		박탈경험 2번 이상	
	일반가구	저소득층 가구	일반가구	저소득층 가구	일반가구	저소득층 가구
2017	10,182 (72.97%)	3,771 (27.03%)	322 (50.63%)	314 (49.37%)	67 (20.06%)	267 (79.94%)
2018	9,952 (73.34%)	3,617 (26.66%)	263 (47.64%)	289 (52.36%)	60 (20.20%)	237 (79.80%)
2019	9,238 (72.55%)	3,496 (27.45%)	211 (44.05%)	268 (55.95%)	53 (21.46%)	194 (78.54%)
2020	9,041 (72.07%)	3,503 (27.93%)	205 (47.34%)	228 (52.66%)	36 (21.56%)	131 (78.44%)
2021	8,712 (72.62%)	3,285 (27.38%)	216 (46.75%)	246 (53.25%)	56 (28.87%)	138 (71.13%)
합계	68,476 (73.19 %)	25,086 (26.81 %)	1,938 (47.52%)	2,140 (52.48%)	537 (22.67%)	1,832 (77.33%)

〈표 4-9〉는 박탈경험이 없는 집단에서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전체적으로 만성질환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의 비율이 43.51%에서 52.65% 사이로 변동하였다. 특히 2021년에는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이 56.49%로 상승하였는데, 이는 이전 연도들에 비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전체 기간 동안 만성질환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의 평균 비율은 약 48.93%로,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평균 비율과 큰 차이가 없었다.

박탈경험이 한 번 있었던 집단에서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만성질환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의 비율이 35.63%에서 47.78% 사이로 변동하였다. 전체 기간 동안 만성질환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의 평균 비율은 39.56%로,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평균 비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박탈경험이 두 번 이상 있었던 집단에서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만성질환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의 비율이 24.90%에서 40.07% 사이로 변동하였다. 특히 2021년에는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이 75.10%로 상승하였는데, 이는 이전 연도들에 비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전체 기간 동안 만성질환을 가지

지 않은 사람들의 평균 비율은 35.64%로,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평균 비율에 비해 상당히 낮았다.

세 가지 집단 모두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박탈경험이 두 번 이상 있었던 집단에서는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이 특히 높게 나타났으며, 박탈경험의 횟수와 만성질환의 유무의 관련성이 시사되었다.

〈표 4-9〉 박탈경험에 따른 만성질환 유무

연도	박탈지수 경험이 없는 집단		박탈지수 경험이 한 번 있는 집단		박탈지수 경험이 두 번 이상 있는 집단	
	만성질환 없음	만성질환 있음	만성질환 없음	만성질환 있음	만성질환 없음	만성질환 있음
2015	7,649 (52.65%)	6,878 (47.35%)	314 (40.99%)	452 (59.01%)	278 (39.94%)	418 (60.06%)
2016	7,531 (50.16%)	7,076 (49.84%)	286 (38.13%)	464 (61.87%)	142 (32.72%)	292 (67.28%)
2017	6,891 (49.39%)	7,062 (50.61%)	260 (40.88%)	376 (59.12%)	129 (38.62%)	205 (61.38%)
2018	7,010 (51.66%)	6,559 (48.34%)	252 (45.65%)	300 (54.35%)	119 (40.07%)	178 (59.93%)
2019	6,229 (48.92%)	6,505 (51.08%)	178 (37.16%)	301 (62.84%)	77 (31.17%)	170 (68.83%)
2020	5,843 (46.58%)	6,701 (53.42%)	165 (38.11%)	268 (61.89%)	57 (34.13%)	110 (65.87%)
2021	6,839 (43.51%)	8,880 (56.49%)	222 (35.63%)	401 (64.37%)	62 (24.90%)	187 (75.10%)
합계	47,603 (48.93%)	49,681 (51.07%)	1,677 (39.56%)	2,562 (60.44%)	864 (35.64%)	1,560 (64.36%)

〈표 4-10〉은 근로능력에 따른 집단 분류를 기준으로 2015년부터 2021년까지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박탈경험이 없는 집단에서는 연간 평균 약 26.86%인 26,128명이 근로능력이 없다. 반면, 약 73.14%인 71,156명이 근로능력이 있다. 박탈경험이 한 번 있는 집단에서는 연간 평균 약 35.57%인 1,508

명이 근로능력이 없고, 약 64.43%인 2,731명이 근로능력이 있다. 마지막으로 박탈경험이 두 번 이상 있는 집단에서는 연간 평균 약 43.44%인 1,053명이 근로능력이 없고, 약 56.56%인 1,371명이 근로능력이 있다. 이 결과를 통해 박탈경험이 없는 집단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로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박탈경험이 한 번 또는 그 이상 있는 집단에서는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10〉 박탈경험에 따른 근로역량 유무

연도	박탈경험 없는 집단		박탈경험 한 번 있는 집단		박탈경험 두 번 이상 있는 집단	
	근로능력 무	근로능력 유	근로능력 무	근로능력 유	근로능력 무	근로능력 유
2015	3809 (26.22%)	10718 (73.78%)	265 (34.60%)	501 (65.40%)	291 (41.81%)	405 (58.19%)
2016	3697 (25.97%)	10541 (74.03%)	267 (35.60%)	483 (64.40%)	175 (40.32%)	259 (59.68%)
2017	3891 (27.89%)	10062 (72.11%)	223 (35.06%)	413 (64.94%)	155 (46.41%)	179 (53.59%)
2018	3750 (27.64%)	9819 (72.36%)	197 (35.69%)	355 (64.31%)	138 (46.46%)	159 (53.54%)
2019	3531 (27.73%)	9203 (72.27%)	181 (37.79%)	298 (62.21%)	103 (41.70%)	144 (58.30%)
2020	3329 (26.54%)	9215 (73.46%)	157 (36.26%)	276 (63.74%)	79 (47.31%)	88 (52.69%)
2021	4121 (26.22%)	11598 (73.78%)	218 (34.99%)	405 (65.01%)	112 (44.98%)	137 (55.02%)
합계	26128 (26.86%)	71156 (73.14%)	1508 (35.57%)	2731 (64.43%)	1053 (43.44%)	1371 (56.56%)

3. 정신건강 특성

〈표 4-11〉은 박탈경험의 유무와 빈도에 따른 만족도 값을 분석한 결과, 전체 총합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은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가족의 수입만족도’에서 박탈경험이 없는 집단의 평균 만족도는 3.09로 나타났다. 그러나 박탈경험이 한 번 있는 집단에서는 이 값이 2.46으로 감소하였고, 박탈경험이 한 번 이상 있는 집단에서는 더욱 감소하여 2.11로 나타났다. 이로써 박탈경험이 없는 집단과 한 번 이상 있는 집단 사이의 ‘가족의 수입만족도’ 평균 차이는 0.98로 가장 큰 편차를 보였다.

또한 ‘건강만족도’에서 박탈경험이 없는 집단의 평균 만족도는 3.29로 측정되었다. 반면 박탈경험이 한 번 있는 집단에서는 이 값이 2.86으로 감소하였으며, 박탈경험이 한 번 이상 있는 집단에서는 2.57로 더욱 감소하였다. 따라서 박탈경험이 없는 집단과 한 번 이상 있는 집단 사이의 ‘건강만족도’ 평균 차이는 0.72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박탈경험의 유무와 빈도가 ‘가족의 수입만족도’와 ‘건강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가족의 수입만족도’에서는 박탈경험의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한편 박탈경험의 유무와 빈도에 따른 만족도 평균값을 분석한 결과, ‘여가만족도’에서 차이가 가장 작게 나타났다. 박탈경험이 없는 집단에서 ‘여가만족도’의 평균은 3.35로 나타났다. 반면 박탈경험이 한 번 있는 집단에서는 이 값이 2.99로 감소하였으며, 박탈경험이 한 번 이상 있는 집단에서는 2.81로 더욱 감소하였다. 따라서 박탈경험이 없는 집단과 한 번 이상 있는 집단 사이의 ‘여가만족도’ 평균 차이는 0.54로, 비교적 작은 편차를 보였다.

이외의 다른 만족도 항목들에서도 박탈경험의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만족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박탈경험의 존재와 빈도가 각 항목별 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4-11〉 박탈경험에 따른 만족도 차이(5점 만점 전체 평균)

연도	건강	가족 수입	주거 환경	가족	직업	사회적 친분	여가	전반
박탈경험 없는 집단								
2015	3.33	3.04	3.66	3.95	3.52	3.80	3.42	3.66
2016	3.29	3.06	3.65	3.92	3.49	3.75	3.37	3.61
2017	3.33	3.06	3.65	3.88	3.48	3.75	3.41	3.62
2018	3.25	3.06	3.65	3.91	3.50	3.76	3.39	3.62
2019	3.32	3.15	3.70	3.91	3.48	3.71	3.34	3.60
2020	3.24	3.13	3.69	3.92	3.48	3.69	3.21	3.56
2021	3.24	3.15	3.71	3.93	3.50	3.72	3.34	3.61
합계	3.29	3.09	3.67	3.92	3.49	3.74	3.35	3.61
박탈경험 한번 있는 집단								
2015	2.87	2.37	3.23	3.61	3.14	3.47	3.01	3.19
2016	2.84	2.44	3.24	3.57	3.08	3.40	2.98	3.18
2017	2.90	2.49	3.17	3.54	3.12	3.41	3.04	3.14
2018	2.82	2.43	3.11	3.55	3.08	3.43	3.09	3.19
2019	2.91	2.56	3.27	3.59	3.13	3.50	2.97	3.18
2020	2.85	2.52	3.23	3.53	3.13	3.34	2.90	3.10
2021	2.82	2.47	3.23	3.48	3.03	3.37	2.89	3.09
합계	2.86	2.46	3.21	3.56	3.10	3.42	2.99	3.16
박탈경험 두번이상 있는 집단								
2015	2.70	2.19	3.01	3.40	2.82	3.28	2.81	2.93
2016	2.56	2.06	3.04	3.13	2.86	3.25	2.87	2.91
2017	2.43	2.00	2.92	3.30	2.69	3.17	2.81	2.77
2018	2.45	2.06	3.04	3.31	2.84	3.19	2.82	2.97
2019	2.61	2.15	3.10	3.26	2.76	3.28	2.78	2.89
2020	2.54	1.99	3.04	3.16	2.86	3.27	2.68	2.83
2021	2.52	2.20	3.18	3.19	2.85	3.23	2.81	2.89
합계	2.57	2.11	3.04	3.27	2.81	3.24	2.81	2.89

〈표 4-12〉는 개인의 박탈경험 집단에 따른 정신건강, 자살생각과 우울점수를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박탈경험이 없는 집단의 경우 평균 자살생각 비율이 약 0.02로 나타났으며, 우울점수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의 기간 동안 5.70에서 6.54 사이에서 변동하였다.

한편, 박탈경험을 한 번 경험한 집단에서는 자살생각의 비율이 0.06에서 0.05 사이에서 변동하였으며, 우울점수는 10.58에서 12.65 사이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박탈경험을 두 번 이상 경험한 집단에서는 2015년에 0.14였던 자살생각의 비율이 2021년에는 0.07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우울점수는 14.36에서 16.93 사이에서 상승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박탈경험의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우울증상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박탈경험을 여러 번 경험한 집단에서는 자살생각의 비율이 평균 0.12로 박탈경험이 없는 집단에 견줘 6배, 한번 있는 집단에 비해서도 2배 이상 높았다. 우울점수 역시 박탈경험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박탈경험의 빈도와 종류, 그리고 정신건강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4-12〉 박탈경험 집단에 따른 정신건강(전체 평균)

연도	박탈경험 없는 집단		박탈경험 1번 있는 집단		박탈경험 2번 이상 있는 집단	
	자살생각	우울점수	자살생각	우울점수	자살생각	우울점수
2015	0.02	5.7	0.06	10.58	0.14	14.36
2016	0.02	5.57	0.06	12.07	0.13	15.9
2017	0.02	5.9	0.07	12.07	0.16	15.82
2018	0.02	5.79	0.07	11.21	0.09	15.61
2019	0.01	6.16	0.06	10.65	0.14	17.56
2020	0.02	6.74	0.05	12.35	0.08	16.13
2021	0.01	6.54	0.05	12.65	0.07	16.93
합계	0.02	6.06	0.06	11.65	0.12	15.72

제3절 박탈경험 집단별 정신건강 영향요인 분석

1. 패널분석 방법

이 연구의 한국복지패널데이터 활용을 통한 박탈경험 패널분석을 위해 패널데이터 분석 방법 중 고정효과 모델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패널데이터는 다수의 개체 또는 집단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 간의 차이와 고유한 특성을 상세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정효과 모델은 각 개체나 집단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이러한 차이를 모델링하는 데 유용하다. 특히, 한국 복지패널데이터와 같이 개체나 집단의 특성, 예를 들면 가구 수입, 교육 수준, 거주 지역 등이 연구 주제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경우, 이러한 특성들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중요하다.

또한, 고정효과 모델은 시간에 따른 변화를 개체나 집단의 고유 특성 외부 변화로 간주하여 분석할 수 있다. 이는 패널데이터의 주된 장점 중 하나인 시간에 따른 변화를 캡처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관찰되지 않는 개체나 집단의 고유 특성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면서 독립 변수들의 순수한 영향을 추정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더불어, 고정효과 모델은 패널데이터의 결측데이터 문제를 상대적으로 잘 처리하며, 독립 변수와 오차 항 사이의 내재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다.

그러나 고정효과 모델의 선택에는 몇 가지 한계도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변수의 영향을 직접 추정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연구의 목적과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이 모델의 적합성을 신중히 평가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다른 모델과의 비교 및 통합을 고려해야 한다.

2. 패널분석 결과

〈표 4-13〉 박탈경험 집단별 정신건강 영향요인 패널분석 결과

구분	모델1 박탈경험 독립변수 포함	모델2 박탈경험 없는 집단	모델3 박탈경험 1번 집단	모델4 박탈경험 2번 이상	모델5 박탈경험+ 생계급여 미수급
종속변수	우울	우울	우울	우울	우울
임금로그함수	-0.110 (0.0877)	-0.115 (0.0877)	-0.242 (0.936)	0.853 (1.359)	0.332 (0.745)
교육수준 (고졸)	2.905** (1.292)	2.071 (1.279)	2.018 (8.346)	18.11* (10.58)	18.08* (9.288)
교육수준 (대학)	2.294* (1.367)	1.651 (1.356)	0.21 (0.521)	21.03* (11.91)	18.59* (10.32)
질병 있음	0.762*** (0.0823)	0.771*** (0.0821)	0.222 (0.845)	-1.088 (1.337)	-0.0061 (0.680)
저소득층 가구	0.645*** (0.119)	0.564*** (0.120)	2.231* (1.138)	4.383** (1.828)	1.665* (0.879)
생계급여 수혜	-0.993** (0.425)	-1.084** (0.490)	2.993 (2.235)	3.151 (3.135)	
의료급여 수혜	-0.116 (0.415)	0.335 (0.458)	0.395 (2.435)	-9.979*** (3.686)	-1.797 (1.960)
주거급여 수혜	1.642*** (0.369)	1.518*** (0.428)	-1.968 (1.961)	7.629*** (2.878)	2.567* (1.464)
음주량	-0.0529 (0.0352)	-0.0458 (0.0352)	0.461 (0.360)	-1.734*** (0.544)	0.0908 (0.315)
근로능력 있음	-2.684*** (0.103)	-2.643*** (0.106)	-4.701*** (0.925)	-0.446 (1.100)	-2.16*** (0.830)
박탈경험 있음	1.314*** (0.0659)				0.890*** (0.228)
상수	7.276*** (1.083)	7.460*** (1.087)	14.06* (7.986)	-0.401 (12.12)	-2.008 (8.270)
관측 총수	78,679	73,489	3,305	1,885	3,661
그룹	14,412	14,180	2,126	1,235	2,120
R-squared	0.020	0.014	0.031	0.042	0.022

* 주: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1) 모델 1: 전체표본 + 박탈경험 독립변수 분석 결과

패널분석 모델1은 전체 표본에 박탈경험 독립변수를 포함시킨 것이다. 2015년부터 2021년까지의 한국복지패널데이터를 사용하여 우울 변수(d12)에 대한 여러 독립변수들의 영향을 고정효과 모델로 분석하였다.

로그 변환된 소득(ln_income)은 우울 변수에 대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육 더미 변수(i.ed)를 통해 교육 수준이 2와 3일 때, 우울 변수에 대해 유의하게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 변수(i.dis)는 우울 변수에 대해 유의하게 양의 영향을 미쳤으며, 질병이 있는 경우 우울 변수는 약 0.7623 단위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저소득층(i.h_hc_all), 생계급여 수급(i.pb), 의료급여 수급(i.hb), 주거급여 수급(i.rb), 음주량(dr), 근로 역량이 있는 경우(i.work), 그리고 박탈경험(x11) 변수들도 우울 변수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 분석 결과는 총 78,679개의 관측치와 14,412개의 그룹으로 구성된 데이터에서 얻어진 것이며, 그룹 내 R-squared 값은 0.0203으로 나타났다.

2) 모델 2: 박탈경험 없는 집단 분석 결과

박탈경험이 없는 집단에 대한 패널분석 결과를 통해, 여러 독립변수들이 우울 변수(d12)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 분석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의 한국복지패널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되었다.

분석 결과, 로그 변환된 소득(ln_income)은 우울 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계수는 약 -0.1153으로, 소득의 증가가 우울도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내지만, 그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교육 더미 변수(i.ed)를 통한 분석에서 교육 수준이 2와 3일 경우, 우울 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우울을 더 느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질병 변수(i.dis)의 계수인 0.7710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저소득층(i.h_hc_all)의 경우, 우울 변

수에 대해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으며, 그 계수는 0.5636이었다. 생계급여 수급자(i.pb)는 우울 변수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그 계수는 -1.0844였다. 반면, 의료급여 수급(i.hb)은 우울 변수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주거급여 수급(i.rb)은 계수 1.5180으로, 우울 변수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량(dr)은 우울 변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그 계수는 -0.0458이었다. 근로 역량이 있는 경우(i.work)는 우울 변수에 대해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계수는 -2.6431이었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해 박탈경험이 없는 집단에서도 다양한 사회경제적, 건강 관련 변수들이 우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었다.

3) 모델 3: 박탈경험 1번 있는 집단 분석 결과

박탈경험이 한 번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2021년까지의 한국복지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우울 변수(d12)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몇 가지 주요한 발견이 있었다.

저소득층(i.h_hc_all)이 우울 변수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모델 2의 결과와 일치한다. 근로 역량이 있는 경우(i.work)는 우울 변수에 대해 매우 크고 유의하게 음의 영향을 미쳤다. 이 역시 모델 2의 결과와 일치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박탈경험이 한 번 있는 집단에서는 교육 더미 변수, 질병 변수, 생계급여 수급, 의료급여 수급, 주거급여 수급, 음주량 등의 변수들이 우울 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델 2와의 차이점으로, 박탈경험의 유무에 따라 해당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총괄적으로 박탈경험이 한 번 있는 집단에서는 저소득층과 근로 역량이 우울 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탈경험이 없는 모델 2의 결과와 일치하며, 이러한 변수들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4) 모델 4: 박탈경험 2번 이상 있는 집단 분석 결과

모델 4는 박탈경험이 두 번 이상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한 패널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이 모델에서는 박탈경험이 두 번 이상 있는 집단에 대한 우울점수와 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의료급여 수급(1.hb)과 주거급여 수급(1.rb)이 우울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각각 음의 관계와 양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2.h_hc_all)은 우울점수와 양의 관계를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박탈경험이 두 번 이상 있는 집단에서 의료급여 수급이 낮을수록, 주거급여 수급이 높을수록 우울점수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에 속한 집단에서 더 높은 우울점수가 나타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모델은 박탈경험과 우울점수 간의 관련성을 명확히 하며, 의료급여, 주거급여, 그리고 저소득층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중요한 결과를 제시한다.

5) 모델 5: 박탈경험 있으나 생계급여 못 받은 집단 분석 결과

모델 5는 박탈경험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2015년 이후로 생계급여를 받지 않은 집단, 즉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는 표본을 대상으로 패널데이터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때, 고정효과 모델을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수입의 로그 변환 값은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교육 수준에 따라 만족도에 차이가 나타났으며, 특히 고등학교와 대학 졸업자의 만족도는 참조 카테고리에 비해 높았다.

질병 유무는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반면, 저소득층 여부와 주거급여 수급 여부는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특히, 주거급여 수급 여부에 따른 만족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만족도는 더 낮게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박탈경험이 있을수록 만족도가 높아진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박탈경험의 존재와 그 횟수가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제4절 소결

본 장에서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박탈경험의 빈도에 따른 사회적 지표와 정신건강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박탈경험의 빈도가 증가할수록 여러 사회적 지표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났다.

사회 내에서 다양한 박탈경험은 개인의 생활 만족도, 정신건강, 그리고 사회적 지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박탈경험의 빈도와 그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5년부터 2021년까지의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박탈경험의 빈도에 따라 의료급여와 주거급여 수혜 비율, 균등화 소득에 따른 가구 구분, 그리고 만성질환의 비율, 자살생각의 비율, 우울점수 등의 사회적 지표와 정신건강 지표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박탈경험의 빈도가 증가할수록 의료급여 수혜는 줄었으나, 주거급여 수혜 비율은 증가하였으며, 저소득층의 비율도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박탈경험의 빈도가 높을수록 만성질환의 비율과 자살생각의 비율, 우울점수가 상승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박탈경험의 빈도가 사회적 지표와 정신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며, 박탈경험의 빈도와 종류, 그리고 정신건강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를 통해 박탈경험이 빈번한 사람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의 필요성을 확인하였으며,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박탈경험자들이 복지 제도의 주요 대상이 되어야 하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었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주요 원인 중 하나로는 지자체별 재량권의 차이가 있다. 중앙정부의 지원 기준과 지방정부의 자유재량이 충돌하는 경우,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자의 선정 기준이나 지원 내용이 달라져 일부 시민들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자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제5장

복지 사각지대 사망사건 언론보도 사례 분석

제1절 연구 개요

제2절 복지 사각지대 사망사건
유형화와 위기 진단

제3절 소결



제 5 장 복지 사각지대 사망사건 언론보도 사례 분석

제1절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지속적으로 사각지대 발굴을 확대·강화하는 정부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복지 사각지대로 인한 비극적 사건은 올해에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도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노모와 50대 딸이 채무부담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였으며,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는 30대 남성이 경기도 군포시에서는 한 빌라에서 80대 노모와 50대 아들이 숨진 지 일주일이나 지나 부패된 상태에서 발견되었고, 전기세도 내지 못해 단전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경기신문, 2013).

이렇게 정부의 점층 강화되는 대책에도 불구하고 매해 복지 사각지대 사망사건은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드러나는 사망사건들은 과연 어떠한 요인들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며, 현재 정부가 내놓는 대책의 방향처럼 발굴의 확대·강화로 해결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러한 사건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은 없었다.

따라서 복지 사각지대 문제들이 주로 언론을 통해 드러나고 알려진다는 점을 착안하여 언론보도를 통해 주요한 복지 사각지대 사건들을 추출해 내고, 그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각기의 사건을 재구성해 보고자 하였다. 이 내용의 분석을 통해 내용과 위기의 배경, 발굴의 가능성이나 문제, 그 외 복지급여 등 복지지원 등의 경험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의 현실과 실태에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고, 그에 합당한 정책적 대응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방법

분석대상 언론보도는 전국 주요일간지(한겨레, 중앙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와 방송사(KBS, MBC, SBS, OBS, YTN), 지역일간지(강원일보, 전북일보, 대전일보, 경상일보, 충청일보, 중부일보, 영남일보, 한라일보, 경남도민일보 등 28개)를 대상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의 보도를 대상으로 하였다. 뉴스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인 빅카인즈(www.bigkinds.or.kr)를 활용하여 생활고, 사각지대, 위기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와 관련된 검색어와 함께 주로 자살로 나타난 사망사건들의 특징을 착안하여 언론상 표현된 ‘극단적 선택’을 결합하여 기사를 검색하였다. 검색과정에서 복지 사각지대와 관련된 검색어는 추가하되 반드시 ‘극단적 선택’을 포함하도록 하면서 검색 범위를 확장하였다.

이러한 검색 과정에서 추출되는 사건 중 전국 주요 일간지에 모두 보도된 사건을 우선 주요한 복지 사각지대 사건이라고 판단하고 이러한 사건 중에서도 단순 사건보도를 넘어 사건의 배경이나 원인 등에 대한 후속기사가 이어진 사건을 선별하였다. 이러한 사건은 그만큼 언론의 주목을 받은 중요한 사건이라는 의미이기도 했고, 이러한 보도를 통해 사건을 재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선정된 사건에 대한 기사가 빅카인즈 검색으로 부족한 경우 별도로 사건 관련 키워드를 활용한 네이버 기사 검색을 통해서 보충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총 35개 사건과 450개 기사를 추출하였다. 이상의 과정은 <표 5-1>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추출된 기사를 질적분석 소프트웨어인 Atlas.ti를 활용하여 사건별로 분류하고 사건개요, 가구(육구)특성, 위기배경, 가족이나 이웃 등 주변관계, 사회보장 급여나 지원 경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여부, 연체 등 위기징후, 발굴이 안된 원인이나 문제, 학교나 복지시설 등 관련된 공적체계 등에 대한 내용으로 코딩하고 분석하였다.

분석한 내용은 사건별로 사건개요, 신고상황, 사망원인, 위기배경, (체납 등) 위기징후, 주변관계, 공적급여나 지원경험, 발굴과 관련된 문제, 관련된 공적체계 등에 대한 정보를 언론 보도내용을 최대한 모아 재구성하였다. 우리나라 언론보

도의 특성상 서로 다른 언론들이 동일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반복하면서 약간의 추가적인 취재내용을 추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출처구분을 따로 하지는 않았다. 때로는 사실관계가 언론이나 보도에 따라 약간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었지만 직접적인 취재내용으로 반영된 경우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였다.

〈표 5-1〉 언론보도 복지 사각지대 사건 및 기사 추출

항목	내용	
조사 기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보도된 사건	
대상 언론	주요 일간지	한겨레, 중앙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주요 방송사	KBS, MBC, SBS, OBS, YTN
	지역 일간지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경기일보, 경남도민일보, 경남신문, 경상일보, 경인일보, 광주매일신문, 광주일보, 국제신문, 대구일보, 대전일보, 매일신문, 무등일보, 부산일보, 영남일보, 울산매일, 전남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북일보, 제민일보, 중도일보, 중부매일, 중부일보, 충북일보, 충청일보, 충청투데이, 한라일보
검색어	생활고, 사각지대, 위기가구, 복지, 자살, 체납, 투병, 병간호, 우울증, 기초생활수급자, 사망 + 극단적 선택	
선정 기준	주요일간지 모두에 보도된 기사 중 후속기사가 보도된 사건을 선정. 단순 보도는 제외	
선정 결과	35개 사건 450개 기사	

제2절 복지 사각지대 사망사건 유형화와 위기 진단

1. 복지 사각지대 사망사건의 위기유형

주요 복지 사각지대 사망사건으로 선정된 35건의 사건을 하나의 기준으로 유형화하기는 쉽지가 않다. 대다수의 사건들이 복합적인 위기 요인을 안고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선별한 주요 사건들은 우선 사망에 이르게 된 가장 핵심적인 위기를 중심으로 구분해 보았다. 다양한 사망 원인 중에서도 사건의 특성을 명확히 드러낼 수 있도록 유형화해보면, 크게 독박돌봄, 한부모가구, 가계몰락, 과다채무, 만성빈곤, 독거가구, 보호종료(중단)청년으로 구분해 볼 수 있었다. 이 중 독박돌봄 유형이 35건 중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한부모가구 유형이 10건, 가계몰락 유형이 5건으로 뒤를 이었다. 나머지 유형은 각각 2건씩 해당되었다. 각 유형별 사건들을 재구성하여 요약한 내용은 <표 5-2>와 같다.

그중 가장 많은 독박돌봄 유형은 중증장애나 중증질환, 치매를 가지고 있는 가족이나 영아 등을 홀로 돌보다가 사망에 이른 경우들이 해당된다. 한부모가구 유형은 주로 이전의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주소득자와 이혼 또는 별거하게 된 이후 한부모가구가 되어 지속적으로 경제 사정이 악화되거나, 정신적인 문제를 경험하다 사망에 이른 사건들이다. 그다음 가계몰락 유형은 사업실패나 투자실패 등으로 급격하게 가계 상황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경우들이다. 가계몰락 유형에서도 주소득자가 사망, 별거하는 경우가 있지만 한부모가구 유형과 달리 사업실패 등의 상황이 선행된 후 일어나는 점이 다르다.

과다채무 유형은 특별한 요인 없이 과도한 채무에 시달린 정황이 두드러진 경우, 만성빈곤은 직업불안정, 질환 등으로 계속 빈곤을 경험하다가 사망에 이른 경우로 구분하였다. 독거가구의 경우는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혼자 살다가 사망에 이른 경우들이고, 보호종료(중단)청년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청년이 자살한 사건들이다.

〈표 5-2〉 위기유형별 복지 사각지대 사망사건 재구성(요약)

위기유형	사건명	사건개요	위기배경	발굴·공적금여·민간지원 정보
독박 돌봄	구미 원로 부자 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8년 5월 3일 구미 한 원로에서 아버지(28)와 아들(생후 16개월 추정)이 숨진 지 2~3일로 보이는 상태에서 발견 세입자와 연락이 안 된다는 집주인의 부탁을 받은 부동산 중개인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냉장고가 비어있고, 음식을 조리 흔적도 없었으며, 아버지와 아기는 질환으로 인한 사망 추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5년경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여자인 구(28)와 동거를 시작하고, 수개월 전 헤어진 후 아기를 혼자서 양육하던 상태였음 23.1㎡ 원룸은 여자친구 명의로 되어있었으며 부모와는 7년 전부터 연락을 끊고 살았고, 여자친구가 떠난 후에는 외 부전축을 끊고 은둔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세 2개월 연체, 단가스 상태였지만 아버지는 주민등록상 대가로 되어있고, 거주불명자로 주민등록 말소 상태였으며, 아이는 출생신고도 안 된 상태였음
	전북 남원 부자 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8년 7월 3일 전북 남원시 한 주택에서 아버지(71)와 아들(37)이 나란히 누워 부패 정도로 보아 숨진 지 한 달 이상 지난 후 발견 집주인이 주민센터에 연락하여 담당 공무원과 함께 방문하여 발견하였으며 현금 120만 원과 함께 “죄송합니다”라는 유언이 적힌 봉투가 발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머니는 30년 전 사망하였고, 아버지는 2009년경 뇌경색으로 쓰러져 뇌병변 3급 장애가 있는 상태였으며 아들은 결핵을 앓으면서 이웃과 교류도 단절된 상태였음 아들은 2013년 자활사업에도 참여했지만 6개월 일하다가 2년 병 때문에 그만두고, 병원의료 외에 극심한 우울증이 있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가구로 아버지는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었고, 병원비 치료지출, 신장투석,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식료품 지원, 아들 심리검사 및 치료 등도 지원받음 아버지 뇌병변 장애 재심과정에서 확인 불가 판정을 받아 장애수당이 중지되었고, 2017년 11월, 12월에 생활고를 호소한 상담기록이 있음
	부산 남구 노부부 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8년 11월 부산 남구 한 빌라에서 아버지(81)와 어머니(73)가 숨져있는 것을 아들이 발견하였으며 메모 형식의 유서가 발견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9년경부터 아버지는 병광암 투병, 2015년경부터 어머니는 스테로이드증 추군이 발병하여 미혼 아들이 간병, 어머니는 2년 전 자살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3년 아버지 노인일자리 참여 경향이 있고, 민간 생 지원, 의료비 지원 등을 받았지만 2015년, 2017년 기초보장 신청했으나 탈락
	종량구 모녀 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9년 1월 3일 서울시 종량구 반지하 셋방에서 어머니(82)와 딸(56)이 숨진 채 발견 이사 예정일에 집주인이 발견하였으며 모두 질식사 부검 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치매를 앓는 어머니와 딸이 10년간 단 둘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딸은 대학 시절부터 대인기피증이 있어 특별한 직업이 없었으며 8남매 중 막내였지만 나머지 형제들과 연락하고 지내지는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33㎡ 반지하 월세를 내지 못해 보증금에서 차감되고 있었으며 어머니는 기초 연금을 수급하고 있었음

위기유형	사건명	사건요	위기배경	발굴·공적급여·민간지원 정보
	창주 치매 아버지 살해 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9년 2월 21일 충북 청주시 아파트 화단에서 아들(49)이, 1.5km 떨어진 아파트에서는 아버지(85)가 숨진 채 발견 지나가던 주민이 아들을 먼저 발견하였으며,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한 후 자살한 것으로 추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년 전 아들은 직장을 그만두고 치매와 척추협착증을 앓고 있는 아버지를 간병해 왔으며 최근 아버지가 심근경색에 걸리면서 급격히 악화됨 며느리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며, 나머지 형제들도 생활비를 지원했지만 아들은 가족들에게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해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굴·공적급여 수급자이자 응급안전 서비스 대상자였지만 동작감지센서에 움직임이 없는지 일주일 후에야 확인하고 주말이 지나 방문하여 사망사실을 발견 주민센터에서 명절마다 쌀이나 부식을 지원하고, 한 달에 한 번 통장이 쓰러기 봉투를, 민간 봉사단이 반찬을 전달했지만, 부엌에 놓고 가는 경우가 많았음
	광주 다문화 부부 사망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년 1월 6일 광주 남구 한 주택에서 남편(62)과 아내(56)가 숨져있는 것을 응급알림서비스를 담당 직원이 집을 찾아가 발견 남편과 아내가 침대 옆 바닥에 이불이 덮인 채 숨져있어 아내가 뇌출혈로 쓰러진 후 뇌병변 장애가 있는 남편이 이불을 덮어주려다 침대에서 떨어져 자책은 증으로 사망 추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편은 2004년 필리핀 출신 아내와 결혼한 다음해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되었는데 2015년 교통사고로 뇌병변 장애를 가지게 되어 일상 생활을 해옴 아내는 16년 동안 한국에 지내면서도 한국어가 서툴 정도로 외부 접촉이 없었으며, 인근에 사는 남편 동생과 함께 남편을 돌보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이자 응급안전 서비스 대상자였지만 동작감지센서에 움직임이 없는지 일주일 후에야 확인하고 주말이 지나 방문하여 사망사실을 발견 주민센터에서 명절마다 쌀이나 부식을 지원하고, 한 달에 한 번 통장이 쓰러기 봉투를, 민간 봉사단이 반찬을 전달했지만, 부엌에 놓고 가는 경우가 많았음
	치매노인 아들 사망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년 1월 5일 경기도 용인시 다세대 주택에서 사망했지만 치매 어머니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생활하다 발견 월세가 밀려 집주인이 찾아갔다가 발견하였으나 마지막 카드사용 기록이 2019년 11월이어서 그즈음 사망한 것으로 추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들은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를 부양하며 단둘이 생활하고 있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들은 일정한 소득과 재산이 있어 위기 가구나 복지지원 대상이 아니었음

위기유형	사건명	사건개요	위기배경	발굴·공적금여·민간지원 정보
	치매노인 딸 사망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년 1월 7일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77)과 딸(44)이 숨진 채 발견 요양보호사가 이틀째 방문해도 응답이 없다고 해 요양센터 직원이 찾아가 발견되었으며 3일에서 5일 사이에 우울증을 앓던 딸이 자살한 것으로 추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머니는 파킨슨병에 척추질환을 앓아 2015년에 중증장애 판정을 받았고, 딸은 대인기피증과 우울증이 있어 고정적 작업이 없이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림 어머니가 받는 기초연금과 장애인 부가급여를 합쳐 29만 3천원이 고정적 수입의 전부였고, 큰아들이 있지만 연락을 하지 않고, 이웃과도 왕래가 없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딸의 딸이 집이 되어있고, 근로연령이어서 위기가구나 복지지원 대상자는 아니었으며 어머니가 장기요양 2등급을 받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제공기관에서는 딸의 대인기피증과 우울증으로 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진술
	부산 백골사신역 장애가족 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년 2월 25일 부산시 부산진구 한 주택에서 백골상태로 숨져있는 딸(56)과 어머니(83), 연니(58)가 살고 있는 것을 친척이 오랜만에 방문하여 발견 딸의 부패가 심하여 사망시진도, 사인도 알 수 없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머니와 연니는 딸의 사망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지적장애가 있었으며 몇 해 전 숨진 어머니의 공무원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었음 주거지가 재개발사업으로 이주가 진행되어 대부분 빈집이고, 조합 관계자가 방문해도 접촉을 거부하고 대화가 불가능했다고 진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복지사가 가구를 방문했었지만 출입을 거부했다고 함
	방배동 모자 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년 12월 3일 서울 강남 한 다세대 주택에서 어머니(60)는 이불이 덮인 채 발견 발달장애인 아들(36)이 노숙생활을 하다가 전직 구청 소속 복지사가 발견하고, 어머니가 5월 초에 숨졌다고 해 함께 집을 찾아가 발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머니는 이혼 후 서울로 올라와 아들을 혼자 키웠으며 2005년에 뇌출혈 수술을 받았지만 2008년 11월부터는 건강보험으로 체납으로 병원에 제대로 못 다님 어머니는 2017년 전단 아르바이트를 하고 2019년에 공공일자리에 참여하여 빈소득이 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체로 인한 단전, 가스요금과 수도요금도 수개월 체납되어 있었지만 기초생활 추가급여 수급자로 위기가구 통보대상에 제외됨 생계급여 등은 이혼한 전 남편 동이가 필요해서 신청을 포기했고, 아들은 장애 등록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 구청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보냈지만, 태배로 보내 사망사실을 인지 못함

위기유형	사건명	사건개요	위기배경	발굴 공적급여 민간지원 정보
한부모가구	창신동 모자 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4월 20일 서울 종로구 한옥집에서 어머니(82)와 아들(51)이 숨진 지 한 달 이상 지난 것으로 추정되는 상태에서 발견 • 수도 요금에 과다하게 청구된 것을 이상하게 여긴 수도사업본부 직원이 집을 방문했다가 발견했으며 아들이 먼저 3월 초에 지병으로 사망한 후 어머니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머니는 홀로 아들을 키워왔으며 평소 고혈압과 부정맥이 있는 아들의 악을 악국에서 정기적으로 받아감 • 아들은 용달 등 사업을 몇 차례 시도했는데 실패하고 어머니가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아들이 10년 넘게 돌봄 • 폐지를 줌은 등 일을 하던 어머니가 3년 전부터 몸 상태가 악화되어 일을 못하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54만 원이 수입의 전부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9월부터 각종 공과금, 통신비, 카드대금 등이 연체되었지만 1930년대 지어져 무너져 내리기까지 한 주택이 있다는 이유로 2021년 두 차례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했지만 탈락 • 집은 2020년 매물로 내놓았지만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월평균 전기 사용량이 216kWh로 위기가구 기준인 200kWh를 넘겨 통보대상에서 제외
	부산 치매모친 살해 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6월 21일 부산 서구 한 주택에서 치매를 앓는 어머니(60대)를 살해하고 자살을 시도한 아들(40대)이 체포됨 • 아들은 어머니 살해 후 인근에 살던 친척에 연락하여 그 친척이 방문하여 발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년 전 아버지 사망 이후 치매를 앓고 있던 어머니를 돌보던 아들은 자업이 없는 상태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었음 • 어머니 기초연금이 유일한 고정소득으로 더 저렴한 전셋집으로 이사해서 마련된 돈으로 생계를 이어옴 	
	전주 모자 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11월 28일 전북 전주시 한 아파트 화단에서 어머니(69)와 아들(39)이 숨져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 • 생활고를 토로하는 유서가 발견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머니는 5급 지체장애를 가지고 삼형제를 키웠지만 나이가 들면서 일하기 힘들어지면서 생활고를 겪어왔으며 우울증을 앓던 아들 역시 직장 없이 근근이 생활해옴 • 33㎡ 아파트에서 상당기간 거주하였으며 타지에서 아들 2명은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 생계급여와 장애수당을 수급하고 있었음

위기유형	사건명	사건개요	위기배경	발굴·공적급여·민간지원 정보
	김포 모자 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9년 5월 7일 경기 김포시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41)와 아들(10)이 숨진 채 발견 어머니가 아들을 실제한 후 자살한 것으로 보이며 다른 방에 있던 딸이 심초음계 연락하여 발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버지와 별거 중인 어머니는 특별한 직업 없이 두 자녀를 키우면서 한 달 전 보형사에 입사했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해 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리비와 통신회가 수개월째 체납된 상태였음
	관악구 모자 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9년 7월 1일 서울 관악구 한 임대 아파트에서 북한 이탈주민 어머니(41)와 아들(6)이 숨진 지 2개월 이상 지난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부패한 상태로 발견 단수가 되었어도 연락이 없어 방문한 수 도검침원에 의해서 발견되었고, 집에 음식이 하나도 없었으며 마지막 5월 인 출근액은 4천원이 인되었지만 잔고가 0원이 되어 아사 추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9년 탈북한 어머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다가 대학 생활협동조합에 취업하면서 9개월만에 탈수급을 하고, 2012년에 아들을 낳고 중국동포와 결혼함 경남 통영에서 남편이 조선소에서 일했지만 조선업 불황으로 중국으로 이사를 갔다가 2019년 1월 이혼하고, 아들과 함께 홀로 귀국했지만 아들이 병이 있어 제대로 일도 구하지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탈북 후부터 월세로 살던 관악구 임대아파트(13평)의 수도요금과 월세, 관리비 등이 1년 이상 연체되어 단수되고, 보증금에서 차감 기초생활 추가급여 수급자였으며, 아들이 5세를 넘기면서 아동수당은 3월에 중단돼 양육수당이 수입의 전부 건강보험료가 16개월 연체되어 위기정보로 입수되었지만 나머지 정보는 미수집
	인천 계양 일가족 사망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9년 11월 19일 인천 계양구 한 임대아파트에서 어머니(49), 딸(20), 딸친구(19), 아들(24)이 숨져있는 것을 자살 암시 문자를 받은 지인의 신고로 발견 4명은 모두 각자 생활고 등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겼으며 가스질식에 의한 사망 추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머니는 수년 전 남편과 이혼한 후 자녀들과 생활하였으며, 오랜 기간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을 하다가 손이 떨리는 증상(협심증 진단)으로 2018년 10월 실직함 딸 친구는 딸과 고등학교 동창 사이로 수도권 대학에 함께 진학했다가 휴학 후 집에서 함께 거주 아들은 고장된 직장 없이 아르바이트로 가족 생활비를 마련한 것으로 보이나 2018년부터는 소득기록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지원받고, 한부모가족이자 차상위계층으로서 고용, 공공요금 감면, 교육비 지원, 민간 식품 및 장학금 수혜 경험 있음 어머니 실직 후 3개월간 인천형 긴급복지 생계급여를 수급하고 기초생활 추가급여 수급 연체기록은 없지만 동주민센터 상담기록이 30여 건으로 자주 방문하여 상담을 함

위기유형	사건명	사건개요	위기배경	발굴·공적급여·민간지원 정보
성폭 4모녀 사건	성폭 4모녀 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9년 11월 2일 서울 성북구 한 다세대 주택에서 어머니(76)와 세 딸(49, 47, 44)이 사망 후 한 달 가량 지난 것으로 추정되는 부패 상태로 발견 다세대 주택 리모델링을 위해 업체에서 협조차 방문했다가 발견했으며 유서가 있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8년 전 휠체어를 타야할 정도로 거동이 불편했던 아버지가 사망하고, 어머니는 사기와 수퍼마켓 운영실패로 채무를 지고, 딸들도 신용카드와 대출 연체 등이 있었음 첫째와 셋째 딸은 온라인 쇼핑물을 했지만 잘 되지 않아 2019년 여름부터 개점 휴업상태였고, 둘째딸도 7월에 직장을 그만둔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56㎡ 주택(보증금 3천만 원)에서 거주 하면서 당해 7월부터는 건강보험료, 8월부터는 월세와 주민세, 9월부터는 도시가스 요금 연체가 있었지만 당시 기준 (6개월 이상) 미달이었고, 금융연체도 천만 원 기준을 넘어 위기 정도에서 제외됨
	대진 아들 살해 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9년 12월 31일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38)가 둘째 아들(4)을 살해하고 이혼한 부인에게 전화해 긴급 체포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버지는 아내와 이혼한 후 두 아들(6, 4)을 키웠지만 수년전부터 심한 우울증을 앓으며 술을 마시고 뚜렷한 직장 없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음 이혼한 아내도 사정이 있어서 양육비를 보내지 못했다고 진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파트는 아버지 소유였으며 연체가 없고, 이웃은 평소 애아이를 잘 챙기는 아버지로 기억했음
김포 일가족 사망사건	김포 일가족 사망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년 1월 5일 경기도 김포시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37), 할머니(62), 아들(8) 등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 별거 중이던 아버지가 이틀째 연락이 안 돼 집을 찾아가 발견했으며 어머니와 할머니가 쓴 것으로 보이는, 생활고를 토로하는 유서가 발견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머니는 2019년 9월경 현 아파트로 이사 후 한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일했지만 수입이 일정치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몇 개월 전부터 남편과 별거 중이었음 3개월 치 관리비를 연체하였지만 남편이 이 일부를 당월 초에 납부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세가 2억 5천만 원 아파트에 살고 있고, 어머니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등록되어 있었으며, 별거 중인 남편도 같은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어 맞벌이 가정으로 위기가정이나 복지지원 대상자가 아니었음
	창원 모녀 사망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년 10월 5일 경남 창원시 한 원룸에서 어머니(52)와 딸이 8월경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부패가 심한 상태로 발견 이웃의 냄새가 난다는 얘기에 집주인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머니는 1998년 딸을 낳았지만 2011년 아버지와 이혼하고, 조현병 치료를 받으면서 딸은 병입으로 학대 판정을 받아 복지시설에 입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머니는 2012년 차상위계층으로 지정되어 치료비 등 지원을 받고, 2015년 기초생활 수급자를 신청했지만 재산기준 초과로 탈락

위자유형	사건명	사건개요	위기배경	발굴·공적급여·민간지원 정보
		<p>신고해서 발견되었으며 한때 어머니 사망 후 딸 아사 가능성이 제기되었지만 딸 장애가 심하지 않고, 집안에 식료품이 있어 사인은 미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딸은 20세가 된 2018년에 어머니 요구로 퇴소해 같이 살면서 어머니가 시장에서 쌀을 팔거나 일용직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감 • 딸은 가버은 지폐증세가 있어 5, 6급 정도의 경계선 지능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시설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딸은 기초생활 시설텔며 수급자였지만 퇴소 후 어머니가 일반수급 전환을 거부하고, 정착지원금(5백만 원)과 당해 8월 까지 자립수당(월 30만 원) 수급했고, 장애등록은 안되어 있는 상태였음
	인천 미등록 딸 살해 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1월 15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어머니(44)가 딸(8)을 살해하고 스스로 신고한 뒤 자살을 시도하다가 체포 • 같은 날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친부(46)는 딸을 지키지 못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머니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남 사이 딸을 낳아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8년 동안 딸을 미등록 상태로 방치함 • 친부는 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로 백배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보냈고, 딸의 출생신고를 요구하다 들어주지 않자 집을 나가 6개월 전부터 별거 중이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딸은 출생신고가 되어있지 않아 교육 당국과 지자체에서 존재를 알지 못해 교육 지원과 입학통지를 받지 못함
	신촌 모녀 살해 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11월 23일 서울 서대문구 한 다세대 주택에서 어머니(65)와 딸(36)이 숨져있는 것을 월세가 밀리고 연락이 안되어 집을 찾아간 집주인이 발견, 자살로 추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머니는 아버지와 18년째 별거 중이었으며 지난 2006년 중학교 교감으로 근무한 연금을 200만 원 이상 받고 있었지만 딸이 특별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카드값과 월세 등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가 되었다고 추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11월 현 주택에 이사한 후 10개월간 월세가 연체되어 보증금이 모두 공제되고 퇴거요청을 받은 상태였음 • 공과금, 통신료, 대출 등 연체는 수개월, 건강보험료는 1년 이상 연체된 상태로 이전 주소지에서 위기가구 대상이었지만 주소이전이 되어있지 않아 찾지 못하고 비대상으로 분류됨

위기유형	사건명	사건개요	위기배경	발굴·공적급여·민간지원 정보
가계몰락	중평 모녀 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8년 4월 6일 총복 증평군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41)와 딸(3)이 숨져 있는 것을 관리사무소 직원이 관리비 연체를 이유로 방문했다가 발견 2017년 11월 어머니가 딸을 살해하고 동생(36)에게 연락을 했으나 어머니까지 자살하자 차량을 매각하고 해외 체류 중 체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7년 9월 남편이 사업 실패로 수천 만 원 부채를 남긴 채 자살하여, 총 1억 5천만 원 규모의 채무와 경제적 어려움이 시달리면서 심리적 불안 증세를 보임 친어머니도 아버지와 같은 시기 사망하고, 동생에게 생활비 도움을 받았지만, 빚 독촉 전화 이외에 작은 아버지와 통화 기록이 유일할 정도로 고립된 채 생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 아파트 보증금 1억 2,500만 원, 상가보증금이 1,500만 원이 있었고, 트럭과 SUV 등 차량 3대를 보유 떨에게 지급되는 월 10만 원 가정양육 수당을 수급 중이었지만 별도의 수입이 없어 월세, 관리비, 건강보험료, 카드대금 등이 수개월째 연체 공동주택에 거주하여 공공금 연체에도 단전·단수가 되지 않았고, 1억 원 이상의 보증금, 건강보험료 상한기준이 넘어 위기가구 대상에서 제외
	대전 일가족 사망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9년 9월 4일 아버지(43)는 한 아파트 화단에서, 어머니(36), 딸(8), 아들(6)은 500m 떨어진 임대아파트에서 발견 아버지가 숨져있는 것을 주민이 신고하여 발견되었으며 현장에서는 가족을 수습해달라는 유서가 발견되어 아버지가 나머지 가족을 살해 후 자살 추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규모 건축업을 하던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한 후 양가 부모는 물론 가족까지 채무를 지고 사채까지 빌리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유서에서도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내용이 있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세 아파트에 거주하였고, 우유대금 8개월 연체가 확인됨
	대구 북구 일가족 사망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9년 12월 23일 대구 북구 한 빌라에서 아버지(43), 어머니(43), 아들(14), 딸(1)이 숨져있는 것을 등교하지 않는 아들 담임교사가 자택을 방문해 발견, 자살 정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년 전경 아버지가 조경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맞은 후, 1억 4천만 원의 부채 상환 압박에 시달렸고, 어머니도 사업소 득이 있었지만 1~200만 원 정도였음 어머니가 2018년 12월부터 지역 한 수산업체 건강보험 직장가입 등록이 되었지만 사망 두 달 전 실직했고, 아버지는 그 후 축산물 납품 배달일을 시작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1년 9월 66㎡ 빌라(보증금 2천 만 원)에 입주하여 어머니가 2012~2013년 고용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받았고 2013년 차상위계층 신청을 했지만 주택 보증금과 차량 3대(트럭과 승용차)로 탈락 아들 담임교사는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고, 받았던 아이가 최근 우울해보았다고 진술

위기유형	사건명	사건개요	위기배경	발굴·공적급여·민간지원 정보
완도 일가족 사망사건	완도 일가족 사망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2년 6월 29일 광주시에 살던 아버지, 어머니 딸이 완도 바다 속 인양된 승용차에서 숨진 채 발견 같은 해 5월 19일 딸 학교에 한 달 체학합습을 신청한 뒤 한 달 후에도 등교하지 않아 실종신고된 상태였고, 자녀살해 후 자살 추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버지는 2021년 7월까지 컴퓨터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코로나19로 장사가 안 되어 폐업하였고, 어머니도 비슷한 시기 직장을 그만두고 별다른 경제활동이 없었음 어머니는 당해 두 차례 불면증, 공황장애 진료기록이 있고, 카드 부채 등 최근 가상화폐 실패로 총 2억 원 부채 추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3년 7월~2016년 12월까지 차상위 계층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자로 양육비, 의료비를 지원받은 적이 있었지만 사업을 하면서 벗어남 신용카드사에서 지급명령을 받은 상태이고, 2개월간은 관리비도 연체가 된 상태
	수원 세 모녀 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2년 8월 21일 경기 수원시 한 다세대 주택에서 60대 어머니와 40대 딸 2명이 최소 열흘간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 부패된 상태에서 숨진 채 발견 범사가 난다는 이웃의 말을 듣고 집주인이 신고해 발견되었으며 현장에서는 어머니와 딸 1명이 쓴 것으로 보이는 건강과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유서가 발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버지는 일루미늄 제조업을 하면서 직원 15명 규모의 공장을 운영했지만 2000년대 초반 부도를 맞으면서 방랑생활을 하고 나머지 가족은 수원에서 월세 집을 전전하며 생활 집이 비좁아 큰아들은 점집방 등에서 살면서 10여 년간 설계사무소에서 일하다가 건강악화로 택배일을 하였고, 가족생계를 부담했지만 루게릭병을 진단받고 2020년 4월에 사망하고, 아버지도 뒤이어 사망 아버지 사망 후에도 사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채가 남아있었고, 어머니는 암 진단, 두 딸도 희소 난치병과 정신적 문제가 있어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추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들이 숨지기 전 기초생활 신청을 하려 했지만 아버지의 사업부도 때 채권자의 폭력적인 모습을 경험하고 암보험금도 압류당한 경험 이후 전입신고도 기피하고, 이웃도 오히려 거부할 정도로 고립된 생활을 함 건강보험료는 16개월 체납되었지만 주민등록 주소지는 아들 지인 집에 두고 지인도 2020년 아들 사망 후 연락이 끊김 건강보험 체납이 있었지만, 한 가지 위기 정보로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지 않아 당월 3월애 주민등록상 거주지 지자체(화성시)에서 방문하였지만 연락 두절로 비대상으로 분류됨

위기유형	사건명	사건개요	위기배경	발굴·공적급여·민간지원 정보
과다채무	의정부 일가족 사망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2년 7월 25일 경기 의정부 한 오피스텔에서 40대 부부와 아들(6)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어 병원에 옮겨졌지만 모두 사망 지인이 자살을 암시하는 예약문제를 받고 신고하여 발견하였으며 부채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유서도 있어 부모가 아들을 살해하면서 자살 추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한 지인은 '남편의 도박 빚으로 힘들다'는 문자를 받았으며 경찰도 부부가 과다채를 신변을 비관하여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억 5천만 원 정도 시세의 주택을 소유하고 공과금 연체는 없었으나 월 3만 원 정도의 관리비가 1년 정도 연체인 상태였으나 원래 한꺼번에 내는 일이 많다고 주민들은 진술
	인천 10대 형제 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2년 11월 25일 인천 서구 한 빌라에서 고등학생 10대 형제가 숨지고 부모가 중태인 상태에서 발견 큰아들이 연락 없이 현장실습체에 출근하지 않아 담당교사가 자택을 방문해 발견하였으며 형제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엔지니어로 일한 아버지는 소득이 4인 가구 중위소득 80% 수준이었고, 당해 5월 퇴사 후, 재취업하였지만 대부업체에 총 3,500만 원의 근저당권과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역대 규모로 제2금융권 등 부채가 있고,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파악됨 고1 나이인 차은 아들은 전신 피부질환을 앓고 있어 중학교 졸업 후에 고교에 진학하지 않은 상태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5년에 교육급여 수급 이력이 있고, 2016년에 학교급식 지원을 받은 적이 있지만 연체 기록은 없음
만성빈곤	대구 일가족 사망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년 8월 5일 대구 남구 한 빌라에서 아버지(52), 주차장 차 안에서 어머니(48)와 딸(22)이 9일 전쯤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부패한 상태로 발견 아버지가 출근하지 않아 직장 동료가 자택을 찾아 발견하였으며 CCTV 등 확인 결과 모두 자살로 추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버지는 퀵서비스, 어머니는 의류업을 했지만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안정된 직장은 아니었고, 평소 가족과 친척, 지인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 	

위키유형	사건명	사건개요	위기배경	발굴 공적금여 민간지원 정보
독거가구	강서구 일가족 사망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1년 7월 5일 서울 강서구 한 다세대 주택에서 60대 어머니, 30대 아들, 40대 조카가 시신이 부패된 상태로 발견 별거 중인 다른 아들이 1일부터 연락이 안 된다고 신고를 해 발견하였으며 부검 결과 자살로 추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머니는 우울증이 있었고, 아들은 류마티스성 관절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해 경제활동은 어려운 상태였으며, 어머니와 아들이 다단계 판매업 등으로 생계를 근근이 이어오다가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심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머니와 아들은 2014년부터 기초생활수급급여를 수급하고 있었고, 조카 역시 기초생활 수급자였고, 어머니는 최근 어깨부상으로 긴급의료비 지원을 받음 접수인이 리모텔링 소음 등을 이유로 수도요금을 면제해주었는데 당해 5월 말경 어머니가 월세 10만 원을 깎아달라고 부탁
	청주 80대 노인 사망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년 2월 20일 충북 청주시 한 주택에서 기초생활 수급자(81)가 숨진 채 발견 매월 1회 수급자를 대상으로 쌀을 배달하는 업체가 한 달 이상 연락이 안 되자 주민센터에 신고하여 담당자가 방문하여 발견하였으며 쌀 배달된 시점으로 보아 한 달 이상 방치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사인은 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망자는 부양가족이 없는 1인 단독가구로서 배우자와는 사실상 이혼상태였으며 2남 2녀인 자녀들과도 관계가 단절된 상태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센터 담당자는 관리대상 전주조사 과정에서 같은 건물 거주 이웃이 임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만 듣고 사망자를 임원화자로 분류
	양친구 탈북민 백골시신 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2년 10월 19일 서울 양친구 한 임대아파트에서 탈북민 여성(49)이 겨울옷을 입고 있어 최소 1년 이상 방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백골 시신 상태로 발견 SH공사에서 임대료 체납으로 명도소송에 승소해 강제퇴거철차를 위해 방문을 하였다가 발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2년 입국한 사망자는 간호사로 근무하며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2010년 통일부가 선발하는 1기 전문상담사로 선발되어 성공적인 정착을 한 탈북민으로 언론에 소개되기도 하였지만 2017년 그만둔 이후 소식이 단절 근무했던 남북하나센터 관계자는 2017년 그만둔 당시 미국에 간다고 하고 심사나 자문을 위해 연락해도 닿지 않아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진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미 1년 전 시점에 건강보험료, 임대료 등이 10개월 이상 체납되고, 통신회원료, 금융연체도 확인되어 지난 5월부터 위키 정보가 지자체에 통보되었지만 연락이 안 되어 접촉을 못하였고, 반기별로 하는 통일부 취약계층 조사대상자에 도 2021년 상반기에 포함되었으나 연락 두절로 처리 관리사무소는 지난해 3월 관리비 독촉장 수령 이후 온수 사용량이 없었다고

위기유형	사건명	사건개요	위기배경	발굴·공적급여·민간지원 정보
보호종료 (중단)청년	광주 보호종료청 년(A군) 자살 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8월 20일 광주 기숙사 주변 대 학건물 뒤편 화단에서 A군(18)이 숨진 채 발견 • 방학 중에 기숙사에 학생이 많지 않아 3 일만에 주민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CCTV 등 확인결과 자살로 판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의 이혼으로 3세 때 보육원에서 생 활하다가 지난 6월 기숙사로 독립하였 으며 학교에서는 사회복지사를 희망하며 틈틈이 나면 봉사활동을 하였고, 친구들은 보육원 출신임을 경질조사회에서 알게 됨 • 보육원을 나올 때 받은 지원금 7백만 원 을 대학 등록금, 기숙사비, 생활비로 모 두 사용해 어려움을 겪었으며 방에서 살 의 막막함, 읽지 못한 책이 많은 아쉬움 을 적은 쪽지가 발견 	<p>진출했고, SH공사는 임대료 체납이 15 개월이 넘자 지난 1월 명도소송을 제기 해서 승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숙사로 독립하였지만, 보호연정을 신 청해 보육원도 오가고 있었으며 보육원 관계자와 통화에서 자립에 대한 두려움 과 어려움, 미래에 대한 고민들을 털어 놓았다고 함
	광주 보호중단 청년(B양) 자살 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8월 24일 광주 아파트 화단에 서 B양(19)이 숨져있는 것을 주민이 발 견하였으며 가깝게 지내던 이성 친구가 사망하며 충격을 받았다는 내용과 삶에 대한 비관과 가족들에게 마인하다고 적 힌 유서를 남기는 등 자살 정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 모두 양육이 어려운 장애가 있어 보육원에 보내지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 다는 의사에 다시 돌아가기도 했지만, 환경이 개선되지 않아 다시 보육원에 입소 • 이전 보육원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하 여 다른 보육원에 입소하였지만 잘 어울 리지 못하고, 2020년에는 아동보호치료 시설로 전환된 후 1년간 보호처분을 받 고 만 18세를 한 달 앞두고 퇴소 후 지 난 2월 수년전 어머니 자살 후 아버지가 혼자 있는 임대아파트로 옮겨 단둘이 생활 • 지난해 광주 한 대학에 입학했으나 그만 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세를 한 달 앞두고 퇴소하여 보호종 료청년으로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보호 중단청년이 되었으며, 친한 선생님들과 메시지를 한두 번 주고받은 것 외에는 연락이 없었음 • 기초생활 급여와 장애연금 등으로 생활 하는 아버지와 함께 거주 •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주기적인 심리상담 을 받았고 최근 상담에서 우울감 악화, 삶에 대한 비관을 토로했다고 하며 같은 달 20일에도 3시간에 걸쳐 자살예방상 담을 받았지만 4일 후 자살

2. 복지 사각지대 사망사건 요소별 유형

먼저 복지 사각지대 사망사건(전체 35건)을 발생 연도별로 나누어 보면 2018년 5건, 2019년 9건, 2020년 9건, 2021년 2건, 2022년 10건으로 나타났다. 2018년을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10건 정도 나타났는데 2021년에만 2건으로 유난히 적었다.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보이는데, 우선은 코로나19로 대면접촉이 감소하면서 복지 사각지대 사망사건을 발견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다른 사건·사고나 사회적 이슈가 많다 보니 상대적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줄어든 탓도 있을 수 있다.

사건이 발견된 신고자나 발견자를 기준으로 보면 가장 많은 경우가 집주인이었다. 주로 원룸이나 다세대 주택, 반지하방 등에 세를 들어 살던 경우가 많으므로 월세가 연체되거나, 연락이 안 되어 집주인이 찾아갔다가 직접 발견한 경우가 5건이 있었고, 시신부패로 인해 냄새가 난다는 이웃의 민원을 듣고 찾아가 발견하게 된 경우가 2건이 있었다. 그와 비슷하게 발견한 사람은 가족이나 친지였다. 직계가족은 주로 동거 중에 발견하거나 별거하던 중에 연락을 받지 않아 찾아가거나 신고한 경우, 가족살해를 털어놓아 신고한 경우 등이 5건, 그 외 친지가 오랜만에 방문하거나 연락을 받고 찾아가 발견한 경우가 2건 있었다.

그 다음은 행인인데 집 밖에서 자살을 한 경우 화단 등에서 발견되는 경우로 5건이 해당되었다. 그다음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관리자로 3건으로, 관리비, 공과금, 임대료 체납 등으로 방문했다가 발견하는 경우였다. 그중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임대료 체납이 15개월이 넘기자 찾아가서 사정을 확인하지도 않고 바로 명도소송을 걸어 승소하고 퇴거절차를 위해 방문을 했다가 1년 이상 방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민 백골시신을 발견한 경우(양천구 탈북민 백골시신 사건, 2022.10.19.)였는데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과연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 대응이었는지 아쉬운 대목이다.

그 외에는 사망한 가족 중 취학자녀가 있는 경우 등교를 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아 담임교사가 찾아가 신고하게 된 경우가 3건이 있었고, 지인이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거나 직장 동료가 출근을 하지 않아 찾아가 3건이 있었다.

복지기관도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를 받던 대상자 가족이 사망해 있는 것을 요양보호사가 발견한 경우, 응급알림서비스를 담당하던 노인복지관 담당직원이 뒤늦게 찾아가 확인한 경우가 각 1건 있었다. 응급알림서비스 담당기관의 경우 그 취지가 무색하게 신호가 감지된 지 일주일이나 넘어서 찾아가 바닥에 방치되어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대상자를 발견한 사건(광주 다문화 부부 사망사건, 2020.1.6.)으로 해당 서비스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현실을 볼 수 있었다. 그 외의 경우는 주민센터, 당사자 신고, 수도사업소 직원, 전직 구청 사회복지사, 리모델링 업체 직원 등 각 1명이었다.

그 다음 사망원인별로 사각지대 사건을 나누어 보면 검색기준을 자살을 뜻하는 ‘극단적 선택’을 필수로 포함시켰던 만큼 자살이 가장 많은 13건을 차지했다. 하지만 자살만큼 많이 나타나는 것은 가족살해였다(12건). 대부분은 미성년 자녀를 살해하는 경우였는데, 부모의 자살과정에서 직접적인 살해 정황이 있는 경우가 많았지만(7건)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사망 등과 같은 정황도 미성년 자녀를 동반한 경우(3건) 성인 부모는 스스로 선택한 자살로 볼 수 있어도 미성년 자녀는 살해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건은 부모를 살해한 경우였는데 모두 간병살인으로 볼 수 있는 사건이었다. 전체적으로는 가족살해 후 자살이 9건이지만 가족만 살해 후 본인의 자살은 미수에 그치거나 곧바로 주변에 실토해 체포되는 등도 3건이나 되었다.

그 외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보이는 경우가 5건, 시신이 너무 부패하고 타살과 같은 다른 정황은 확인되지 않아 사망원인을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5건 있었는데, 이와 같이 ‘극단적 선택’을 포함시켰음에도 다른 사인의 복지 사각지대 사망 사건이 추출된 것은 복지 사각지대 사건에서 (가족살해 후) 자살이 가장 많은 사인으로 나타나다 보니 언론보도 내용에 자살 여부를 따지는 내용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어서 같이 추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발굴가능성을 기준으로 사건을 구분해보면 절반에 가까운 경우 15건은 발굴이 되었어도 소득·자산기준 등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을 받기 어려운 사례들이었다. 물론 직접 소득인정액 등을 산정 해본 것은 아니지만, 월세나 전세 보증금, 소유 차량과 같은 재산이나 가족의 생계지원을 포함한 소득으로 인해 어려운 경우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기초생활보장이나 차상위계층을 신청했지만 탈락한 경우가 3건, 근로연령이면서 근로능력이 없을 만한 정황이 없어 수급자로 선정되기 어려워 보이는 경우가 2건이 있었다. 물론 이 역시 공무원의 재량을 발휘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수급을 받을 수도 있는 경우지만 대부분 현장에서의 경험은 기준을 되도록 엄격하고 까다롭게 적용하기 것이 사실이기에(전용호 외, 2022) 현실적으로 선정기준에 들어맞지 않는 경우 수급이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외에는 이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던 경우가 7건이었다. 수급자의 경우 위기 정보가 수집되더라도 고위험군 선별에서 제외되는 조건이기 되기도 하고, 이미 수급자라는 것은 복지급여에서 제외되었다는 대상의 사각지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현 제도상 ‘발굴’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박돌봄(3건)이나 독거가구(1건)와 같이 돌봄이나 고립과 같은 생계와는 다른 위기요인이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한부모가구(2건), 만성빈곤(1건)처럼 보장수준이 낮아 빈곤상태가 해소되지 않아 자살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경우들도 있었다.

그 다음은 금융부채, 관리비나 월세 연체 등 위기징후가 있었지만 위기 정보가 수집되지 않은 경우(정보미수집)도 5건이 있었다. 특히 공동주택 관리비나 공공금이 관리비에 포함된 경우에는 연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주민의 동의를 거쳐 통보를 하지 않는 한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발굴을 강화한다고 해도 위기 정보가 수집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또한 관리비나 월세 연체분을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경우도 많아 이는 결과적으로 연체로 드러나지 않는 셈이다. 금융부채는 규모가 2천만 원이 상회할 경우 위기가구로 분류하지 않고, 사채 등과 같이 수집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을 수 있었다. 이러한 정보들이 제외되면 다른 위기 정보가 수집되지 않거나 다른 위기 정보가 수집된다고 하더라도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지 않아 발굴대상이 되기 어렵게 된다.

그리고 출생등록이나 전입신고가 되지 않아 발굴이 어려웠던 경우(미등록자)가 4건 있었다. 채권추심이나 별거로 인해 주민등록상 실거주지가 달라 발굴이 안 된 경우가 2건 아동의 출생등록이 안 되어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었던 경우가

2건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연락처 정보연계를 포함한 복지부의 강화된 발굴대책이나 출생통보제 도입으로 인해 일부 해소될 수 있는 문제로 보인다. 또한 발굴대상이었으나 연락두절 등으로 발굴이 안 된 경우(발굴대상 미접촉 1건)도 보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해소될 수 있어 보인다.

하지만 수급기준 초과와 기수급자인 경우는 발굴이 된다고 해도 공적지원을 받기 어렵거나, 발굴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로 발굴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낮은 선정기준과 급여수준의 문제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복지 사각지대 연구에서 ‘발굴해봤자 줄게 없다’는 현장 공무원들의 지적이나 발굴 지원대상에서 공적지원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현실(최정은 외, 2022)이 언론보도 주요 복지 사각지대 사망사건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보미수집의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금융제도의 문제로 인해서 단순한 발굴확대로 해소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대부분이었고, 연체와 같은 위기징후가 나타나지 않았던 경우(3건) 역시 발굴로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발굴대책으로 향후 같은 일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보이는 경우는 35건 중 5건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직접 주민센터 등을 찾아가 급여를 신청한 경험이 있다고 드러난 사례도 12건이나 있었다. 기초생활보장급여나,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금 경감, 취업취약계층 고용지원, 저소득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과 같은 자산조사가 필요한 급여나 장기요양보험 급여, 가정양육수당과 같은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한 경험이 있는 것이다. 이는 발굴에서 전제로 하고 있듯이 복지 사각지대가 복지급여에 대한 정보를 접하지 못하거나 신청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찾아서(발굴해서) 알려주어야 하는 ‘무지’의 사각지대가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신청경험자 중에서 소득·자산기준 초과가 4건, 신청했지만 탈락한 경우가 3건이고, 정보미수집이 2건, 위기징후 없음이 3건으로 발굴이 어려웠던 대상 중 상당수는 찾아가기 전에 찾아오는 사람만 잘 대응했어도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였다. 기수급자인 7건을 포함하면 급여신청 경험이 있는 경우는 전체 절반 이상이고 실제 현장에서는 찾아가서 상담을 해도 구두로만 듣고 어렵다고 대답해 신청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을 고려하면(전용호 외,

2022) 신청경험이 미확인된 사례 중에도 문의나 상담을 했던 사례는 더 많을 수 있다. 다시 말해 복지 사각지대 사망사건의 절반 이상은 발굴 이전에 찾아올 때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졌다면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 사망자들이 이전에 접촉했던 공공·복지기관 중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 위기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기관들을 추려 보면 주민센터가 16건으로 가장 많고, 보건소 5건, 복지기관 4건, 경찰 1건 등을 뽑아볼 수 있었다. 주민센터의 경우 급여신청을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했던 적이 있는 경우(6건),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로서 주민센터가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이었던 경우(7건), 주민등록 정보 불일치나 발굴대상 미접촉과 같이 주민센터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했다면 또는 정보연계 같은 권한이 있었다면 발굴이 가능했을 경우(각각 2건, 1건)가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주민센터에서 사망 전에 생활고와 관련된 상담을 했었다고 확인된 경우도 2건 있었다. 그리고 가족 중 치매가 있는 경우(5건)에는 치매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등 각종 지원을 담당하는 치매안심센터가 있는 보건소가 발굴가능 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복지기관과 관련된 경우가 4건, 경찰이 대응이 가능했던 경우가 1건 있었다. 복지기관의 경우에는 보호종료나 중단청년과 관련된 경우가 2건으로 보호시설과 상담 중이었거나, 보호시설 퇴소 당시 위기가능성을 감지하였던 경우였고,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자살 직전까지 심리상담을 받았던 경우가 1건, 어떤 기관인지 확인이 안 되지만 사회복지사의 방문을 거부했던 경우가 1건 있었다. 그리고 가족 자살사건 경찰조사 과정에서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별다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경우도 1건 있었다.

마지막으로 사망원인으로 자살이 많은 만큼 정신건강상의 문제로 분류를 해보면 정신건강 관련 문제가 나타난 경우는 14건이 있었다. 이는 언론보도 상에 나타난 것만을 포함시킨 것으로 실제로는 더 많은 경우들이 해당할 수 있다. 가장 많은 경우는 우울증을 진단·치료를 받은 적이 있거나 우울증세를 보였던 경우로 6건이 있었다. 그리고 자살을 이미 시도했었던 경우가 2건, 심리적 불안을 호소했다는 경우가 2건, 그밖에 공황장애, 은둔, 대인기피와 확인되지 않은 정신과 치료가 확인된 경우가 각각 1건씩 있었다. 이상의 요소별 구분을 정리해보면 <표

5-3)과 같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지점은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의 대책 중 한 축을 이루는 것이 고독사라고 할 수 있는데 35건의 주요 복지 사각지대 사건 중 고독사 정의에 해당되는 사건은 2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2021년에서 2022년에 걸쳐 고독사 실태조사 연구를 실시하고, 지난 5월 17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고독사 예방법)에 따라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3). 고독사의 법적 정의는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으로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고독사 예방법 제2조). 여기서 일정한 시간이란 법률적 기준은 없지만 관련 대책을 자체 추진해 온 서울, 부산 등에서는 3일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는 주요 복지 사각지대 사망사건 중 홀로 살다가 사망한 지 3일 이상이 지난 후에 발견된 경우는 독거가구 유형 2건과 보호종료(중단)청년 유형 중 방학 중에 사망하여 3일만에 발견된 광주 보호종료청년 사건(2022.8.20.)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중에서 가족과 이웃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상태에서 살던 경우도 고려하면 고립된 삶에 해당되었던 독거가구 유형 2건만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2인 이상의 가구라도 사회적 고립상태에서 사망하여 뒤늦게 발견된 경우로 정의를 확대해보면 15건까지 포함할 수 있지만 그래도 복지 사각지대의 전형적인 형태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사회적 고립의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고독사로 분류될 수 있는 사망자가 꾸준히 증가되어 최근 연간 3천 명 규모를 훌쩍 넘기고 있는 현실에서(보건복지부, 2022a) 고독사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고독사 문제와 복지 사각지대 문제는 다소 맥락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독사 대책이 복지 사각지대 중 일부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는 고독사와 다른 별도의 대응이 필요한 문제로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표 5-3〉 복지 사각지대 사망사건 요소별 구분

유형	구분	건수(n=35)	비고
발생 연도	2018	5	
	2019	9	
	2020	9	
	2021	2	
	2022	10	
발견(신고)자	집주인	7	직접 발견·신고 5건, 이웃민원 2건
	가족·친지	7	직계가족 5건, 친지 2건
	행인	5	
	관리자	3	아파트관리사무소 2건, SH공사 1건
	교사	3	
	지인	3	
	복지기관	2	복지관 1건, 장기요양기관 1건
	기타	5	주민센터 1건, 당사자 신고 1건, 수도사업소 직원 1건 등
사망 원인	자살	13	
	가족살해(자살)	12	가족살해 후 자살 9건, 가족살해 3건
	질병	5	
	미상	5	
발굴 가능성	수급기준 초과	16	소득·자산기준 10건, 신청탈락 3건, 근로능력 3건
	기수급자	7	
	정보미수집	4	
	미등록자	4	주민등록 정보 불일치 2건, 출생미등록 2건
	위기징후 없음	3	
	발굴대상 미접촉	1	
급여 접근성	급여 신청경험	12	수급기준 초과 7건, 정보미수집 2건, 위기징후 없음 3건
	신청경험 미확인	15	수급기준 초과 9건, 미등록자 3건, 정보미수집 2건, 발굴대상 미접촉 1건
	기수급자	7	
	급여신청 거부	1	미등록자 1건

유형	구분	건수(n=35)	비고
발굴 가능 기관	주민센터	16	주민센터 방문 6건, 기수급자 7건, 미등록자 2건, 발굴대상 미접촉 1건
	보건소	5	
	복지기관	4	보호시설 관련 2건, 청소년 상담센터 1건, 사회복지사 방문거부 1건
	경찰	1	
	미확인	9	
정신 건강	정신건강 문제	14	우울증(세) 6건, 심리불안 2건, 자살 시도 2건 등
	미확인	21	
고독사 여부	협의를 고독사	2	사회적 고립상태에서 홀로 살다 사망 후 3일 이상 지난 뒤 발견
	광의의 고독사	13	사회적 고립상태에서 2인 이상 살다 사망 후 3일 이상 지난 뒤 발견
	해당사항 없음	22	동거 가족 외에 주변 관계가 있었던 경우

3. 복지 사각지대 사망사건 위기유형별 특징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주요 복지 사각지대 사망사건의 위기유형별로 앞서 살펴본 요소별 특성을 살펴본다면 위기유형의 사례별로 구분되는 특성들을 도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하여 각 위기유형별 사례들의 맥락을 더 잘 이해하고, 그에 따른 더 효과적인 대응방안 역시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35건의 사건 중 27건을 차지하는 주요한 사건 유형에 해당하는 독박돌봄, 한부모가구, 가계몰락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장 많은 12건의 사건이 해당되는 독박돌봄 유형은 중증장애나 중증질환, 치매를 가지고 있는 가족이나 영아 등을 홀로 돌보다가 사망에 이른 경우들로 구미원룸 부자 사건(2018.5.3.), 전북 남원 부자 사건(2018.7.3.), 중랑구 모녀 사건(2019.1.3.), 방배동 모자 사건(2020.12.3.), 창신동 모자 사건(2022.4.20.) 등이 해당된다. 이들 유형에서는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0년 이상 혼자서 한명 또

는 여러 명의 가족을 돌보는 상황 끝에 질병 등으로 인한 사망 후 가족이 방치된 채, 또는 가족까지 사망한 채 발견된 경우(6건)이거나 가족과 함께 또는 가족살해 후 자살한 경우(5건), 돌보는 가족만 살해한 경우(1건)들이다.

이 유형의 경우에는 돌보는 동거가족 이외에 다른 가족이나 주변 이웃과 관계가 단절되고 고립되어 있었던 경우가 절반을 넘었다(7건), 그리고 상대적으로 생계문제 보다는 돌봄문제가 두드러지다 보니 발굴가능성에 있어서도 기준초과에 해당하는 경우가 다른 유형보다 많이 나타난다(8건). 이는 독박돌봄 유형의 사각지대 사망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생계문제 중심의 발굴과 지원만이 아니라 돌봄문제에 초점을 맞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독박돌봄 유형에서 돌봄과 관련된 공적지원을 받고 있었던 경우가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를 받았던 치매노인 딸 사망사건(2020.1.7.) 단 한 건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나머지 영아, 발달장애인, 거동불편 노인, 지적장애인, 치매노인, 뇌병변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의 가족을 홀로 돌보고 있었지만 대부분 장기요양보험이나 장애인활동보조, 가사간병서비스 등 돌봄관련 공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기수급자를 포함하여 급여신청 경험이 확인된 경우가 절반(6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몰라서 못했다고보다는 접근성의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정신건강 상의 문제를 경험하는 경우도 다른 유형에 비해서 높게 보인다. 우울증(3건), 자살시도, 대인기피, 은둔 등 정신적인 문제가 나타난 경우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정신건강의 문제는 독박돌봄 유형보다는 비중이 낮다고 하더라도 모든 유형에서 나타나는 문제로 독박돌봄 유형 이외에도 8건이 해당되기 때문에 정신건강을 포함한 돌봄문제와 관련된 대응은 복지 사각지대 사망사건 예방에 있어 매우 핵심적인 부분임을 알 수 있다.

그다음 10건이 해당하는 한부모가구 유형은 주로 이전의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주소득자와 이혼 또는 별거를 하게 된 이후 한부모가구가 된 후 지속적으로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거나 정신적인 문제를 경험하다가 사망에 이른 경우들로 관악구 모자 사건(2019.7.1.), 인천 계양 일가족 사망사건(2019.11.19.), 성북 세모녀 사건(2019.11.2.), 창원 모녀 사망사건(2020.10.5.), 신촌 모녀 사건(2022.11.23.) 등이 해당된다. 이 유형에서는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십수년 전

에 주소득자와의 사별, 이혼, 별거를 한 이후 홀로 자녀를 키우면서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신적 문제를 경험하다가 온 가족이 함께 자살을 하거나(4건), 어린 자녀를 살해하고 자살을 하거나(2건), 어린 자녀만 살해하거나(2건), 부패가 심한 상태에서 발견하여 사망원인을 알기 어려운 경우(2건)들이다.

한부모가구는 대전 아들 살해 사건(2019.12.31.)처럼 남성 가구주인 경우도 있었지만, 나머지는 모두 여성 가구주 가구였다. 이러한 이유로 이 유형에서는 주로 남성인 주소득자와의 사별, 이혼, 별거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겪는 경우가 많아 다른 유형보다는 보장기준이 초과하는 경우(4건)가 상대적으로 적고, 이미 수급자 이거나, 미등록 상태이거나, 위기징후가 있었지만 공동주택에 거주하여 수급되지 못한 경우 등과 같이 발굴되었다면 지원이 가능했을 경우도 많았다.

마지막으로 가계몰락 유형은 사업실패로 인해 급격하게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는 경우로 증평 모녀 사건(2018.4.6.), 대전 일가족 사망사건(2019.9.4.), 대구 북구 일가족 사망사건(2019.12.23.), 완도 일가족 사망사건(2022.6.29.), 수원 세 모녀 사건(2022.8.21.) 등 5건으로 상대적으로 적지만 복지 사각지대 사망사건 유형 중에서는 가장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은 사건들이 이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어린 자녀를 살해하고 부모가 자살하거나, 성인 가족 모두가 자살하여 가족 모두가 사망한 사건들이기도 하고, 본인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커서 대중의 관심을 더 받게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공적 급여 신청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지만(3건), 발굴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보장기준을 초과인 경우 역시 상대적으로 많다(3건). 거주하던 아파트의 보증금이나 사업을 위한 차량 등이 있어 주로 자산 기준을 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유형의 모든 사례에서 카드대금이나 대출연체 등 금융연체가 모두 공통적으로 발견되기도 한다. 가계몰락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성인 것이다. 또한 다른 가족과의 연락이나 주변관계가 단절된 고립가구가 많다는 것(3건)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수원 세 모녀 사건(2022.8.21.)은 사업실패 이후 채권추심으로 인해 관계가 단절된 경우도 있었지만, 특정 가족 이외에 통화기록이 없거나(증평 모녀 사건, 2018.4.6.), 무연고 사망도 아닌 장례식에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 등

(완도 일가족 사망사건, 2022.6.29.) 극단적인 고립 정황이 나타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고립상황 때문에 위기상황이 바로 가계몰락으로 이어졌거나 가계몰락 과정에서 부채 등의 문제로 연이 끊겼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제3절 소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 사망사건을 이해하기 위하여 전국 주요 일간지와 방송사, 지역 일간지 등을 대상으로 지난 5년간 복지 사각지대 사망 사건 기사를 추출하여 총 35개 사건을 선정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보도한 기사 450개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사건을 재구성하고, 사망사건에 이르게 된 핵심적인 위기를 중심으로 독박돌봄, 한부모가구, 가계몰락, 과다채무, 만성빈곤, 독거가구, 보호종료(중단)청년 등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발생 연도, 발견(신고)자, 사망원인, 발굴가능성, 급여접근성, 발굴이 가능했을 기관, 정신건강 문제 여부, 고독사 여부 등의 요소에 따라 구분을 해보았다.

이러한 분석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은 발굴 중심의 복지 사각지대 대책의 한계이다. 발굴가능성으로 구분했을 때 소득·자산기준 등으로 발굴이 되었어도 기초생활보장을 받기 어려운 경우, 이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 등 발굴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절반이 넘었다. 그리고 발굴을 확대한다고 해도 위기 정보를 수집하기 어려운 경우와 위기징후가 없었던 경우까지 고려하면 정부의 발굴강화 대책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사건은 미등록자나 발굴대상을 미접촉한 경우 5건에 불과했다.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의 상당수는 기실 복지급여를 ‘몰라서 못 받는’, ‘무지’의 사각지대는 아니었다. 직접 주민센터 등을 찾아 복지급여를 신청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12건이었다. 이는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스스로 복지급여를 알아보고 신청할 수 있었지만, 어떠한 이유로 그러지 않았거나 신청했지만 탈락한 경우들이었다.

이렇게 대규모 발굴 이전에 공공·복지기관에서 포착된 대상부터라도 더욱 능동적으로 대응했다면 위기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가장 대표적인 기관은 주민센터였는데, 이는 발굴대책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물론 이 경우에도 미등록자나 발굴대상 미접촉과 같이 발굴

을 더욱 능동적으로 했다면 대응이 가능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주민센터에 급여신청이나 상담을 위해 방문을 했거나 이미 수급자였던 경우들이었다.

또 하나 이번 분석 결과 볼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은 복지 사각지대 대응에 있어 돌봄의 중요성이다. 위기유형별로 구분했던 것과 같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독박돌봄 유형이었다. 이러한 점은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이나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과 같이 돌봄문제에 대한 대응이 복지 사각지대의 상당 부분을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 있는 지점은 현행 발굴체계에 대한 시사점이다. 발견(신고)자 중 집주인과 관리자를 합하여 주거지에 대한 관리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각지대 발굴에 있어 이들의 더욱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이미 사회보장급여법 상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사회보장급여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를 가지고 있다(사회보장급여법 제13조 제2항 제22호). 그러나 복지 사각지대 사망사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신고의무가 지켜지지는커녕 공공기관조차 명도소송부터 제기하다보니 신고의무가 실질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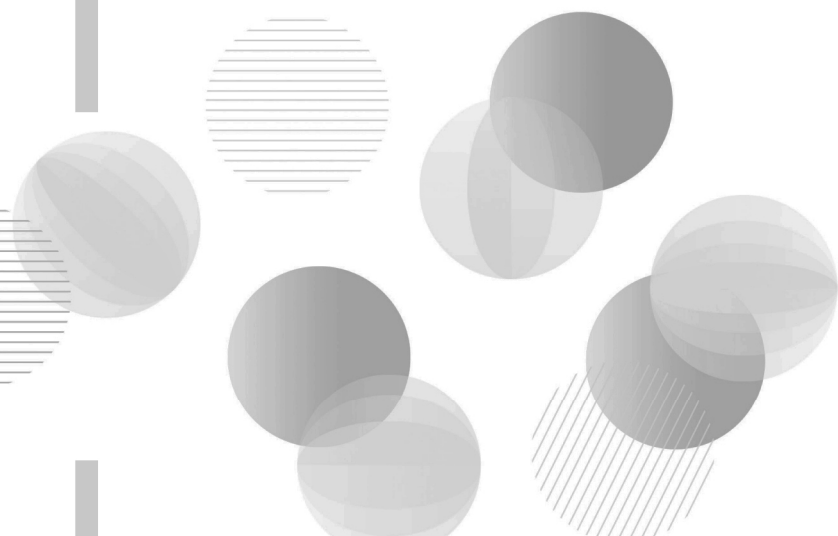
그 다음은 금융채무에 대한 대응이다. 현재 금융연체 정보도 위기 정보로 수집이 되고 있지만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연체가 있는 경우 빈곤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기준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특히 가계물락과 같이 급작스러운 위기상황의 경우 기존의 생활수준이나 사업실패 등으로 인해서 대규모 부채가 발생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나타났다. 실제 위기상황에서 개인이나 가족 수준에서는 공적급여보다는 카드나 금융기관 대출이 우선적인 찾을 수 있는 대응인 것이 사실이다. 오히려 단전, 단수, 단가스 등 요금체납은 이미 위기가 심화된 이후에 최종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지표로 이러한 요금체납 이전에 이미 사망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발굴체계가 예방이 목적이라면, 위기의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금융부채에 더욱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제6장

결론 및 정책대응 제안

제1절 결론

제2절 복지 사각지대 위기 대상의
정책대응 제안



제6 장 결론 및 정책대응 제안

제1절 결론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 요인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정부나 지자체의 대응에서도 새로운 접근과 대응이 필요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 대상자의 시계열 특성과 제도 밖 물질적 박탈경험 대상, 그리고 극단적인 사망에 이른 복지 사각지대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 사회가 여전히 놓치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가 누구이며, 어떤 위험을 안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가장 주안을 두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의 발굴대상을 분석하여 주요 특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2020~2022년 18회차 데이터를 패넬로 재가공하여 발굴대상자의 반복 발굴 규모와 위기 정보 중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발굴대상자의 절반 정도는 1회 발굴되었지만, 나머지 절반은 2회에서 최대 14회까지 반복적으로 발굴되고 있었다. 그리고 1회 발굴대상보다 2회 이상 발굴대상일수록 위기 요인의 중첩성이 높았다. 즉, 반복적으로 발굴된 대상은 더 많은 위기 요인을 안고 있음을 데이터를 통해 재확인할 수 있었다. 반복 발굴 횟수가 많을수록 공적지원 수준도 높았다. 공적지원 중에서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를 중심으로 개별 급여별 차이를 확인해보면, 반복 발굴 위기 대상인 경우 1회 발굴 집단과 비교해 교육을 제외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에 대한 필요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주거급여에서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난 사실도 알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 대상 선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발굴 정보, 가구 및 세대 구성, 발굴모형, 반복 발굴 여부, 인구요인(성별, 연령대, 지역규모) 등의 유의미성을 확인해 본 결과, 양(+)의 유의미한 15개 요인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한부모세대와 장애인 세대의 취약성, 지자체 발굴의 효과 등을 알 수 있었

다. 한편, 긴급복지 대상 선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1인 가구, 중장년 남성 등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2022년에 발굴대상데이터를 통해 중앙 발굴과 지자체 발굴 간 특성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지자체 발굴을 통한 공적지원 비중이 더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2년에 처음으로 시행된 지자체 발굴 성과를 토대로 향후 지역 내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중요해 보인다.

다음으로, 제도 밖 물질적 박탈경험 대상을 분석하기 위해 2015년부터 2021년까지의 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박탈경험의 빈도가 증가할수록 여러 사회적 지표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박탈경험의 빈도에 따라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혜 비율, 균등화 소득에 따른 가구 구분, 그리고 만성질환의 비율, 자살생각의 비율, 우울점수 등의 사회적 지표와 정신건강 지표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박탈경험의 빈도가 증가할수록 의료급여와 주거급여 수혜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저소득층의 비율도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박탈경험의 빈도가 높을수록 만성질환의 비율과 자살생각의 비율, 우울점수가 상승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박탈경험의 빈도가 사회적 지표와 정신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며, 박탈경험의 빈도와 종류, 그리고 정신건강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정부의 발굴 대책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 사망사건을 이해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보도된 35건의 사망사건 내용을 분석하였다. 사망사건에 이르게 된 핵심적인 위기를 중심으로 독박돌봄, 한부모가구, 가계몰락, 과대채무, 만성빈곤, 독거가구, 보호종료(중단)청년 등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발생 연도, 발견(신고)자, 사망원인, 발굴가능성, 급여접근성, 발굴이 가능했을 기관, 정신건강 문제 여부, 고독사 여부 등의 요소에 따라 구분을 해보았다. 분석 결과 발굴가능성으로 구분했을 때 소득·자산기준 등으로 발굴이 되었어도 기초생활보장을 받기 어려운 경우 등 복지 사각지대 대책으로서 한계가 있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대규모 발굴 이전에 공공·복지기관에서 포착된 대상부터라도 더욱 능동적으로 대응했다면 위기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

지했다. 사망사건 이전에 주민센터를 방문한 경험이 있었다. 또 하나 이번 분석 결과 볼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은 복지 사각지대 대응에 있어 돌봄의 중요성이다. 위기 유형별로 구분했던 것과 같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독박돌봄 유형이었다. 또한 현재 금융연체 정보도 위기 정보로 수집이 되고 있지만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연체가 있는 경우 빈곤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기준에서 제외되므로, 예방 목적에서 금융채무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분석을 통한 유의미한 발견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한계도 있다. 본 분석을 위해 활용한 시계열 데이터의 범위와 대상이 광범위하여 대상별 위기 진단에 앞서 실행되어야 할 유형화가 정합적이고 세밀하게 이뤄지기는 어려웠다. 다만,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의 안과 밖, 제도권 경계선상에 존재하는 대상의 특성을 파악해 보려고 시도한 점은 기존 연구와 가장 차별화되어 의미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본 분석 과정에서 업무담당자와 대상자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나 별도의 장으로 담지는 못했다. 연구의 분석 내용이 빅데이터와 방대한 언론보도 사례 등이었으나, 이에 견줘 인터뷰 대상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연구진 내부의 판단이 있었다. 이 내용은 본 분석의 방향을 정하고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었다는 점은 추가하고자 한다.

제2절 복지 사각지대 위기 대상별 정책대응 제안

본 연구는 복지 사각지대 시스템 대상 분석, 전국 복지패널 박탈경험 대상 분석, 복지 사각지대 사망사건 사례 분석 등 전국 단위의 양적 및 질적 분석을 토대로 도출한 주요한 발견을 토대로 다음 5가지 영역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크게 1) 위기 집단, 2) 발굴모형 정교화, 3) 공적 돌봄지원 확대, 4) 예방 차원에서 주목할 위기 정보, 5) 지자체 활용 등으로 구분하여 다음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복지 사각지대 위기 대상은 반복 발굴대상, 주거급여를 받지만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대상, 중소대도시 중장년 남성 1인 가구 등으로,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복지사각지대 시스템을 통해 반복적으로 발굴되는 집단이 전체 발굴대상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이들의 위기 정보 중첩성의 정도가 심하며, 공적지원 등에 대한 필요도가 높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복지패널의 박탈경험 대상 분석을 통해 박탈경험 대상 중 생계급여 미수급자는 주거급여를 받더라도 우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주거급여를 받더라도 생활이 불안정한 경우 오히려 우울에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복지사각지대 시스템 중앙 발굴모형 중 시계열 모형이 있었지만, 반복 발굴대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는 못하였다. 지난 3년간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분석한 결과 맞춤형 기초생활보장급여 선정 효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가장 낮았다. 이에 발굴모형 중 시계열 모형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방안 모색을 향후 고제로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한부모세대와 1인 중장년 남성 중 위기 대상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중요할 수 있다.

셋째, 복지 사각지대 대응에서 돌봄의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돌봄문제 해결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높다. 복지 사각지대 사망사건 언론보도 사례 중 독박돌봄 유형이 가장 두드러지지만, 정작 공적 돌봄을 이용하

경우가 단 1건에 불과하다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돌봄체계가 얼마나 실제 돌봄위기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접근성이 떨어지는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충분하고 적절한 돌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지 사각지대 비극을 상당수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이나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과 같이 돌봄문제에 대한 대응이 복지 사각지대의 상당 부분을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인 만큼 연계와 활용이 중요하다.

넷째, 시스템 발굴대상 분석을 통해 양(+)의 유의미한 영향을 보여주고 승산비가 높았던 위기요인(월세금액기준이하가구여부, 고용보험개별연장급여대상여부, 자살예방관리대상자여부, 기초생활긴급지원수급탈락여부 등), 주목해야 할 위기 정보와 금융부채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돌봄과 관련된 정보가 부족한 만큼 추가 확대를 통해 위기가구 발굴이 필요하다. 특히, 단전, 단수, 단가스 등 요금체납은 이미 위기가 심해진 이후에 최종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지표로 이러한 요금체납 이전에 이미 사망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발굴 체계가 예방에 목적을 둔 것이라면, 위기의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금융부채에 더욱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개인의 부채정보를 일괄적으로 수집하는 것은 역시 사생활과 개인정보 상 문제가 있으므로 소득이나 자산대비 부채가 갑자기 증가하거나 과도해지는 경우 위기 정보로 수집하거나, 이를 관리해야 하는 금융기관을 통해 적극적으로 복지급여 정보뿐 아니라 개인회생 등 개인채무조정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거나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이러한 상대적으론 위기 초기 상황에 개입하여 더 위기가 심화되고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돌봄 관련 정보는 추가적으로 연계가 필요하다. 장애인등록심사 탈락이나 돌봄서비스신청했거나 탈락한 대상 등 정보 연계를 적극 고민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복지 사각지대 예방 차원에서 공공보건의료나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의 역할 강화, 박탈지수를 초기상담에 활용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1. 국내 저서

- 강동욱(2010), “장애인 빈곤 결정요인 연구: 장애유형·정도별 분절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강은나·이민홍(2016), “우리나라 세대별 1인가구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34, pp. 47-56.
- 고숙자·이아영·황남희·송인주·장익현·정영호·안영(2021), “고독사 실태조사 설계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 구인희·백학영(2008),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실태와 영향요인”, 『사회보장연구』, 24(1), pp. 175-204.
- 김미곤·염주희·정희선·최준영·권지성·이은미(2013).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 연구(3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은하·한경훈(2018), “복지 사각지대의 개념 고찰과 빈곤 정책예의 함의”, 2018 한국사회보장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김태완·박지혜(2009),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 규모 및 특성”,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김태완·이주미·정은희·최옥금·최유석·송치호·박은정·김보미(2020), “우리나라 소득분배 진단과 사회보장 재구조화 방안”, 연구보고서 2020-0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노혜진·백아름·권하늬·박정민(2022), “채무조정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과중채무자가 인식하는 사회적 배제의 의미”, 『사회복지연구』, 53(2), 2022 여름. pp. 5-36.
- 박민진·김성아(2022), “1인가구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및 정신건강 문제의 특성과 유형: 서울시 1인가구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42(4), 2022, pp. 127-141.

- 박승곤(2021), “중장년 남성 1인가구의 생활에 관한 사례연구: 사회적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실천과 연구』, 18(1), pp. 187-219.
- 박준범·권병구·김민기·박홍민·오경석(2019),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 특성 및 사회적 문제에 대한 융복합적 해결방안 연구”, 서울시50플러스재단.
- 이봉조·강상원·정자유(2022), “서울시 다차원적 빈곤 측정”, 『사회복지정책』 49(2), pp. 41-70.
- 이정기·김윤영(2016), “비수급 빈곤층의 생존 과정에 관한 근거이론”, 『보건사회연구』, 36(2), pp. 280-310.
- 이한나(2020), “1인 가구의 사회서비스 수요와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 이현주·김성희·신영석·이상영·정경희·오신휘·이민경·전지현·진달래(2013), “복지 사각지대의 생계형 사건·사고 유형과 원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수시보고서(2013-10).
- 장온정(2022), “중년1인가구의 사회적 배제 잠재집단 유형과 영향요인”,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6(3), pp. 1-17.
- 전용호·김요은·김광현·맹성준·김보영(2022), “사회서비스의 정보접근권에 관한 질적 연구”, 『생명연구』, 64, pp. 139-168.
- 최정은(2023), “복지 사각지대 위기 정보 활용과 개선 방안”, [이슈페이퍼 2023-02],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최정은·김윤영·최기정·이인수(2022),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대상자 실태분석을 통한 지원방안 연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함영진·이현주·어유경·김가희·박성준·조용찬·이영글·문용필·오민수(2023), “복지 전달체계 혁신을 위한 대안적 고찰- 취약계층 발굴정책 개선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수시) 2023-0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국외 저서

- Gordon, D., Levitas, R., Pantazis, C., Patsios, D., Payne, S., Townsend, P., Adelman, L., Ashworth, K., Middleton, S., Bradshaw, J. & Williams, J.(2000),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in Britain*, Joseph Rowntree Foundation.
- Hynes, K., and Clarkberg, M.(2005), “Women’s Employment Patterns during Early Parenthood: A Group-Based Trajectory 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7(1): pp. 222-239.
- Jones, B. L., Nagin, D. S., & Roeder, K.(2001), “A SAS Procedure Based on Mixture Models for Estimating Developmental Trajectories”,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29(3), pp. 374-393.
- Nagin, D. S. (2014), “Group-Based Trajectory Modeling: An Overview”, *Annals of Nutrition and Metabolism*, 65, pp. 205-210.
- Nagin, D. S., Jones, B. L., Passos, V. L., & Tremblay, R. E. (2018), “Group-based multi-trajectory modeling”, *Statistical methods in medical research*, 27(7), pp. 2015-2023.
- Townsend, P. (1987), “Deprivation”. *Journal of Social Policy*, 16(2), pp. 125-146.
- Townsend, P.(1979), *Poverty in the United Kingdom: A survey of household resources and standards of living*, UK: Penguin.

3. 기타

경기신문(2023). “군포 한 빌라서 모자 숨진 채 발견…경제적 어려움에 극단적 선택 추정”, 2023.6.26.

경향신문(2021), “‘돌봄 사각지대’ 1인 가구, 6만명 육박”, 2021.12.24.

경향신문(2022), “‘세 모녀 사망사건’은 고립사…화성시는 찾지 못했고 수원시는 존재를 몰랐다”, 2022.8.23.

경향신문(2023), “복지 ‘빈틈’ 속에서 또…전주서 40대 여성 사망”, 2023.9.11.

경향신문(2023), “전주 40대 여성처럼 반복 발굴된 ‘위기가구’ 358만명…누적 위기가구 관리지침 없어”, 2023.9.14.

노컷뉴스(2022), “벼랑 끝 ‘수원 세 모녀’…“빛쟁이 피해 차에서 잠도””, 2022.8.22.

동아일보(2023), “빛 3억 떠안은 광주 모녀, 관리비-장례비 840만원 남기고 투신”, 2023.10.17.

보건복지부(2022a),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2.12.14.

보건복지부(2022b), “수원 세 모녀 사건 계기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 전반 점검”, 보도자료, 2022.8.23.

보건복지부(2023), “위기 정보 44종으로 확대, 복지사각지대 발굴 촘촘해진다”, 2023.4.24.

한겨레(2022), “수원 세 모녀 사건, ‘사각지대 발굴’의 문제 아니다”, 2022.8.25.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유형별 위기 진단과 사례 연구

발행일 : 2024. 9.

저자 : 최정은·김보영·김윤영·이인수

발행인 : 김현준

발행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주소 : (04933) 서울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전화 : 02) 6360-6114

홈페이지 : <https://www.ssis.or.kr>

인쇄 : 공간기획

정가 : 비매품

ISBN 979-11-86408-77-3

* 잘못된 책은 바꿔 드립니다.

